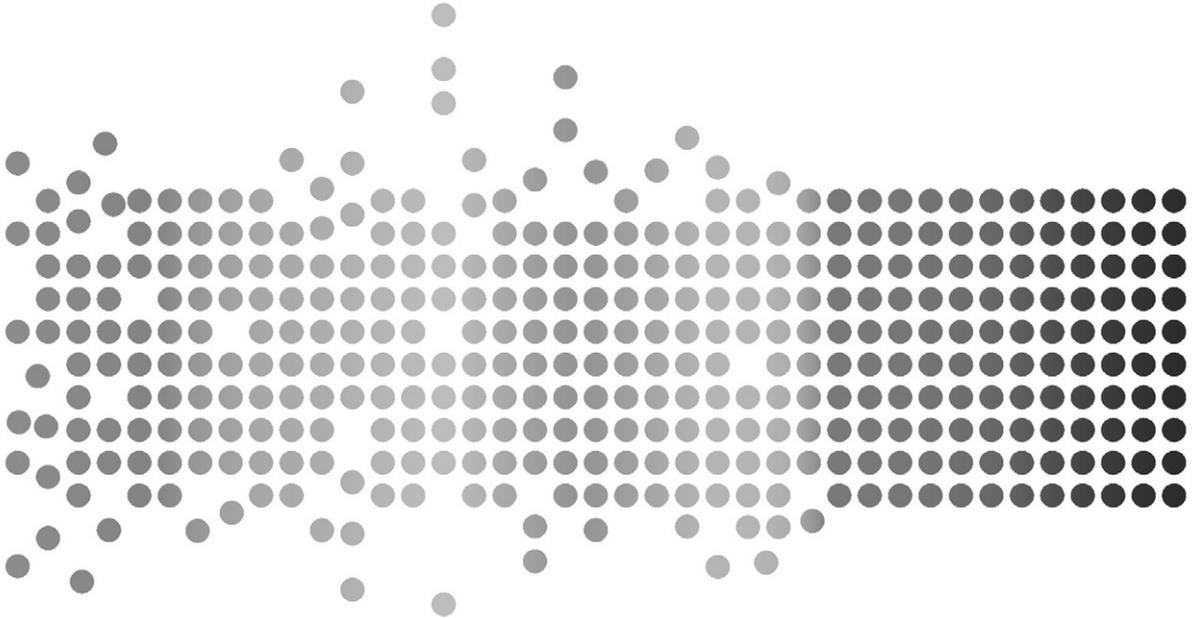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Estimation of the Cost of Children and Policy Implications

신윤정 · 김지연



연구보고서 2010-30-8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발행일 2010년 12월
저자 신윤정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ISBN 978-89-8187-706-4 93330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아동 양육에 소요되는 양육비 지원 정책은 과거 취약 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주로 논의됐으나 최근 저출산 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적인 가정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실로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 부담은 상당하며 자녀를 출산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동이 미래 사회의 생산 동력이며 사회 보장 부담을 짊어져야 할 주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공공재적 특성이 분명히 있으며 이러한 공공재적 특성은 아동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정당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 양육비 지원에 대한 정책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 규모도 매우 작은 상황이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이며 저출산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한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자녀 양육비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가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 양육에 드는 비용을 파악하는 작업은 실로 어려운 작업으로서 다양한 추계 방법을 이용하여 양육비용을 파악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아동 양육비 추계 방법론의 장단점을 고찰하여 가장 합리적인 추계 방법론에 따라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였다. 자녀 양육비용을 다양한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인구 집단별로 추계하였으며 또한 자녀 양육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항목별 양육비

가 차지하는 비중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계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게 하여 정부가 자녀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자료로써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자녀 양육비 지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과도한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자녀 양육비 지출 문제에 대해 전 사회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신윤정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김지연 연구원의 공동 연구로 수행되었다. 본 보고서 검독을 맡아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제공해 주신 원종욱 연구위원과 박세경 연구위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2
제2장 저출산에 대응한 양육비 지원 정책의 필요성	17
1.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의 목적	17
2.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주요한 이슈	21
가. 보편적인 지원과 대상별 지원의 조화	22
나. 육아 휴직, 현금 급여, 보육 정책의 조화	24
다.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조합	25
라. 투자로서의 가족 지원 정책	28
마. 요약 및 시사점	30
3. 가족 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32
가. 거시적인 국가 데이터 비교 연구 결과	32
나. 경제적인 의사 결정으로서의 출산	34
다. 출산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의 이슈	37
라. 주요 선행 연구 결과	39
마. 종합 및 시사점	43

제3장 국내외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47

- 1. 외국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47
 - 가. 유럽 국가의 양육 지원 정책 유형 47
 - 나. EU 국가의 아동 양육 지원 현황 51
 - 다. OECD 국가의 아동 양육 지원 지원 현황 56
- 2. 우리나라 아동 양육 지원 정책 61
 - 가. 국내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61
 - 나. 국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평가 64

제4장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론 71

- 1. 자녀 양육비의 개념 및 추계 관련 이슈 71
 - 가. 자녀 양육비의 개념 71
 - 나.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론 이슈 73
- 2. 자녀 양육비용 추계 방법론 78
 - 가. 소비자 조사에 의한 방법론 78
 - 나. 예산 분석 방법론 79
 - 다. 두당 비용 접근법 80
 - 라. USDA 자녀 양육비용 추계 방법론 82
 - 마. 한계 비용 추계 방법론 85
- 3. 자녀 양육비용 추계 사례 88
 - 가. 국내 사례 88
 - 나. 한계 비용 추계 방법론 적용 연구 결과 91
 - 다. EU 국가의 사례 95
- 4. 자녀 양육비용 추계를 둘러싼 쟁점들 100

제5장 자녀 1인당 양육비 추계 결과	107
1. 추계 방법 개요	107
가. 활용 자료	109
나. 양육비 추계 방법론	111
다. 추계 결과: 두 당 비용 추계 방식	114
라. 추계 결과: 지출 항목별 자녀 양육비 추계 방식	126
마. 추계 결과: USDA 측정 방법 적용	146
 제6장 결론 및 정책 방안	 159
1. 연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159
2. 저출산에 대응한 양육 지원 정책의 방향	163
 참고문헌	 169

표 목차

〈표 3- 1〉 ESSPROSS의 가족·아동 급여 지원 구분	49
〈표 3- 2〉 유럽국가에서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의 지출 규모 (GDP대비): 2005년	52
〈표 3- 3〉 유럽 국가의 보육 서비스 지원 현황	54
〈표 3- 4〉 유럽 국가에서 공공 보육 서비스 이용률	55
〈표 3- 5〉 OECD 국가의 가족 현금 급여 현황(2007)	58
〈표 4- 1〉 총 지출에서 자녀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추정 결과 (Betson, 1990)	93
〈표 4- 2〉 미국의 연간 1인당 자녀 양육비 추정 결과 (Betson, 1990)	94
〈표 4- 3〉 호주의 주당 1인당 자녀 양육비 추정 결과 (Harding과 Percival, 1999)	95
〈표 5- 1〉 두 당 비용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전체	116
〈표 5- 2〉 두 당 비용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소득수준별(고소득층)	119
〈표 5- 3〉 두 당 비용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소득수준별(중산층)	119
〈표 5- 4〉 두 당 비용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소득수준별(저소득층)	120
〈표 5- 5〉 소득 수준별 자녀 양육비 추계: 중위 소득 기준	121
〈표 5- 6〉 두 당 비용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지역별(도시)	122

〈표 5- 7〉 두 당 비용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지역별(농촌)	123
〈표 5- 8〉 두 당 비용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모의 학력(대졸)	125
〈표 5- 9〉 두 당 비용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모의 학력(고졸)	125
〈표 5-10〉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전체	· 128
〈표 5-11〉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전체(자녀 지출)	129
〈표 5-12〉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전체(공통지출)	129
〈표 5-13〉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소득수준별(고소득층)	131
〈표 5-14〉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소득수준별(중산층)	131
〈표 5-15〉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소득수준별(저소득층)	132
〈표 5-16〉 소득 수준별 자녀 양육비 추계: 중위 소득 기준133
〈표 5-17〉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결과: 자녀 특수비용(고소득층)	134
〈표 5-18〉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자녀 특수 비용(중산층)	135
〈표 5-19〉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자녀 특수 비용(저소득층)	135

〈표 5-20〉 지출 항목별 추계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결과: 가구 공통비용(고소득층)	136
〈표 5-21〉 지출 항목별 추계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결과: 가구 공통비용(중산층)	136
〈표 5-22〉 지출 항목별 추계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결과: 가구 공통비용(저소득층)	137
〈표 5-23〉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지역별(도시)	138
〈표 5-24〉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지역별(농촌)	139
〈표 5-25〉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자녀 특수비용(도시)	140
〈표 5-26〉 지출 항목별 추계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결과: 자녀 특수비용(농촌)	140
〈표 5-27〉 지출 항목별 추계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결과: 가구 공통비용(도시)	141
〈표 5-28〉 지출 항목별 추계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결과: 가구 공통비용(농촌)	141
〈표 5-29〉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모의 학력(대졸)	143
〈표 5-30〉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모의 학력(고졸)	143
〈표 5-31〉 지출항목별 추계방식에 따른 자녀양육비 추계 결과: 자녀 특수 비용(대졸)	144

〈표 5-32〉 지출항목별 추계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결과: 자녀 특수비용(고졸)	145
〈표 5-33〉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공통비용(대졸)	145
〈표 5-34〉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공통비용(고졸)	146
〈표 5-35〉 USDA 추계 방법을 적용한 1인당 자녀 양육비용 추계액: 소득 3분위 구분	148
〈표 5-36〉 USDA추계방법을 적용한 1인당 자녀양육비용 추계액: 중위소득기준	149
〈표 5-37〉 중산층 가정의 자녀 연령별 양육비 항목별 분포: 두 자녀 4인 가구	150

그림 목차

[그림 3-1] 유럽 국가의 가족 아동 급여 GDP 비중: 2005년	53
[그림 3-2] 유럽 국가의 가족 아동 급여 총 사회지출 비중: 2005년 ..	53
[그림 3-3] GDP에서 보육 서비스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2005년 ..	54
[그림 3-4] GDP에서 현금급여가 차지하는 비중: 2005년	56
[그림 3-5]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재정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005)	65
[그림 3-6]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5)	65

[그림 4-1] 호주의 주당 1인당 자녀 양육비 추정 결과 비교 (Harding과 Percival, 1999)	95
[그림 5-1] USDA 추계 방법을 적용한 1인당 자녀 양육비용 추계액: 소득 3분위 구분	148
[그림 5-2] USDA 추계방법을 적용한 1인당 자녀 양육비용 추계액: 중위소득 기준 구분	149
[그림 5-3] 자녀 1인당 양육비 추계액 지출 항목별 비중: 중산층 2자녀 가정	151
[그림 5-4]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출항목별 추계액 소득수준별 비교: 중산층 2자녀 가정	152
[그림 5-5] 자녀 연령별 양육비 지출 항목별 비중: 중산층 2자녀 가구	153
[그림 5-5] 지역별 자녀 양육비 지출액 항목별 비교: 막내 6~8세 중산층 2자녀 가구	154
[그림 5-7] 지역별 자녀 양육비 지출 비중 항목별 비교: 막내 6~8세 중산층 2자녀 가구	154
[그림 5-8] 모의 학력별 자녀 양육비 지출액 항목별 비교: 막내 6~8세 중산층 2자녀 가구	155
[그림 5-9] 모의 학력별 자녀양육비 지출비중 항목별 비교: 막내 6~8세 중산층 2자녀 가구	155

A dark, irregular, ink-blot-like graphic with the word "Abstract" written in a black, handwritten-style font in the center.

Abstract

The policy which aims to reduce the cost of children is one of the important family policies especially in Korea where has very low fertility rate. In order to suggest a policy for reducing cost of raising children, this study estimates the cost of children and contributes to initiate policy to support families which rear children.

This paper reviews various methods estimating cost of children and suggests the best methods would be the per capita methods. Based on the per capita method this study also uses per capita methods by expenditure items, and replicates the methods of United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utilizing Household Expenditure data released from Statistics Korea in 2009.

Based on the per capita method, monthly average expenditure per child is estimated to be 755,972 won for one-child family, 658,607 won for two-children family, and 546,309 won for three-children family. Using per capita method by expenditure items, it is estimated that monthly average expenditure per child is 950,677 won for one-child family, 804,092 won for two-children family, and 635,974 won for three-children family.

The cost of children rise as the age of the youngest child increases. When the child is educated in high school, the cost is the highest. Among the expenditure items, the educational expenditure has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 household spending and the

proportion increases when the age of the youngest increases.

This study reveals that the economic scale of expenditure for child exists and the additional cost for rearing children decreases as the number of children increases. The economy of scale is larger for low-income families, the families residing in rural areas and those whose mother has a bachelor degree.

High-income families spend more on their children compared to low-income family. Families who live in urban areas spend more on their children compared to those in rural areas. And if the mother has bachelor degree, the family spend more on their children compared to others who do not.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expenditure for children is significantly large in Korea. The burden of child cost may be a serious obstacle to overcome low fertility. The policy to reduce burden of child cost should be continued and should have a priority as an investment for future aging society.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First, it is needed to reach a consensus on what is a relevant level of supports for children within the society. Second, the policy to reduce cost of raising children should be conducted as a integrated family policy including allowances, childcare services, and parental leave. Third, the policy should be designed to have universal supports for families rearing children and targeted at needed families simultaneously.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정책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도래함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정부가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 가정에서 자녀에게 지출하는 자녀 양육비 지원 규모를 추계함으로써 정부가 효과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는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론을 검토하여 국내 데이터와 선행 연구 등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자료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자녀 양육비 방법론을 이용하여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추계 함.
- 자녀 양육에 지출되는 비용을 자녀 연령과 가족원 수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소득 수준, 지역, 모의 학력과 같은 경제·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추계하여 제시함.
- 본 연구가 제시하는 양육비용 추계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정부가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 자료 및 출산율 회복을 위한 양육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2. 주요 연구 내용

-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1인당 추계 방식에 근거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되 1인당 추계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함.
 - 가장 기본적인 두 당 비용 접근법을 이용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고, 지출 항목별 자녀 양육비용 추계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한 후, 미국 USDA의 자녀 양육비용 추계방법론을 적용하여 양육비용을 추계함.
 - 이용 자료는 통계청이 발간한 2009년도 “가계동향조사”의 연간 자료를 활용함.
- 한 달 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출 추계액은 두 당 비용 접근법을 적용한 결과 한 자녀 가계 월 755,972원, 두 자녀 가계 월 658,607원, 세 자녀 가계 월 546,309원, 지출 항목별 추계 방법을 이용한 결과 한 자녀 가계 월 950,677원, 두 자녀 가계 월 804,092원, 세 자녀 가계 월 635,974원으로 산출됨.
- 자녀 양육비용 추계액은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가장 높은 양육비 추계액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비 지출이 자녀 양육비용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에 대한 지출 비중은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커지는 양상을 보임.
- 자녀 양육비 지출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 1명을 추가적으로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저소득 계층일수록 규모의 경제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보다 농촌에 거주할 때, 모가 대학교 졸업자일 경우일 때보다 고등학교 졸업자일 때 규모의 경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자녀 양육비용에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계층의 경우 자녀 각각에 대해 특수하게 지출하는 비용보다 공동으로 지출하는 비중이 더 많다는 사실을 지적함.
-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을 나타냈으며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양육비 차이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간의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가 고등학교 학령기에 접어든 경우 고소득과 중산층 자녀 양육비 차이는 좁혀지는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 자녀 양육비 차이는 오히려 더 격차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가계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가계 보다 더 높은 양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와 농촌간의 양육비 차이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모의 학력별로 양육비용을 추계한 결과 모가 대학교 졸업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 보다 더 높은 양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이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3. 결론

-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자녀 양육에 대한 지출이 적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자녀 양육비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녀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사회적인 투자 정책으로서 높은 우선순위를 가져야 할 것임.
-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저출산에 대응한 우리나라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정부의 “적절한 양육비 보상 수준”에 대한 기준 설정 및 이에 대한 사

회적인 합의 도출이 필요함.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함.

○ 보편적인 수준에서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여 누구나 노력하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여 출발선상에서 동일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공정한 사회” 구축이 필요.

□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은 현금 지원, 보육 서비스 지원, 육아 휴직의 전반적인 가족 지원 정책의 틀 안에서 최적의 정책 조합을 통하여 정책간의 상호 보완적이고 대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조합적인 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에 강조점을 두고 노동시장 이분화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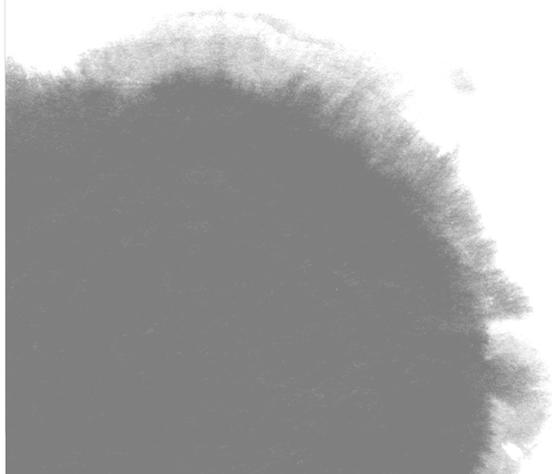
□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적인 가정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과 함께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타겟 집단별 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수평적 형평성과 함께 수직적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 추계 결과는 이용 자료와 추계 방법론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 따라서 추계 방법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더욱 발전된 추계 방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더욱 정확한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려는 노력이 필요.

□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는 기회비용의 규모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추계함으로써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위한 유용한 정책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요청됨.

01

서론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거 1960년대에 평균적으로 가임 여성 1명당 4명의 출산율을 보이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시기를 거치면서 점차 하락하였다. 1983년 인구 대체 수준 2.1명으로 하락한 이후에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1년부터 초 저출산 국가 수준인 1.3명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2005년에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추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08명으로 하락하였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5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사회가 고도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다양한 유형의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이에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심화는 우리 사회보다 먼저 산업화를 겪은 유럽 사회에서 1960년대부터 관찰됐다.

저출산 현상이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수반되는 사회 현상이기에 저출산이 야기된 원인은 국가마다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여성 경제 활동의 증가에도 전통적인 영역에서의 양육과 가사에서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변화되지 않았다.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개별 가정에 여전히 부과되고 있는 양상은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 각국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양육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려는 노력을 추구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정책은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로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기 이전에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자녀를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취약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면서 정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취약 계층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를 돌보는 일반적인 가정에까지 지원하는 보편적인 형태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면 정책은 특히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자녀 교육에 높은 열망을 하고 있으며 교육이 부의 축적과 사회적 신분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기능하여 왔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와 교육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여 개인의 노력과 함께 얼마나 많은 재원을 교육에 투자하느냐가 교육의 성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의 과도한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은 상당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부담할 것이며, 보편적 지원과 특수 집단에 대한 지원 그리고 어느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할 것이며 또 현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양육비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우리나라 가정에서 자녀에게 지출하는 양육비 지원 규모를 추계함으로써 정부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마련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자녀 양육에 지출되는 비용을 자녀 나이와 가족원 수와 같은 가계의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 수준, 지역, 모의

학력과 같은 경제·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라 추계함으로써 정부가 각 인구집단 특성별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출 추계는 주로 학계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 정부가 연구 사업으로 매년 양육비 추계를 시행하여 발표하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자녀 양육비 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단순한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고, 다소 강한 가정 이 있는 추계 방법을 이용하여 추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계 소비 지출과 같은 자료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함께 지출한 비용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가구원 개개인이 얼마를 지출했느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가계 소비 특성상 가구원 개인에게 특수하게 지출하는 비용보다 가구원 전체를 위해 지출하는 항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자녀 양육비 추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비 같은 부분은 특정 자녀에게 얼마를 지출하였는가를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식료품 및 가정용품 등은 가구원 전체를 위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광열비, 전기료, 자동차 연료비 등은 특정 가구원에게 얼마만큼 지출하였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계소비의 특성 때문에 자녀 양육비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각 추계 방법이 가지고 있는 가정에 따라 다양한 장단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는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론을 검토하여 국내 데이터와 선행 연구 등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론을 고찰한다. 국내에서도 최근 자녀 양육비를 추계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각 연구가 선택한 추계 방법론에 따라 추계된 자녀 양육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 둔다.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론에 따라 같은 국가에서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액수의 자녀 양육비가 추계될 수 있다는 것을 외국의 많은 연구에서도 보여 준 바 있다.

이러한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양육비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

해 논의 한다. 본 연구는 자녀 양육에 지출되는 비용 추계액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는데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앞으로 양육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지침으로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2장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모색하기 위해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목적과 주요 이슈를 고찰한다.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둘러싼 주요 이슈를 보편적 지원과 대상별 지원, 육아휴직·현금급여·보육정책의 조화,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 투자로서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 측면에서 검토한다.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거시적인 국가 데이터를 비교한 선행 연구 결과를 고찰하며, 정책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서의 방법론적 이슈들 및 주요 선행 연구 결과들을 고찰한다.

3장에서는 국내외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현황을 검토한다. 외국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유럽 국가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유형을 정리하고 EU 국가와 OECD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현황을 고찰한다. 우리나라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현황과 이제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정책을 평가한다.

4장에서는 자녀 양육비용 추계 방법론을 고찰한다. 자녀 양육비의 개념과 자녀 양육비 추계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검토한다. 자녀 양육비용 추계 방법론으로서 소비자 조사에 의한 방법론, 예산 분석 방법론, 두당 비용 접근법, USDA 자녀 양육비용 추계 방법론, 한계 비용 추계 방법론을 검토한다. 자녀 양육비 추계 사례로서 국내에서 수행된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를 검토하고 특히 한계 비용 추계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 결과들을 비교 한

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녀 양육비용 추계를 둘러싼 쟁점 사항을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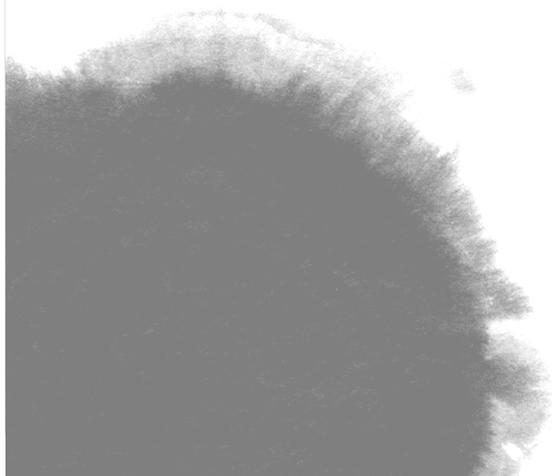
5장에서는 본 연구가 적용할 자녀 양육비용 추계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추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1인당 추계 방식에 근거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되 1인당 추계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한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1인당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론인 두당 비용 접근법을 이용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고, 지출 항목별 자녀 양육비용 추계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한다. 미국 USDA가 매년 발표하는 자녀 양육비용 추계 방법론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계한다. 이러한 자녀 양육비용 추계는 통계청이 발간한 2009년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다. 자녀 양육비용 추계 결과는 자녀 연령별, 자녀수별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가계의 소득수준, 지역, 모의 학력 수준과 같은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다.

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을 모색한 후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한다.



02

저출산에 대응한 양육비 지원 정책의 필요성





제2장 저출산에 대응한 양육비 지원 정책의 필요성

1.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의 목적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는 방법론 중의 하나인 한계 비용 측정 방법에서는 자녀 양육비용을 각 가계가 자녀를 양육함에 따라 야기되는 생활수준의 감소로서 가정하고 있다. 실제로 가정에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감소되는 생활수준의 정도는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 자녀 양육비용은 전체 가계 예산에서 약 2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자녀 양육비용은 가계의 소득 수준, 자녀 연령,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좌우될 뿐만 아니라 지출을 둘러싼 가구원 사이의 “협상 과정(bargaining process)”에 따라서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추계하는 방법론에 따라 추계된 자녀 양육비용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과소 추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간 비용” 이외에도 노동 시장에서의 경력 단절, 부모의 직장 경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간접비용까지 고려하는 경우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녀 양육비용은 직접 비용과 간접비용 등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비 지출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이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부모의 양육비용을 절감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을 고안할 수 있다.

자녀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가 없는 가정 사이의 생활수준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보상한다. 둘째, 가족과 자녀의 빈곤을 감소한다. 셋째, 자녀들의 후생 수준, 인지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한다. 넷째, 부모로 하여금 낳고 싶은 수만큼의 자녀를 낳도록 하여 출산율을 제고시킨다. 다섯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키고 일과 가정 사이의 양립 환경을 조성한다. 여섯째, 특히 자녀 양육과 노동 시장에서의 양성 평등을 강화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가족에 대한 지원은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뿐만이 아닌 부모로 하여금 일과 자녀 양육을 함께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한 상기의 목적들은 상호 독립적이 아니라 대립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각 국가마다 아동 양육비 지원 정책의 목적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가 다르며 가족 지원 정책의 효과성은 이러한 정책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다양한 가족 정책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즉, 전반적인 정책의 효과성은 서로 다른 유형의 가족 지원 정책들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험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동시에 얻어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출산율, 높은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 낮은 빈곤율은 가족 지원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고, 아동 발달 시기 동안 지속적으로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수준의 범위가 넓은 국가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빈곤율에서 좋은 성과들은 자녀 출산 후에 육아 휴직 제도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으며 현금 지원 정책,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방과 후 보육 서비스, 직장에서의 유연한 근로시간이 가정의 생활 주기에 적합하게 잘 구성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한편 이러한 가족 지원 정책들이 각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형은 각 국가의 정책

적인 지향성과 정책 체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자녀를 가진 부모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린 아동들이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것은 어린 아동들로부터 노인들에 대한 세대 간의 이전을 통해 긍정적인 외부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연금제도를 들 수 있다. 아동들의 인적 자본과 사회 자본에 대해 투자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외부성은 이러한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 및 성숙한 사회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가족 및 아동 지원에 대한 혜택이 전체 국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국민 모두가 아동을 위해 기꺼이 사회적으로 분담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구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논리를 통해 아동은 공공재로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으며 아동 양육에 대한 비용도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가족 지원 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난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과제는 서로 다른 유형의 정책들 간의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책간의 균형 문제는 널리 논쟁이 되어온 이슈로서 이에 대한 많은 질문들에 대해 아직 해답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이슈는 정책의 효과성(effectiveness)과 정책의 효율성(efficiency)간의 문제이다.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의 논의는 정책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그들에게 적당한 권리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개개인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얼마나 누리느냐에 달려 있다.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가족 지원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얼마만큼 가져오느냐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효율적인 조합에 대한 또 다른 이슈는 가족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이 표방하는 목적들 간의 조화를 어떻게 잘 이루는가이다. 중산층까지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정책은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형평성이나 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고안된 경제적 지원

정책은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정부에 의한 양육비 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정책의 목적이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전액 보상하고 자녀를 낳은 후에도 삶의 질이 하락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라면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계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의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에 의한 지원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양육비 지원을 해야 타당할 것이다.

정책의 역진성에 대한 논의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 소득 공제액이 커진다는 논의와 비슷한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다. 자녀 소득 공제 정책은 소득 수준에 따른 수직적 형평성보다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가 없는 가정 모두 그들의 조세 부담 능력에 따라 조세를 지불한다는 “수평적 형평성”의 논리에 근거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가족 지원 정책의 목적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가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며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 지원 정책을 둘러싼 또 다른 이슈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구상함에 있어 야기되는 이슈이다. 정책을 구상하는 것은 다소 규범적인 논쟁으로서 비용 보상에 대한 이슈가 다른 정책 목적과 어떻게 잘 융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를 들면 가족 지원 정책이 표방하고 있는 “수평적인 형평성”이 전반적인 현금 급여 정책이 가지고 있는 “수직적 형평성”의 목적과 얼마나 잘 조합되느냐를 들 수 있다.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간의 조화는 가족 지원 정책이 소득 재분배의 과정으로서 얼마나 기능을 잘하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자녀 양육비에 대한 보상이 주로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양육비용을 보상한다는 정책의 목적을 제한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 받아들일 만한 적합한 보상 수준으로서 양육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가족 지원 정책에 있어서 받아들일 만한

양육비 보상 수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Albouy와 Roth(2003)과 Le Minez와 Roth(2007)은 “평균적인 사회적 조건 하에서의 자녀 양육비”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추가적으로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중위 소득 수준 가정에서 지출하고 있는 양육비용을 의미한다. 동 개념에 따라 표준화된 자녀 양육비용은 프랑스의 경우 중산층 이상 가족에게 지원되는 소득 공제와 현금 지원을 가지고 완전히 보상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 지원 정책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는 아동 양육비 지원 정책이 어떻게 빈곤 감소 정책의 목적과 결합될 수 있는 가이며 특히 아동 빈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OECD 국가에서 아동 빈곤율은 정책적인 지원 없이는 16.3%로 나타났으며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9.2%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hiteford & Adema, 2007). OECD 국가 사례를 보면 아동 빈곤율이 매우 낮은 국가(5% 미만)에서 실업률도 매우 낮고 효과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이 성공적인 탈 빈곤 전략으로서 근로 의욕도 함께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주요한 이슈

앞서 언급한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 논의에 따라 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요한 이슈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가족 수당이 일을 하면서 받는 현금 지원 정책과 얼마나 조화롭게 추진되고 있는가,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특별한 인구 집단 혹은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셋째, 현금 지원 정책과 서비스 제공 정책이 얼마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이다. 이러한 세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서 다음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한다.

가. 보편적인 지원과 대상별 지원의 조화

가족지원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대상별 지원과 보편적 지원 중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소득 불평성과 빈곤 감소를 위해서는 대상별 접근이 효율적이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한다는 가족 지원 정책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이 더 타당할 수 있다.

대상별 가족 지원 정책과 보편적 가족 지원 정책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적어도 두 가지 논의가 대상별 가족 지원 정책을 옹호하는데 적용되고 있다. 첫 번째 주장은 “공정함(fairness)”과 관련된 것으로서 가난한 계층에게 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모든 집단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보다 공정하는 논리이다. 보편적인 지원이 지원을 절실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급여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부 예산의 제약도 정부 지원의 혜택이나 급여가 특별한 계층을 대상으로만 배타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어진 정부의 예산 한계 내에서 보편적인 지원 정책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원해 주는 정책일 것이다. 이와 다르게 대상별 지원 정책은 제한된 계층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최근 OECD 국가들의 경향을 보면 사회 정책 내에서 대상별 지원 정책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각 국가의 예산 압박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조사에 따른 대상별 급여 지원 정책은 경제 불황기에서 가장 먼저 지원이 중단되는 정책이라고 보고되고 있다(Nelson, 2007).

이러한 대상별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대상별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한계점은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선별해 내고 이러한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데

수반되는 행정 비용이 과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Mitchell, 1997). Smolensky et al.(1995)은 대상별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수반되는 추가적인 비용이 정책 지원의 효과성을 상쇄할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대상별 지원 정책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사회 구성원을 재정적 부담을 지는 사람과 정책의 수혜를 받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사회를 분절하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 조사에 따른 급여 지원 정책을 확대시키는 것은 사회 보호의 이중화를 야기하여 급여를 받는 사람과 급여를 위해 조세를 지불하는 사람 사이의 단절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보편적 지원 정책은 더 많은 정치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상별 지원 정책의 세 번째 한계는 정책을 대상화하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Currie, 2004). 급여를 지원 받는 사람들은 지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으며 급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산 조사에 근거하여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정책의 혜택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큰 비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치러야 할 비용이 기대하고 있는 혜택보다 크다면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비용 중의 하나가 사회 보조 혹은 대상별 지원 정책을 받는 사람들에게 씌워지는 “오명(stigma)”이다. 사회적 지원 정책의 수급에 따르는 오명은 심리적인 비용으로서 급여나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이성적인 행위를 막는다. 특정 개인이 급여를 받을 만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거래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거래 비용이 개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제공받는데 제한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상별 지원 정책이 보편적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Goodin, 1987; Palme & Korpi, 1998; Gilbert, 2001; Math, 2003). 거래 비용은 저소득층 집단에게서 가장 높으며 수혜 대상자가 어린이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도 높을

수 있다. 거래 비용의 문제로 인해 수혜 대상자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경우 현금 보다는 현물로서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Currie & Gahvari, 2008). 이러한 거래 비용에는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대상자를 찾는 데 소요되는 관리 비용도 포함된다.

나. 육아 휴직, 현금 급여, 보육 정책의 조화

자녀 출산 후 휴직 정책, 현금 혹은 현물 급여, 보육 서비스 제공간의 최적의 조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최적의 정책 조합은 가족 지원 정책의 서로 다른 목표들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자녀의 건전한 성장, 일과 생활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사회의 형평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 출산 후에 육아 휴직 기간을 부모에게 보장하는 것은 자녀 발달, 모성 건강 문제의 감소, 자녀의 인지적인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여성 노동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갓난아이 일 때 여성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자녀의 인지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들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데 투자한 시간의 질에 달려 있으며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대신해 주는 시간의 가치에 크게 좌우된다고 알려져 있다. 여성 고용은 특히 한부모 가정과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에게 가계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은 이러한 논의를 반박하고 있으며 육아 휴직 기간을 제한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영아를 집합적인 보육시설에서 양육하는 것과 자녀 발달 시기에 부모가 직접 돌보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온 주제이다. 양질의 정규 보육 서비스를 유치원에 다니기 전에 제공하는 것은 읽기 능력과 비인지적인 발달을 돕는데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Heckman과 Masterov(2007)는 영아 시기의 투자가 “생산성의 기초”를 이룬다고 강조하면서 초기 투자는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에게서 효과

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은 형평성과 효율성의 교환이 없는 공공정책이며 사회의 불평등성을 감소시키며 사회 전반에 걸친 생산성 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가 어린 나이부터 보육시설에 다니는 것은 노동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증가시키고 빈곤에 처할 위험을 낮춘다고 나타났다. 어떤 경우든 질 좋은 보육 서비스 이용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노동 시장에서의 결과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만 2세 이전 영아의 시설 보육이 모든 아동에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수행 능력이나 비인지적인 발달 측면에서의 아동 발달이 아무리 질 좋은 보육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과 비교하여 최소한 더 나쁘지 않은 결과만을 보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육아 휴직 기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육아 휴직이 부모의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자녀로 인해 야기된 경력 단절과 긴 육아 휴직 기간이 임금 상승과 직업에서의 경력을 쌓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 육아 휴직 사용은 성 중립적이지 않아 여성이 주된 휴가 사용자로 나타나고 있다. 양성 평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육아 휴직 일수가 짧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정도 육아 휴직 기간이 짧아야 하느냐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진 바는 없지만 연구 결과들은 일 년 기간의 육아 휴직이 임금 수준이나 임금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들어 양성 평등에 대한 논의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육아 휴직 사용을 증가시키고 부부간의 육아 휴직을 동일하게 공유하도록 지지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조합

효율적인 정책 조합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 중요한 이슈는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야 하는가이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 가족

지원 정책의 확장은 주로 현금 급여의 증가로 인해 이루어졌다. 현금 급여 지원 정책이 확장된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분석가들이 현물 급여 지원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꺼려하였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Currie와 Gahvari(2008)은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현물 급여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현금 급여가 수혜자들의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차원에서 현금 급여 지원 정책을 더 지지한다”라고 언급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 급여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많은 문헌에서 지적되고 있다.

양질의 보육시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보육 서비스의 개발과 더불어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Lewis *et al.*(2008)은 많은 유럽 국가에서 부모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을 통해 보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육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은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다양한 선택을 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육 시설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은 보육 서비스 제공자들로 하여금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현금 지원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물 급여를 통한 보육 시설 서비스 지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인해 지지되고 있다.

첫째, 현물 급여를 통한 보육 서비스 지원은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양육 지원 서비스가 아동에게 실제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상당히 동질적일 수 있어 사회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그리고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정부 정책의 역할에 근거하고 있다. Currie & Gahvari(2008)는 보육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외부 효과에 근거하여 현물 급여 형태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지지하였다. 가부장적인 정부 정책의 논거에서는 프로그램의 의도된 수혜 대상자는 아동인데 급여가 부모에게 지급되는 경우 “특별한 힘”이 원리가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특별한 힘”의 논리에 따라 부모는 의사 결정을 할 때 자녀의 효용을 온전하게 고려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최적 수준으로 지출하지 않는 것은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지출로 이어지며 결국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유발 할 수 있다.

둘째, 현물 급여 형태로의 보육 서비스 지원은 불완전한 정보의 존재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현금 급여 지원이 특히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만 지원되었을 경우 비효율성을 유발할 경향이 크다. 보편적인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지만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비용이 지불된다는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반면에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간과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금 급여는 일단 지원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경향이 있어 현금 급여 지원 정책이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간주되는 문제를 결과케 하고 있다.

현물 급여 지원은 “자기 대상화(self-targeting)”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구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자기 대상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의도된 사람들에게만 어필할 수 있는 현물 급여를 공급해야만 한다. 지원되는 현물의 특성 상 이러한 구분을 확연하게 할 수 있는 현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현물도 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현물이 시장에서 제공될 때에는 관심이 없다가 정부에 의해 지원될 때만 소비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현물을 반드시 지원 받아야 하는 사람과 지원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을 실제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자기 대상화를 획득하는 방법은 현물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혜자에게 현물을 제공받는 대가 혹은 잠재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정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 대상 그룹은 현물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따르는 비용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므로 현물 서비스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정책 대상 집단만이 이러한 비용을 감내할 의지가 있으므로 현물 서비스를

받으려 할 것이다. 현물 서비스 수급에 따른 비용은 질(quality), 양(quantity), 시간(time)에서의 제약과 같은 유형으로 부과될 수 있다.

셋째, 영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현금 지원의 문제이다. 영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현금 지원은 비형평성을 유발할 수 있다. 노동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이나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현금 급여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높은 경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여성은 보육 서비스 현물 지원을 더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금 지원은 정부로 하여금 국민들의 선택을 다양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 시장에서 저소득 여성과 고소득 여성을 이분화 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 시장의 이분화는 사회의 비형평성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라. 투자로서의 가족 지원 정책

가족 지원 정책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특히 예산에 대한 제약이 심하거나 경제 불황기 때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시각은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 지출이 가져올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Esping-Andersen(2002)이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은 “투자”라고 말할 수 있다. 자녀 양육 지원에 지출한 정부의 재원은 미래에 더 큰 사회적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자녀는 자본으로서 간주하고 돌보지 않으면 가치가 하락하지만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자기생산성(self-productivity)”을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투자가 혜택이 존재한다는 것은 많은 문헌에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증거를 찾아보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그 이유는 장기에 걸쳐 자녀 양육 지원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

문이다. 연구 결과는 자녀 양육 투자를 측정하는 방법론의 가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Cleveland와 Krashinsky(1998, 2003)의 연구 결과 1998년 2~5세 모든 어린이들에 대하여 공공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53억 원 지출하였는데 여성 고용 증가를 통해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 조세 수입의 향상을 가져와 60억 원의 이득을 가져왔다고 보았다. 영국의 Price Waterhouse Coopers(2003)는 자녀 양육에 대한 30억 원의 지출이 여성 고용 9% 증가와 지속적인 GDP 성장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스위스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육 시설에 대한 1 스위스 프랑 투자는 노동 공급 증가에 따른 조세 수입의 증가로 이어져 3 스위스 프랑의 이득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Esping-Anderson(2008)은 보육 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투자는 출산 후 여성의 오랜 경력 단절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보육 시설에 대한 투자는 초기 투자비용의 약 43%를 이득으로서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덴마크 정부의 아동 양육 지원의 비용 효과 분석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2년 동안 자녀 보육 시설과 3년 동안 유치원을 정부가 지원하는데 72,850 유로가 지출되었다고 가정한다. 여성이 이러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5년 동안 계속 일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평균적으로 5년 기간 동안 114,300 유로를 벌 수 있고 생애 전반에 걸쳐서는 200,100 유로를 벌 수 있다. 5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40,000유로를 조세로 지불하며, 생애 전반에 걸쳐서는 110,000유로를 조세로 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의 보육 시설과 유치원 지원의 혜택은 생애 전반에 걸친 조세 지불액 110,000유로에서 정부의 지원 72,850유로를 제외한 37,150유로라고 할 수 있다.

덴마크의 사례를 통한 자녀 양육 지원 비용 효과 분석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매우 근시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 효과 분석은 정부 투자로서 발생하는 집합적인 효과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녀 양육 지원에 따른 효과가 생산성 향상 혹은 조세 수입과 같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녀 양육비용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가족을 지원하는 정

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정책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과 여성에 대한 인적 자본 투자의 효과는 여성 고용률, 출산율, 경제성장 사이의 상호 작용 관계에서 장기적으로 발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 요약 및 시사점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요인들을 분명하게 확인한 후에야 부모의 자녀 양육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를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가정(family)이라는 “블랙박스”안에 들어와서 정부 정책이 자녀와 가족을 위한 부모의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의 가족 지원 정책의 목적은 정책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는 소득 재분배, 이동 복지, 부모의 노동 시장에서의 지위, 출산율 수준이라는 정부 정책 결과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의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육아 휴직, 현금 및 현물 급여 정책의 조화로운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편적인 현물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은 현금 급여를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정책이 초래하는 비효율성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 아동의 삶을 조화롭게 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정책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련의 가족 지원 정책들을 육아 휴직 정책, 현금 급여 정책, 서비스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첫 번째 필요조건이라 하겠다. 육아 휴직 정책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자녀는 물론 부모에게도 긍정적으로 효과를 미치며 특히 자녀 양육기의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육아 휴직 후에 빨리 직장에 복귀하는 것은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육아 휴직 후 질이 높

고 적절한 비용 수준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육아 휴직 정책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극대화 될 수 있다. 특히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은 저소득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초기의 공식적인 자녀 보육 서비스가 취약 가정의 여성 노동 시장 참여와 자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지속성과 상호 보완성이 아동 발달 시기 동안 단절 없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육아 휴직을 갖는 것이 노동 시장에서의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휴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육아 휴직이 끝나는 시점에서 보육서비스가 공급과 비용 부담 측면에서 적절하게 공급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 시간이 가족 시간에 맞게 유연화 되어야 할 것이다.

OECD 국가에서 발견되는 성공적인 가족 지원 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포괄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개별 정책들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함으로써 다른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가족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다양한 각종 지원 정책 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일련의 정책 조합을 구상하는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포괄적인 정책을 지원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가장 높은 수준의 지출을 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전체 GDP의 약 4%를 가족 지원을 위해 지출하고 있다.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없거나 혹은 지출을 꺼려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기 쉽지 않다. 조세를 납부하는 국민들도 보편적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를 지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보편적인 지원 정책을 최소화 하고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가족 지원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보편적인 지원

은 현금과 현물 형태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다. 보편적인 현금 급여는 빈곤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며, 기본적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자녀에게 동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하며 학령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혹은 현물 급여 정책은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혹은 가장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인구 집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가족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보편적인 일련의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경제 불황기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육 환경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보편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원 대상 가족이 받는 오명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보편적인 정책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조합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영속성에 대한 신념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정책에 대한 신뢰는 국민들로 하여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책의 이용률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 사례는 가족 지원 정책을 오래 동안 유지하여 온 북유럽 국가와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3. 가족 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가. 거시적인 국가 데이터 비교 연구 결과

유럽의 각 국가가 상이한 출산율 수준을 보이는 이유가 서로 다른 가족 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족 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가족 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선행 연구들이 지적한 바 있다(Gauthier, 2007). 방법론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증 연구가 적절하게 수행이 된다면

가족 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현재까지 미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가족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가족 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들어 많은 연구들은 가족과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다양한 OECD 국가의 정책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Gornick *et al.*, 1997; Gauthier, 2002; De Henau *et al.*, 2007; OECD, 2002~2007; Thévenon, 2008a). 이러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가족 지원 정책의 정도와 특성에서의 차이를 강조하였는데, 현금 급여 지원, 보육 서비스 지원, 육아 휴직 정책, 유연한 근무 시간 등 주요한 가족 지원 정책의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동 연구들은 시간제 근로, 유연한 노동 시간, 고용주에 의한 지원 정책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지적하였다(Gornick & Meyers, 2003; OECD, 2002~2007; Thévenon, 2008b). 국가 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일부 국가에서 높은 출산율과 높은 여성 고용률이 동시에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국가들에서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OECD, 2002~2007).

그러나 대체적으로 가족 지원 정책은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지원 수준이 높고 정책들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이 아동을 양육하는 시기의 일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을 때 출산율이 높고 여성의 종일 근로 고용률이 동시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가 북구 유럽 국가와 프랑스이다. 반면에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여성의 반시간 근로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앵글로 색슨계 국가에서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주로 취약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가족 지원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서는 출산율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모두 낮았다. 따라서 인과 관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적어도 국가 간의 차이만을 가

지고 비교해 보아도 가족 지원 정책과 출산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경제적인 의사 결정으로서의 출산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것은 효용 극대화 과정을 통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으로서 소득과 자녀에 대한 선호라는 제약 하에서 자녀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얻는 혜택의 함수이다. 이러한 경제학 모형에 따르면 공공 지원 정책을 통하여 자녀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현금 급여와 같은 정책 수단으로 가계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킨다면 자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ecker, 1981; Cigno, 1991). 경제학 이론에 근거하여 가족 지원 정책은 자녀에게 지출하는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 혹은 간접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 양육에 수반되는 직접 비용은 자녀가 한 가정에 태어남에 따라 가계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으로서 음식, 의복, 보육, 교육, 주거 등에 지출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간접비용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 부모에게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여성이 출산이나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와 자녀 출산 이후 직장에서의 경력 저하로 인한 임금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아동 수당, 가족 수당, 자녀 소득 공제, 기회비용 감소를 위한 노동 시장 정책(아동 보육 지원, 출산 및 육아 휴직 정책)과 같은 가족지원정책들은 자녀에게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과 간접적인 비용의 감소를 통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가족 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 국가에서도 출산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가족 지원 정책이 미비한 국가에서도 출산율이 높은 양상을 보이는 국가도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대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젊은이들이 자립하는 연령이 늦춰지게 되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교육 기간이 길어지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이 늦춰졌기 때문이다. 성인 연령으로 진입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얻는 시기가 늦추어지는 것은 출산량(quantum)와 출산속도(tempo)에 영향을 미친다(Blossfeld *et al.*, 2004). 젊은이들이 독립적인 소득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도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남부 유럽 국가에서 특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 이외에도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 예를 들면 집을 장만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 - 이 출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첫째아를 낳는 시기를 늦추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둘째,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사회와 가족 내에서 규범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부모 역할에 있어서 성역할의 분리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여성이 자녀 출산 보다는 직업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이 고학력 여성들간에 자녀가 없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특히 적합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고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더욱 이러한 양상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며, 부모 역할 수행에 있어서 양성 평등이 가능하고, 직장 과 가정에서 가족 친화적인 환경이 구축되어 있을 때 북구 유럽 국가와 프랑스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출산율이 높고 여성의 고용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Ellingsaeter, 2007; Kravdal, 1996; Cette & Dromel & Meda, 2005). 가치관의 변화는 특히 개인적인 가치가 강해지고 있는 국가에서 낮은 출산율을 설명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세 가지의 자기 강화적 메커니즘에 근거하고 있는 “저출산의 덩어리”도 최근 각 국가에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Lutz *et al.*, 2005). 인구학적인 요인으로 부정적인 인구 모멘텀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잠재적으로 미래의 어머니가 될 여성들이 점점

줄고 있어 점점 출생아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학적 요인으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상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가족원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이전 세대들 사이에서 이미 낮아진 출산율로 인해 소자녀 개념이 사회 내에서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들의 개인적인 열망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대 소득은 고령화 사회의 높은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감소하고 있어 소자녀 가치관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넷째, 자녀의 양과 자녀의 질의 교환 현상이다. 부모는 적은 수의 자녀를 갖는 것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자녀들에게 사용할 시간과 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자녀 보다 적은 수의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의 양과 질의 교환 현상은 정부의 가족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소비할 시간과 돈을 정부가 충실히 지원하고 있는 스웨덴과 프랑스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은 다양한 이유가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서 국가 체제 자체의 문제와 더불어 가치관과 규범이 각 국가의 역사, 문화적 전통, 경제 상황, 정책적 지향성과 혼합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한 가지 이유만을 가지고 유럽 국가의 출산율 하락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출산율 문제는 과거로부터 그리고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정책적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정한 국가에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진 바 없지만 국가 정책이 개인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연구 결과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은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 최근까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특정한 가족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주요한 정책 수단은 현금 급여를 통하여 자녀에게 지출하는 직접적인 비용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부모로 하여금 더 많은 자녀를 낳도록 지지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현금 지원 정책은 국민들에게 덜 선호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 부모 역할을 지원하

는 정책 특히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일과 가정생활의 책임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정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일하는 부모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이러한 지원이 부족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출산율 하락이 덜 심하였는데 이는 정부 정책이 직장 일과 부모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부담을 완화해 주었기 때문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다. 출산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의 이슈

국가 간의 비교 연구 결과들은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 보육의 이용 가능성이 높고,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지출이 낮고, 단시간 근로 이용 가능성이 높으며, 육아 휴직 기간이 긴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별 정책들이 각각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한계성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 하다. 따라서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정책들의 영역과 구분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광범위한 정책으로 인하여 정책들 간의 상호 보완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하나의 정책은 다른 유형의 정책과 결합되어 추진될 때 만 효과성을 보일 수 있는데 특히 결합되는 정책이 평균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때만이 가능하다. 정책의 효과성은 이러한 정책의 상호 보완성이 존재할 때 극대화 될 수 있으며, 자녀 성장기 동안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부모로 하여금 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전 생애에 걸친 육구의 발현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정책이 효과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의 소요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간 동안에 정책은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특정한 정책 혹은 정책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셋째, 출산율과 노동 시장에서의 행태는 동시에 결정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 공급과 같은 설명 변수에서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다.

넷째,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며 자녀 양육비용은 가계의 소득과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매우 다르다. 대부분의 자녀 양육비 관련 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 간의 양육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평균적인 양육비 추정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 효과는 인구 사회학적 집단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종, 사회경제학적 지위, 부부간의 관계 유형에 따라 같은 유형의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Sleeboos, 2003). Gauthier(2007)는 정책 효과가 심지어 출생 순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섯째, 정책 수단의 영역에 한계를 짓는 문제이다. 특정한 정책은 그 정책이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인구 집단에게 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두 자녀 부모에 대한 육아 휴직 급여 정책은 다자녀 가정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특정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신호 역할을 하게 되어 전염 효과로 인해 광범위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섯째, 가족 지원 정책들 간의 내생성 문제가 있다. 가족 지원 정책의 발전은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정책이 개발되기도 하고 정책이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반영할 수도 있다. 장기간에 걸친 정책 발전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보육 지원 정책이 발전되어 올 때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역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상관관계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자녀 출산의 증가가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녀 출산 증가로 인해 정책이 개발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정책과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 및 출산 의도는 쌍방향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일곱째, 정책에 대한 평가는 광범위하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며 단지 그것이 국민들에게 재정적인 인센티브로서 얼마나 효과적이기에 대한 것 이상을 고려해야 한다. 정책 효과 중의 하나는 사람들에게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며 국민들로 하여금 자녀 출산과 같이 장기적인 헌신(long-term commitment)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갖기 위해서 정책 추진을 위한 배경으로서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들이 필요하다.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와 국민들 사이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가까운 미래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인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장기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책의 탁월한 수행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측면으로서 국민들에게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라. 주요 선행 연구 결과

가족 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한 연구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선진국에서의 가족 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합계 출산율 수준을 분석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횡단면 분석, 시계열 분석, 패널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Sleenbos(2003)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모순되는 결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가장 큰 이유로서 방법론상의 차이를 언급 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출산 행위와 가족 지원 정책 사이에 긍정적이지만 미약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authier(2007)는 가족 지원 정책과 출산율 간의 관계에 대한 근거가 미약한 이유는 정책적인 영향력은 장기적으로만 관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현금 지원과 소득 보전 정책의 효과가 보다 명백하고 강력한 결과를

보이는 반면 일과 관련한 정책의 영향력은 다소 모순된 결과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육아 휴직 기간과 급여 수준은 일반적으로 출산에 미약한 효과를 보이는 반면 보육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과 적절한 서비스 비용 지원은 더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한 근로시간과 시간제 근로의 가능성은 출산율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가족 형성과 노동 시장 참여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 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정책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 현금 급여와 재정 지원 정책 효과의 한계

Blanchet과 Ekert-Jaffé(1994)는 1970~1983년 기간 동안 11개 선진 국가를 대상으로 가족 수당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가족 정책 변수를 고안하여 재정적 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혜택 크기를 현금 급여, 조세 감면, 육아 휴직 급여의 정도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적 지원 정책의 혜택 정도가 출산율에 미약한 효과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프랑스 가족 정책의 경우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 여성 1명당 0.17명 더 자녀를 낳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출산율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Gauthier와 Hatzius(1997)는 1970~1990년 기간 동안 22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출산율과 정책간의 상관성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모성 휴가 기간과 모성 휴가 급여 모두 출산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그 정도는 비록 적으나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효과의 차이가 출생 순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첫째아에 대한 현금 급여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은 프랑스에서

지원하는 것과 같이 셋째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현금 급여는 출산율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현금 지원 정책의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 수당 급여의 25% 증가는 평균적으로 여성 한 명당 0.07명의 아이를 더 낳도록 하는 효과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족 지원 정책의 효과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 유럽 국가에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북구 유럽 국가에서 현물 지원의 수준이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수준을 동시에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연구자들은 정책들 간에 상호 보완 관계가 양적으로 분석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Laroque와 Salanie(2008)은 프랑스 사례를 통해 가구 단위에서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적인 지원은 출산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첫째아와 셋째아 모두에게서 발견되었다. 연구자들은 GDP의 0.3%를 차지하는 보편적인 아동 수당 정책이 합계 출산율을 0.3% 포인트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2) 출산시기 및 출산량에 미치는 효과

가족 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는 이러한 정책이 "출산량(quantum)" 혹은 "출산시기(timing)"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 지원 정책은 자녀 수 보다는 자녀 낳는 시기에 더 유효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leeboos, 2003; Gauthier, 2007). Ermisch(1988)는 영국에서의 아동 수당 급여의 인상이 젊은 연령에 출산 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였다. 가족 지원 정책이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데 미치는 영향은 스웨덴에서도 발견되었다(Hoem, 2005; Andersson *et al.*, 2006). 스웨덴 육아 휴직 제도에 “스피드 프리미엄”을 도입함으로써 첫째아와 둘째아 사이의 출산 간격을 좁혀 자녀 출산을 촉진하였다고 나타나고 있다. Andersson *et*

al.(2006)은 스피드 프리미엄의 효과는 인구 집단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교육 수준의 스웨덴 부모들이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에 대응하여 출산 간격을 줄이는 행태의 변화를 보였다고 하였다.

Castles(2003)은 0~3세 영아에 대한 보육 시설 서비스 제공은 여성의 노동 시장 재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OECD 국가에서 출산율과 여성 노동 시장 참여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게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Di Prete *et al.*(2003)와 Del Boca *et al.*(2007)은 자녀 양육비용 절감과 보육 시설 이용 가능성의 증가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반면에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스웨덴의 경우 보육 시설 서비스의 특성들이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onsen, 2004; Hank & Kreyenfed, 2003; Andersson *et al.*, 2004).

D'Addio와 Mira d'Ercole(2005)는 1999년도 19개 OECD 국가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 지원 정책이 함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과 보육 서비스 지원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육아 휴직 기간의 1주일 증가와 육아 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 증가는 추정 모형에 따라 함께 출산율을 0.3%, 0.9%, 1% 증가시키는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동 시장 참여율, 시간제 노동의 여성 비율, 남성 임금에 대한 여성 임금 비율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 Boca *et al.*(2007)는 보육 서비스, 육아 휴직, 가족 수당,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여성의 출산율과 노동 시장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럽 6개 국가를 비교한 결과 이러한 가족 지원 정책이 출산율과 여성 노동 참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여성의 교육 수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과 육아 휴직이 출산율과 여성 노동 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 수준이 낮은 가족들 사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파트타임 일자리

같은 노동 시장 정책은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에게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가족 지원 정책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력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 종합 및 시사점

가족 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방법론상의 한계점과 문제점이 많이 있다. 몇몇 실증 분석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여 특수한 환경에서의 정책 효과를 분명하게 제시한 연구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한 국가의 출산율은 그 사회의 가족 친화성 정도와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으며 재정적인 지원의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족 지원 정책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국가 간의 출산율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 아주 제한적인 부분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연구 결과가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출산율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이 없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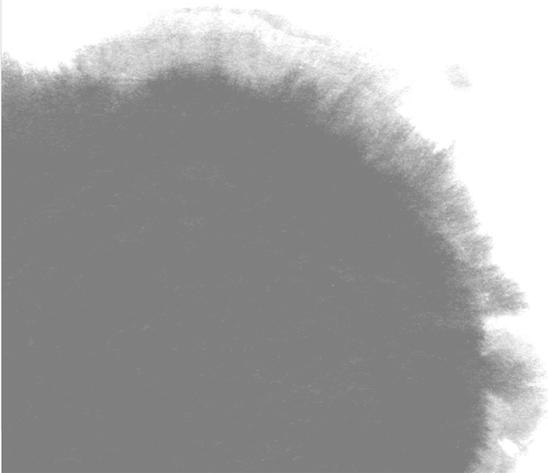
정책 효과를 설명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책들 간의 상호 보완관계 및 아동기 동안의 지속적인 지원이 정책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예를 들어 육아 휴직 정책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기 위해서는 보육 서비스 지원이 육아 휴직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제공되어야 출산율에 더 효과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가족 지원 정책의 상호 보완성과 지속성의 특징은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함에 있어 사회 전체에서의 신뢰를 형성하는 기본 조건이다. 향후 연구 과제에서는 가족 지원 정책의 효과성이 이러한 정책의 보완성과 지속성에 의해 얼마나 많이 좌우되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가족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함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실제로 출산율이 미시적인 정책이 아닌 거시적인 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

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 체계의 특성과 거시적인 요인들은 매우 다른 유형의 제한점과 기회로 작용하여 각 국가의 개인적 특성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출산율은 전체 사회의 가족 친화성 정도에 더 많이 좌우될 수 있으며 재정적인 지원과 다른 유형의 지원 정책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느냐와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관계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03

국내외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제3장 국내외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1. 외국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가. 유럽 국가의 양육 지원 정책 유형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은 각 국가마다 다양한 정책적 유형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가족 지원 정책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가족 지원 정책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으로서 현금 급여나 조세 감면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을 보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둘째, 현물 지원으로서 교육·보육 서비스인데 대부분 직접적인 서비스 지원이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가족의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은 조세 감면이나 현금 급여의 형태로 지원되기도 한다. 셋째,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와 해당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지원 정책으로서 산전후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 자녀 돌봄 휴가 등이 포함된다.

가족과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 이외의 사회적 지원 정책은 자녀가 있는 넓은 의미에서는 가족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족 지원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다. 가족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 정책으로 주거 지원 정책, 건강 보험 정책, 연금 보조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정부의 교육 지원 정책은 특히 유치원 교육이 보육 서비스를 대체하는 국가에서 가족 지원 정책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가족 지원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 돌봄과 관련한 휴가 정책 이외 근로 조건 혹은 고용 조건은 노동관계 법률이나 단체 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노동관계 법령과 단체 교섭과 관련된 사항을 가족지원 정책 안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 밖에도 고용주나 민간 보육 서비스 등 민간 지출에 의한 서비스 지원도 가족을 위한 국가 지출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본 장에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국가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앞서 언급한 현금 급여,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가족 돌봄 휴직 정책 세 가지 정책을 주요한 가족 지원 정책의 유형이라 간주하고 유럽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유형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Eurostat 사회보호지출 데이터베이스(ESSPROSS)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한다.

ESSPROSS는 유럽의 사회보호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부 지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 1970년대에 Eurostat와 EU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개발하였다. ESSPROSS의 방법론은 1981년 최초로 발행되었으며 1996년에 개편을 걸쳐 2008년에 세부적인 수정이 있었다. 동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으로는 첫째, 자료간의 우수한 비교성으로서 정확하고 검증된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국가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둘째, 정기적인 데이터 생산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친 경향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셋째, 포괄적인 국가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현재 30개 EU 회원국 및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ESSPROSS는 다음의 8가지 정책으로 구분되어 있다. ①질병/보건의료, ②장애, ③ 노인, ④ 긴급지원, ⑤ 가족/아동, ⑥ 실업, ⑦ 주거, ⑧ 사회적 배제 및 기타. 이 중에서 “가족/아동” 정책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금이나 현물(보건의료 제외) 지원 정책으로서 임신, 출산, 입양, 자녀 양육, 기타 가족 돌봄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함한다(EU, 2009)” 동 항목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정부 정책이 포함된다.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정책, 둘째, 자녀 이외 친인척을 돌보는 사람에 대한 재정 보조 정책, 셋째, 가족 특히 자녀를 도와주고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고안된 사회 서비스 정책이다.

ESSPROSS는 다양한 유럽 국가의 가족·아동 급여 지원 정책을 아래의 카테고리에 따라 구분하였다. 현금 급여는 아동 양육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가족수당 및 아동 수당이 포함되며,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휴직할 경우 지급되는 휴직 급여 혹은 양육 수당이 포함된다. 현물 급여는 주로 보육 관련 서비스 지원으로서 시설 서비스와 보육 도우미에 의한 개인 서비스가 포함된다.

〈표 3-1〉 ESSPROSS의 가족·아동 급여 지원 구분

구분	종류	비고
현물 급여	보육 시설 서비스	현물 혹은 서비스 지원
	가정 입주 서비스	
	가정 방문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현금 급여	출산 관련 소득 보전 급여	가족 돌봄 휴가 시 급여
	출산 보조금	
	육아휴직 급여	
현금 급여	가족수당·아동수당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 (자녀 양육비용 보상)
	기타 현금 급여	

자료: EU (2009).

그러나 ESSPROSS가 제시한 가족지원정책의 정의를 근거로 각국의 보육 서비스 지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다. 아동 보육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출되는 몇 가지 항목이 가족·아동 정책이 아닌 사회부조 정책안에 포함될 것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보육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면하기 위해 가정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누락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부분도 “서비스 현물”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에 따라 취학전 학교 프로그램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국가가

있는데 이러한 취학 전 학교 프로그램이 보육 서비스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사회 정책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 보육과 관련해서는 보육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출 이외에도 보육의 양과 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보육 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아동 연령에 따른 보육 서비스 충족률, 보육 서비스 제공 시간, 부모 본인 부담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보육 서비스 충족률도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육 서비스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국가마다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가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목적을 가진 정책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가족 수당이며 같은 현금 급여라 하더라도 여성의 자녀 출산 혹은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 보상의 개념으로 지원하는 육아 휴직 수당과는 차이가 있다. 현금 급여의 다른 형태인 조세 감면 정책은 현금 급여 정책을 보완하는 기능으로서 역할을 한다. ESSPROS 데이터에서 현금 급여에 포함하고 있는 정책은 보편적인 형태인 아동 수당 및 가족 수당이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부모 수당과 장애아 수당도 포함하고 있다.

EU 국가에서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아동 수당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다. 반면에 체코, 스페인, 이탈리아, 키프러스, 아이슬란드, 몰타,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제한이 국가마다 다양하여 제일 낮은 국가는 스웨덴에서 16세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과 룩셈부르크로 27세까지 지원하고 있다. 셋째, 거의 절반에 가까운 EU 국가들에서 기본적인 아동 수당 급여 액수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상이하다. 넷째, 아동 수당 급여액수는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며 가장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는 유럽 대륙 국가로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프랑스이다. 낮은 수준의 아동 수당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남부 유럽 국가와 동구권 국가 그리고 중앙 유럽 국가들이다. 넷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 수당은 자녀수에 관계 없이 모든 가족들에게 지급된다. 예외적인 사례로서 프랑스에서는 자산 조사에 근거한 아동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 가지 종류 이상의 가족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수당의 유형에는 다자녀 가족 수당, 한부모 가족 수당, 장애아 수당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가들 간의 가족 수당을 비교함에 있어 다른 유형의 가족 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한 종류만의 가족 수당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국가 가족 수당 정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나. EU 국가의 아동 양육 지원 현황

2005년 현재 ESSPROSS의 “가족·아동” 정책의 정의에 따른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유럽 국가가 지출한 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 가족·아동 급여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여 2005년 현재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서 전체 GDP 중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폴란드로서 0.8%를 차지하고 있다. EU 국가 평균으로 보았을 때 가족·아동 급여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도 총 사회 지출에서 가족·아동 급여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EU 국가 평균적으로 7.7%이며 국가별로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16.5%, 가장 낮은 국가는 이태리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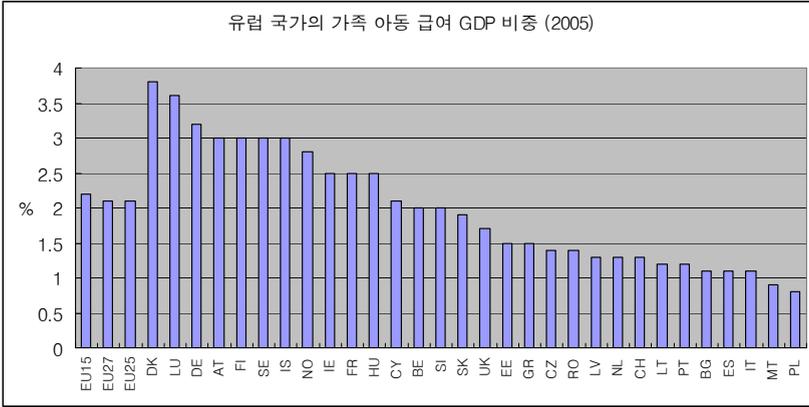
〈표 3-2〉 유럽국가에서 가족 및 이동에 대한 지원정책의 지출 규모 (GDP대비): 2005년

	GDP대비	총사회보호 지출대비	보편적 급여	자산조사에 따른 급여	현물급여	육아휴직 급여	기타현금 급여
EU 27개국	2.1	7.7	1.5	0.6	0.6	0.3	1.2
EU 25개국	2.1	7.7	1.5	0.6	0.6	0.3	1.2
EU 15개국	2.2	7.7	1.6	0.6	0.6	0.3	1.2
벨기에	2.0	6.9	2.0	0.0	0.4	0.1	1.6
불가리아	1.1	6.6	0.5	0.6	0.1	0.4	0.6
체코	1.4	7.3	0.9	0.5	0.2	0.6	0.6
덴마크	3.8	12.6	3.6	0.2	2.2	0.5	1.0
독일	3.2	10.8	2.2	1.0	0.8	0.2	2.2
에스토니아	1.5	12.0	1.5	0.0	0.1	0.7	0.7
아일랜드	2.5	13.6	1.6	0.8	0.3	0.1	2.1
그리스	1.5	6.3	1.1	0.5	0.5	0.3	0.7
스페인	1.1	5.5	0.8	0.3	0.7	0.2	0.2
프랑스	2.5	8.0	1.6	0.9	0.5	0.4	1.6
이탈리아	1.1	4.2	0.7	0.4	0.5	0.2	0.4
키프로스	2.1	11.6	2.1	0.0	0.2	0.1	1.8
라트비아	1.3	10.6	1.3	0.0	0.2	0.6	0.5
리투아니아	1.2	9.0	1.1	0.1	0.4	0.3	0.5
룩셈부르크	3.6	16.5	3.6	0.0	0.5	0.4	2.7
헝가리	2.5	11.5	2.3	0.3	0.6	0.6	1.3
몰타	0.9	4.7	0.1	0.7	0.1	0.0	0.8
네덜란드	1.3	4.6	1.2	0.1	0.7	0.0	0.6
오스트리아	3.0	10.4	2.8	0.2	0.5	0.1	2.4
폴란드	0.8	4.3	0.2	0.6	0.0	0.2	0.6
포르투갈	1.2	5.0	0.2	1.0	0.5	0.2	0.5
루마니아	1.4	10.0	1.2	0.2	0.2	0.6	0.7
슬로베니아	2.0	8.4	0.6	1.4	0.6	0.4	1.0
슬로바키아	1.9	11.0	1.9	0.0	0.1	0.5	1.2
핀란드	3.0	11.2	3.0	0.0	1.4	0.6	1.0
스웨덴	3.0	9.5	3.0	0.0	1.5	0.7	0.9
영국	1.7	6.2	1.3	0.4	0.4	0.1	0.1
아이슬란드	3.0	13.6	2.4	0.6	1.7	0.6	0.7
노르웨이	2.8	11.9	2.7	0.2	1.3	0.7	0.9
크로아시아	1.3	4.4	1.3	0.0	0.2	0.1	1.0

주: 육아휴직 급여에는 출산 관련 소득 지원 급여, 육아 휴직 급여, 출산수당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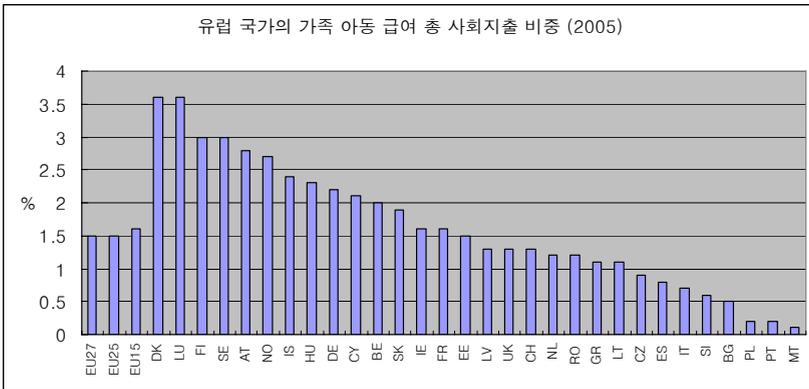
자료: ESSPROS (Eurostat), EC(2009)에서 재인용

[그림 3-1] 유럽 국가의 가족 아동 급여 GDP 비중: 2005년



자료: ESSPROSS (Eurostat), EC(2009)에서 재인용

[그림 3-2] 유럽 국가의 가족 아동 급여 총 사회지출 비중: 2005년



자료: ESSPROSS (Eurostat), EC(2009)에서 재인용

현물 급여에 해당하는 아동 보육 서비스 지원에 대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EU 평균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게는 덴마크 2.2% 부터 거의 0%에 가까운 폴란드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특히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북구 유럽 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현물 급여 형태의 양육 지원 서비스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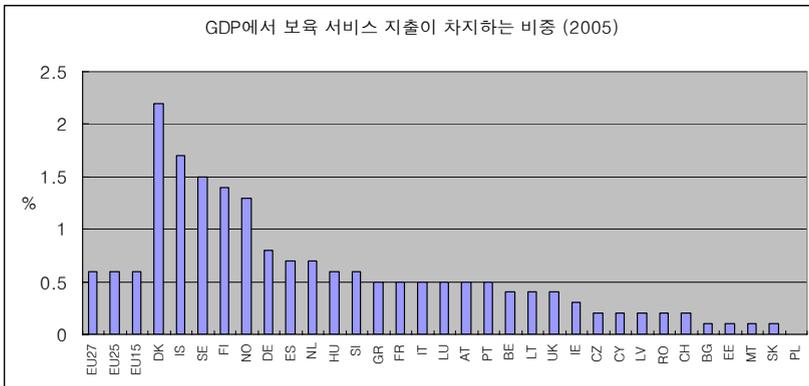
〈표 3-3〉 유럽 국가의 보육 서비스 지원 현황

(단위: %, US \$ PPP, 명)

	보육 서비스 지출의 GDP 비중	정부의 아동 1인당 보육 지출: 0~2세	정부의 아동 1인당 보육 지출: 3~5세	보육 서비스 이용률: 0~2세	보육 서비스 이용률: 3~5세	아동 대 교사 비율: 0~2세	아동 대 교사 비율: 3~5세	보육 서비스 본인 부담: 맞벌이	보육 서비스 본인 부담: 홀벌이
덴마크	2.3	8,009	4,824	61.7	89.7	3.3	6.9	7.8	8.5
스웨덴	1.9	5,530	4,091	39.5	86.6	5.5	10.9	6.2	4.8
핀란드	1.4	4,186	4,069	22.4	46.1	4	12.7	7.2	4.1
노르웨이	1.5	6,085	3,895	43.7	85.1	-	-	7.7	6
아이슬란드	1.8	3,408	6,781	58.7	94.7	-	7.3	14.9	13.5
프랑스	1.6	4,009	4,744	28	100	5	18.8	11.3	8.8
오스트리아	0.6	3,251	6,205	6.6	74	8.7	14.7	14.9	9.3
독일	0.77	3,084	4,865	9	80.3	7.5	10.5	8.4	6.8
벨기에	0.9	1,900	4,663	33.6	99.6	7	15.6	4.2	3.5
네덜란드	0.9	2,025	5,497	29.5	70.2	5	20	11.5	3
룩셈부르크	0.9	3,554	-	14	72.3	5	14.3	5.7	4.8
아일랜드	0.3	1,430	-	15	68.2	3	10.3	29.2	51.7
영국	0.8	1,850	7,153	25.8	80.5	3	17.4	32.7	14.4
포르투갈	0.9	1,289	4,489	23.5	77.9	11	16.5	4.2	2

자료: OECD Family database, OECD(2007), EC(2009)에서 재인용

〔그림 3-3〕 GDP에서 보육 서비스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2005년



자료: ESSPROS (Eurostat), EC(2009)에서 재인용

〈표 3-4〉 유럽 국가에서 공공 보육 서비스 이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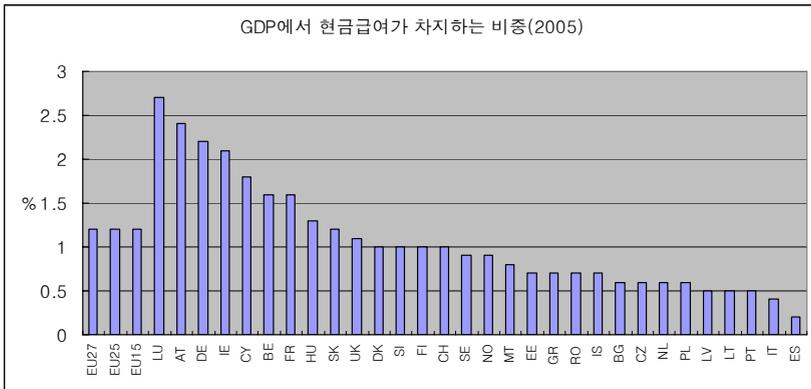
국가	0~2세		3세~학령전		학령기~12세		의무교육 기관 입학연령
	1~29시간	30시간이상	1~29시간	30시간이상	1~29시간	30시간이상	
	벨기에	23	19	49	48	43	
체코	2	0	30	40	53	45	6
덴마크	13	60	15	79	34	65	7
독일	8	8	61	26	69	29	6
에스토니아	3	9	9	69	57	40	7
아일랜드	14	6	64	14	64	35	6
그리스	3	4	27	34	54	45	6
스페인	25	14	54	40	53	46	6
프랑스	16	16	56	39	48	52	6
이탈리아	9	16	21	70	13	87	6
키프로스	7	12	42	43	54	46	6
라트비아	2	16	6	60	27	69	5
리투아니아	2	9	11	46	66	31	7
룩셈부르크	14	8	51	12	74	23	4
헝가리	2	5	30	49	30	70	5
몰타	5	0	32	23	19	79	5
네덜란드	36	4	82	7	89	11	5
오스트리아	4	0	53	16	66	32	6
폴란드	0	2	8	22	58	38	6
포르투갈	3	26	9	55	30	69	6
슬로베니아	2	22	10	67	41	55	6
슬로바키아	0	3	10	57	39	44	6
핀란드	8	19	25	51	82	18	7
스웨덴	22	31	35	52	1	95	7
영국	24	6	72	28	10	90	5
아이슬란드	7	30	21	76	22	77	6
노르웨이	11	22	28	52	83	17	6

자료: Eurostat, EU-SILC, 2005년, EC(2009)에서 재인용

EU 국가 평균적으로 볼 때 가족·아동 지원 정책에 대한 지출에서 약 60%를 현금 급여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금 급여 지원에 대한 지출은 GDP 대비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현금 급여 지원의 정도도 국가마다 다양하여 룩셈부르크의 경우 GDP 대비 2.7%를 현금 급여 지원으로

지출하고 있는 반면에 스페인은 GDP 대비 0.2%만을 현금 급여로 지원하고 있다. EU 국가에서 가족 아동 지원 중 현금 급여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국가는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키프러스이다. 반면에 대부분의 동구권 유럽 국가에서는 EU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현금 급여를 하고 있으며,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이태리, 스페인은 매우 낮은 현금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3-4] GDP에서 현금급여가 차지하는 비중: 2005년



다. OECD 국가의 아동 양육 지원 지원 현황

OECD는 가족 현금 급여(family cash benefit)를 자녀와 관련하여 가족에게 지원하는 현금 지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금을 가지고 가족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출을 하도록 기대되고 있다. 가족 현금 급여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동 수당”으로서 3~12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급되며 몇몇 국가에서 지원 금액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르다. 아동 수당이 지급되는 연령은 일반적으로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과의 중복을 피하고 있다. 가족 현금 급여의 또 다른 유형은 자녀 소득 공제인데 특정한 소득 공제 및 재정상 이득을 받을 수 있을 만

큼 가계의 조세 의무가 크지 않을 때 현금으로 지원되는 급여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 급여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과반수가 넘는 국가에서 가족 현금 급여는 가계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급여로서 지급된다. 이러한 국가 중에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은 저소득 가정, 영아 양육 가정, 실업 부모에게 자산 조사에 근거한 현금 급여를 지원한다. 보편적인 가족 현금 급여 지원 액수는 가족의 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벨기에의 가족 현금 급여는 실업 상태가 몇 개월 지속되는 경우 인상되어 지급된다.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보편적인 가족 현금 급여는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에서 가장 관대하게 지원되어 급여 수준이 평균 노동자 평균 임금의 5%가 넘고 있다.

몇 개의 국가에서 가족 현금 급여 지원 액수는 가족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이슬란드에서 급여액수는 일정한 소득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하락되는데 급여의 하락 정도는 자녀수에 따라 다양하여 1자녀인 경우 2%, 두 자녀 5%, 세 자녀 7% 하락된 급여를 지원한다.

호주,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영국에서 현금 지원은 조세 감면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 관련 조세 감면은 독일을 제외하고 자산 조사의 형태를 취한다. 독일에서 조세 감면액은 소득이 상승하더라도 이에 따라 조정되지 않는다. 보편적인 가족 현금 급여와 같이 조세 감면율은 자녀수에 따라 증가하는데 네 번째 자녀부터 증가율이 적용된다.

자녀 관련 현금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의 최대 연령 수준은 <표 3-5>에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령기와 같은 높은 아동 연령까지 현금 지원을 하고 있다. 자녀가 자신의 소득을 가지고 있거나 결혼하였거나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 가족 현금 급여를 받을 자격이 상실된다.

급여는 대개 정액제로 지불되며 각 국가마다 자녀 연령 혹은 자녀수에 따라 다양한 급여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5〉 OECD 국가의 가족 현금 급여 현황 (2007)

국가	자녀 1명당 최대급여액 (3~12세)		급여액 증가		상한 연령(학생)	자산 조사	비고
	US \$	평균임 금비중	자녀 연령	자녀수			
호주	3,613	5	+/-	+	20(24)	가계 임금소득	가족조세급여 A 파트는 자녀 양육비용 절감을 위해 급여 혹은 조세 수당의 형식으로 지원
	2,901	6	-	0	15(18)	부부중 2차 소득자의 임금	가족조세급여 파트 B는 주된 소득을 가진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급여 혹은 조세 수당 형식으로 지원
오스트 리아	2,150	4	+	+	19(27)	no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세자녀 이상부터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
	836	2	0	0			환급형 세액공제
벨기에	1,739	3	+/-	+/-	17(24)	no	실업자에 대하여 가족급여가 실업 7개월째부터 증가
캐나다	1,194	3	0	+	17	가족과세 소득	캐나다 아동 조세 급여 (환급형 세액공제)
	1,851	5	0	-		가족과세 소득	저소득 대상 국가아동 급여보조금
키프 러스	274	2	0	0	17(23)	no	
체코	417	3	+	0	14(25)	최소생활 수준에 비교한 가계소득	세 가지 소득 수준이 급여 수준을 결정 (증가/기본/감소)
덴마크	2,306	4	-	0	17	no	
에스 토니아	474	3	0	+	15(18)	no	
핀란드	1,643	3	0	+	16	no	정액급여가 추가적인 자녀에 따라 증가

〈표 3-5〉 계속

국가	자녀 1명당 최대급여액 (3~12세)		급여액 증가		상한 연령 (학생)	자산 조사	비고
	US \$	평균 임금 비중	자녀 연령	자녀 수			
프랑스	979	2	+	+	20	no	가족 급여가 첫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 없음. 둘째 자녀에 대해(11세 이하) 지원
독일	2,530	4	0	+ 넷째 자녀 부터	18(25)	no	kindergeld는 환급형 조세감면으로서 매월 조세환급 지급(조세책임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비에서 환급받음.)
	2,300	4	-	-	-	yes	아동수당보조금(kinderzuschlag)은 자녀 양육 때문에 실업 급여/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
그리스	135	0	0	+/-	17(21)	no	지원 받기 50일 이전에 일을 하고 있어야 함. 고용주가 각 노동자에게 자녀 1명당 총 임금의 5% 지급 고용자 급여는 과세 대상
헝가리	765	7	0	+	18(23)	no	2006년 7월 1일부터 가족 지원 정책이 변화하여 가족 수당 급여가 두배로 증가, 정기아동보호지원이 가족 수당으로 흡수
아이슬란드	3,153	5	-	+	17		기본수당은 연소득 \$44,496 이상인 경우 자녀 1명 2%, 2명 5%, 3명 7% 감소 보조금은 소득수준에 무관하며 자녀 연령 7세 이하까지 지원

〈표 3-5〉 계속

국가	자녀 1명당 최대급여액 (3~12세)		급여액 증가		상한 연령 (학생)	자산 조사	비고
	US \$	평균 임금 비중	자녀 연령	자녀 수			
네덜 란드	1,488	3	+	0	17	no	과거 체계에 따르면 (1995년 1월 이전 출생아에게 적용) 자녀당 액수는 자녀 수에 따라 증가
뉴질 랜드	3,133	10	+	-	18	가족임금 소득	가족지원 조세수당 급여를 받지 못하는 아동은 조세감면 포함
노르 웨이	1,987	3	0	0	17	no	
폴란드	278	2	+	0	17(20)	1인당 순소득대비 가구원당 총 소득	보조급여자급
포르 투갈	536	2	+/-	-	16(24)	최소임금 대비소득	1세 이하 자녀에 대해 더 높은 급여 지급 급여 수준은 가족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함(6단계). 6~16세 자녀의 학비를 위해 9월 달 급여는 두 배로 지급
슬로바 키아	1,898	3	0	0	15(25)	no	아동수당이 동일한 액수로 지급됨
슬로베 니아	263	8	0	+	17(25)	총가구 소득	아동급여는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결정
스페인	398	1	0	0	17	총가구 소득	급여는 자산조사에 근거하며 둘째자녀 이후부터 15% 증가
스웨덴	1,865	4	0	+	16(20)	no	

〈표 3-5〉 계속

국가	자녀 1명당 최대급여액 (3~12세)		급여액 증가		상한 연령 (학생)	자산 조사	비고
	US \$	평균임 금비중	자녀 연령	자녀수			
스위스 (취리히)	1,950	3	+	0	15(24)	no	급여액은 칸톤마다 정해져 있으며 고용자에 의해 지불 급여는 과세대상이나 사회보장비에 영향받지 않음.
영국	1,883	3	0	-	15(18)	no	둘째 자녀부터 정액급여
	1,090	3	0	+		총가구 소득	자녀가 있는 가정은 소득이 \$116,410 이하일 경우 아동조세수당을 받을 수 있음. 조세감면은 환급형이며 장애아에게 높은 급여 제공
미국 (미시건주)	1,056	3	0	+	-	yes	TANF는 자녀수가 아닌 신청당시 가족수에 기준하여 결정되며 이후에 증가하지 않음. 급여액수와 지원기간은 주마다 차이가 있음.

주: 1) 가족급여는 환급형 조세 감면을 포함. 모든 급여액은 연간 급여액수임.

2) 급여액수가 자녀 수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 “+” 증가, “-” 감소, “0” 동일함, “+/-” 증가 혹은 감소 (국가에 따
라 가장 어린 자녀 혹은 가장 나이 많은 자녀에게 더 높은 급여 지원)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10).

2. 우리나라 아동 양육 지원 정책

가. 국내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우리나라 아동 양육 지원은 현금 급여로서 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입양 자녀 양육 수당, 입양 장애 아동 양육 보조금, 그리고 각 지자체 마다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출산 축하금과 다
자녀 양육 수당이 있다.

양육 수당은 2009년 7월에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

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0~1세)에 대하여 월 10만원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대상자를 아직은 차상위 계층에 한정하고 있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비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은 청소년 한부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정책으로 만 25세 미만이며 최저 생계비 15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입양 자녀 양육 수당으로 13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대해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입양아가 장애가 있는 경우 중증 장애아인 경우 월 570,000원, 경증인 경우 551,000원을 입양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녀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특수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어 아직 보편적인 현금 지원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은 대부분 셋째아 이상인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공 기간도 대부분 영유아 시기에 한정하고 있어 보편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각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지급 조건 및 급여 액수 수준을 보이고 있어 통일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금 지원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세 감면 정책으로 부양자 관련 인적소득 공제를 들 수 있다. 기본 공제로 자녀 1인당 100만원씩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100만원이 공제된다.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는 자녀가 2인까지 있는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으며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추가 1인당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공제하고 있다.

자녀 양육을 위한 또 다른 형태의 현금 급여로 산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 휴직 급여가 있다. 산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 급여는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여성이 휴직할 경우 기회비용을 보상함과 동시에 자녀 양육 및 모성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전후 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

90일에 대하여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처음 60일만에 대해 고용주가 전액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최대 13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최대 40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육아 휴직 급여는 만 6세 이하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자녀 돌봄을 위해 1년간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 동안 고용 보험에서 5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는 정책이다. 2011년부터 현재 월 50만원 지급하는 정액제 육아휴직급여가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 여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현물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으로 보육 서비스 지원을 들 수 있다.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자녀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소득 수준 70%까지 무상으로 보육 시설을 다닐 수 있도록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비용 지원과 더불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국공립 보육 시설과 법인 보육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보육 시설이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0~4세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만5세아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지원, 농업인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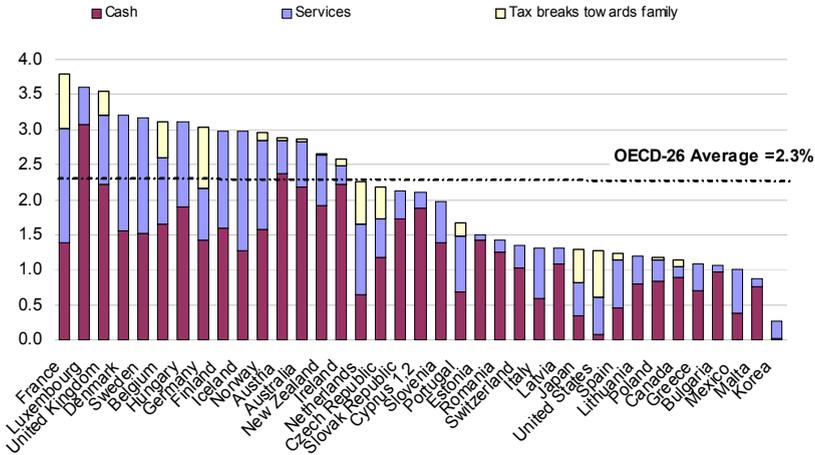
나. 국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평가

우리나라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은 과거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점차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정책으로 강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동의 공공재로서의 특성 그리고 아동 양육을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영역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도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국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동안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확대된 경향은 있지만 아직은 취약 계층에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 정책으로는 미흡한 경향이 강하다. 사회 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도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나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규모는 아직도 전체 사회 정책 예산에서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09년도 사회 정책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2009년 사회복지 및 보건 예산이 74조 6천억 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인 26.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복지 및 보건 예산중에서 보육, 가족, 여성 예산은 2%에 불과한 실정이다.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재정 지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도 현재 0.27%로서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2007년도에 0.46%에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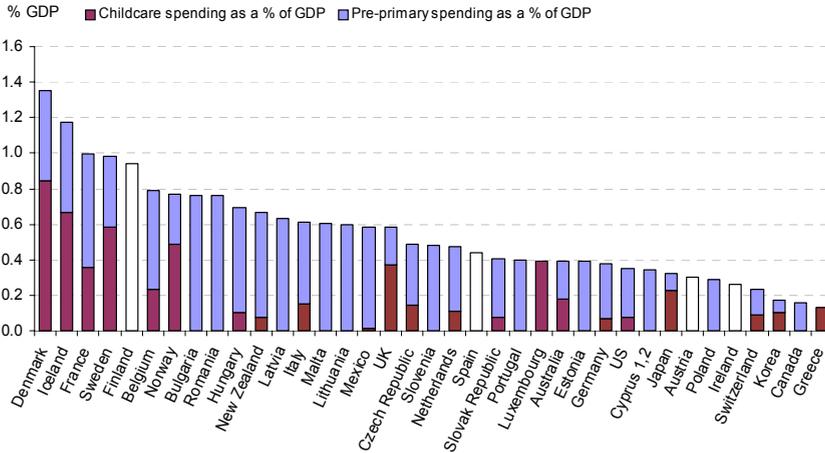
아래 그림에서 보면 가족 지원 정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다.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국내 가족 지원 정책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 그 동안 재정 지출 규모에서 많은 증가가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정부의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7%로서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하위권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3-5]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재정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5)



자료: OECD (2010) family database

[그림 3-6]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5)



자료: OECD (2009), family data base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보육 서비스 지원에만 치중되어 있는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가족 지원 정책은 현금 지원 정책, 가족 돌봄 휴가 정책,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의 조화로운 추진을 통해 정책간의 보완적인 특성과 대체적인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 효율적

이고도 효과적인 정책 조합을 구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 양육 지원은 대부분 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가족 정책 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보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의 예산 지출에 잘 반영되어 있다. 보육 가족 여성 부문의 총 1조 9천 2백 원 중 보육 분야가 1조 7천 억 원으로 부문별 예산의 89.1%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어 보육 서비스에 대하여 편향되어 지원하고 있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육 부분 1조 7천 억 원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1조 2천 8백 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 차지(75%)하고 있어 보육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 정책은 2011년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됨으로써 어느 정도 보편성은 확대되었다고 보이나 자녀 양육에 따른 의식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은 대부분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즉 아직 국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은 - 적어도 현금 지원 정책에 있어 -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에서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축하금 혹은 양육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도 대부분 셋째아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편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책의 보편성의 결함은 정부 정책에 대한 낮은 체감도를 유발하고 있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책 보편성 문제의 원인은 앞서 지적한 정부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낮은 재정적 지원에 있다.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보편성 확보를 위해서는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하여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러한 우선순위 설정은 전 사회적인 합의 도출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성이 약하다. 우리나라 가족 지원 정책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이 바로 취업 여성에 대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언급될 수 있는 정책이 육아

휴직 정책으로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여성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종사자이다. 여성 근로자 중 다수가 계약직, 비정규직, 시간제로 근로하고 있어 고용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육아 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는 매우 좁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육 서비스 지원도 취업 여성을 지원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우선 우리나라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은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에 우선적인 정책적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유럽 국가가 보육 서비스 지원의 목적을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를 통하여 지속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에 두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점이다. 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인 보육료 지원 정책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낮은 소득의 25%를 감면하여 지원하던 것을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으나 소득 기준만 완화하였을 뿐 실제적으로 취업 여성의 자녀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돌봄 노동 부담을 경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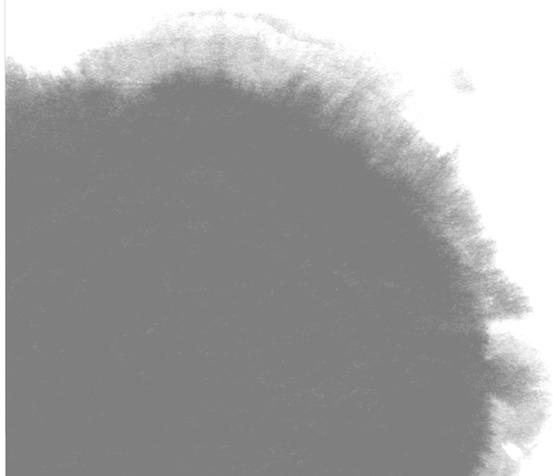
종합컨대 우리나라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은 저출산 이라는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재정 지원에 따라 가족 지원 정책의 핵심적인 세 가지 지원 정책 - 현금 지원 정책, 서비스 지원 정책, 자녀 돌봄 휴가 지원 - 간의 최상의 조합을 구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아동 양육은 더 이상 저소득층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 계층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비전과 목적성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04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론





제4장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론

1. 자녀 양육비의 개념 및 추계 관련 이슈

가. 자녀 양육비의 개념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Becker(1960)에 의해 창안된 출산율 결정 모형에 근원을 두고 있다. Becker(1960)는 자녀에 대한 수요가 주어진 소득 수준 하에서 자녀에게 지출하는 비용과 개인의 선호의 함수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 모형이 기초로 하고 있는 개념은 자녀는 매우 특별한 유형의 재화로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유지되는 자산이며 일련의 “복지”(welfare)를 생산해냄으로써 부모의 효용 함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현금 급여와 조세 감면을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것은 자녀에게 지출되는 “사적인” 비용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녀 양육비용 감소는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녀 보육비용 지원과 일과 가정의 양립 조화를 통한 자녀 양육비용의 감소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기대되고 있다.

자녀 양육비용과 그것을 측정하는 것은 부모가 부담하는 자녀 양육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어 한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국가가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직접적으로 얼마를 지출하는가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이외에도 주거비와 같이 가구 공통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자녀를 양육하는데 지출하는 “총 비용”을 추정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비용은 직접 비용, 간접비용, 종합적 비용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직접 비용과 간접비용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며 종합적 비용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다.

직접비용은 부양 자녀에 대해서 가구가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다. 직접 비용에는 식료품비, 의복비, 보육비, 교육비, 주거비 등이 포함된다.

간접비용은 소득 손실분으로서 자녀가 있음으로써 부모에게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러한 간접비용에는 기회비용이 포함되는데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둘 때 혹은 근로시간을 줄일 때, 그리고 자녀 출산에 따라 승진 등 직업에서의 성공이 늦추어 질 때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단기적인 비용 이외에도 연금 수당의 감소 등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비용도 포함된다. 간접 비용은 성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지워지고 있어 간접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성별 불평등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인 비용은 보육 혹은 교육에 대한 불충분한 투자가 인적 자본과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다. 보육 서비스의 불충분성은 노동력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고도로 숙련된 여성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함으로써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에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육·교육에 대한 불충분한 투자는 출산 결정에도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동의 건강과 교육의 결핍은 미래 인적 자본 축적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사회가 기초로 하고 있는 가치와 행동 규범을 전파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아동의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초기 투자는 아동의 사회성 및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며 학령기 교육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데 기여한다.

아동의 보육·교육에 대한 투자는 전체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어 아동을 “공공재”라고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나.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론 이슈

각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실제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요되는가를 계산하는 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우선적으로 가계 지출 특성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으며 그리고 “가계 동향 조사”와 같이 가계 지출 현황을 수집하는 자료의 한계를 지적 할 수 있다.

1인당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실제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자녀를 위한 지출에는 교육비, 의료비 등과 같이 자녀 1인에게 독립적으로 지출되는 항목 뿐 만이 아니라 식료품비, 가정 용품비와 같이 가구 전체를 위해서 구입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식료품비와 가정용품비는 1인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으나 광열비, 전기료, 자동차 연료비 등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각 가구원 1인에 대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의복, 장난감과 같이 자녀가 물려 쓰는 물품에 대해서는 첫째 자녀와 재화를 물려서 사용한 둘째 자녀 간에 지출액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자녀 1인당 지출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소비량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 일정한 가정을 통해 사용량 혹은 지출액을 추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광열비, 전기료, 자동차 연료비와 같이 가구원 공통으로 사용하는 품목을 제외하고 식료품비, 가정용품비와 같이 개개인의 소비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재화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개개인의 지출을 파악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일일이 개인의 소비량을 파악하는 작업이 쉽지 않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수집하는 자료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소비 지출 현황을 수집하는 자료는 가계가 전체적으로 지출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식료품비의 경우 가구원 개

개인이 얼마를 소비하였는지 수집하기 보다는 가계부 작성과 같이 특정 항목에 대해 가구원 전체를 위해 얼마를 지출하였는지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따라서 가구원 개개인에 대한 지출을 정확하게 기록한 데이터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아동 개인에게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아동에게 지출한 비용을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정”을 통해 자녀 양육비 지출액을 파악하고 있다. 각 추계 방법 모두 나름대로의 가정 하에 1인당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추계 방식에 따라 추계된 양육비 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론은 양육비 추계 목적에 부합되고 추계 방법론의 가정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현재 소비 행태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추계 방법이라 하겠다.

자녀 양육비용은 추계 방식이 “주관적”이나 혹은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자녀 양육비용을 “주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민 의견 조사를 통해 자녀 양육비용을 직접적으로 응답자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대표성 있는 가족에 대하여 자녀를 양육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물어 본 뒤 수집된 자료로부터 양육비용을 추계한다. 예산 분석(Budget analysis) 방법론은 주어진 연령대의 아동이 필요로 한다고 간주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표준적인 목록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소요되는 지출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방법은 자녀 양육비용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추계하는 방법으로 가계소비지출조사(expenditure survey)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자녀 양육비용 지출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느냐 여부에 따라 두당 비용 접근방법과 한계 비용 접근 방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아동 양육비를 추계하는 방식은 사용 자료에 따라서도 크게 1차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과 전국 단위로 조사한 2차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자료 활용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은 직접적인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자녀 양육비로 얼마를 지출하는가 물어 보는 방법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한 달 동안 자녀 교육비로 얼마를 지출하는가 물어보는 설문이 이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는 지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응답자의 직관에 의존하여 지출 현황을 물어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의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녀 양육비 지출액은 실제적으로 가계가 지출하는 비용이라기보다 자녀 양육비에 대한 응답자의 부담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1차 자료를 이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예산 분석 방법론”이다. 예산 분석 방법론은 아동이 일정 수준의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한가에 대해 전문가들이 목록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소비량과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1인당 아동 양육비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소비자 조사에 의한 1차 자료 활용 방법이 응답자들의 자의성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켓 바스켓 방법론은 재화와 서비스의 목록과 소비량,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전문가들의 자의성이 반영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종합컨대 1차 자료 수집에 의한 자녀 양육비 추계는 실제 지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조사 대상자의 판단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지출 비용이 추계된다는 한계가 있다.

2차 자료 활용 방법의 대표적인 사례는 크게 두당비용 접근법과 한계 비용 접근법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가계소비지출조사 방법론이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가장 많이 이용하여 왔다.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 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양육비용에는 가구 공통으로 소비하는 항목에 대한 지출이 포함되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가구 공통비용을 자녀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함에 있어 추계 방법론에 따라 다양한 가정을 하게 된다. 여기서 특히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다. 두당 비용 접근법이 가구 공통 항목에 대해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이 동일한 규모로 지출한다는 강력한 가정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한계 비용 접근법에서는 부모의 효용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론에 따라 다양하게 자녀 양육비용을 산출한다.

두 당 비용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가계 소비 지출 자료를 가구원수로 나

누어 1인당 지출 비용을 자녀 1인당 양육비용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모든 가구원이 동일한 비용을 지출한다는 상당히 강력한 가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두 당 비용 접근법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고 있다. 가계 지출 항목을 “성인만을 위한 항목,” “자녀만을 위한 항목,” “가구 공통비용”으로 나누어 성인만을 위한 항목을 제외하고 자녀만을 위한 항목 지출 비용을 자녀수로 나누고, 가구 공통비용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산출된 지출 비용을 합하여 1인당 자녀 양육비로 보고 있다. 미국의 USDA는 기본적으로 두 당 비용 접근법에 근거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매년 산출하고 있다. 각 항목별 지출액수를 종속 변수로 하고 월평균 가구 소득, 자녀 수, 막내 자녀 연령을 독립 변수로 하여 각 항목별 지출액수를 추계한 후 항목별 지출액수를 1인당 자녀 비용으로 환산하고 각 항목별 1인당 자녀 양육비용을 합하여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추계한다. 각 항목별 지출 추계액을 1인당 자녀 비용으로 환산함에 있어서 식료품비, 의료비, 주거비용 등 기존의 연구에서 전체 가구 지출 중 자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를 적용하여 1인당 자녀 비용으로 환산한다. 자녀 지출 비중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로 나누어 1인당 자녀 비용을 산출한다. 종합컨대 두당 비용 접근 방법은 비용을 가구원수 혹은 자녀수로 나누어 모든 가구원 혹은 자녀가 동일한 비용을 지출한다는 가정을 함으로써 가구원 특성에 따라 지출 비용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모는 추가적인 지출을 하게 되는데 가구 소득 수준이 그대로라면 자녀를 위한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전에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항목을 감소시키는 보상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한계 비용 접근법에서는 자녀 양육비용을 자녀가 태어나기 이전의 효용 수준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소득 액수라고 보고 있다. 이때 부모의 효용 함수를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따라 Engel, Rothbarth, Iso-Pro, Barten-Gorman 추계 방식으로 구분된다. Engel 방식은 총 지출에서 식료

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부모를 동일한 후생 수준에 있는 부모라고 보고 있으며, Rothbarth는 총 지출에서 성인들만이 지출하는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Iso-Pro 추계 방식은 식료품과 성인 지출 항목 이외 주거비, 의복비, 의료비 등 특정 소비 항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같은 부모를 같은 효용 수준에 있는 부모라고 본다. Barten-Gorman 측정 방식은 부모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부모의 간접 효용 함수로부터 추정하는 방법이다.

한계 비용 접근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 다른 유형의 다양한 가족들 간의 효용 수준을 단지 총 지출에서 몇가지 항목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만으로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상당한 제한점이 있다. 둘째,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함에 있어서 가구 소비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가정을 하느냐이다. 가구 소비 지출의 증가는 소비 지출에 대한 가족 내 의사 결정에 따른 결과이다. 자녀 출생에 따른 가족의 소비 지출 구조의 변화는 가구원간의 협상 과정(collective process)에 따라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볼 때 자녀 양육비용을 측정하는 것은 상당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자녀 출생이 가구 소비 유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어떠한 항목에 대한 지출은 상승하지만 어떠한 항목에 대한 지출은 감소하고 다른 항목에 대한 지출이 새로이 추가되기도 한다. 게다가 양육비 지출은 부모의 소득 수준, 선호, 자녀의 연령과 자녀수, 생활수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가 없는 가정간의 지출의 차이로서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부부의 소비 유형과 선호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 시장에서의 지위와 함께 부부가 통제할 수 있는 소득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자녀 양육비를 추계함에 있어서는 주거비, 자동차와 같이 가구원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항목에 대하여 어떠한 비율만큼 자녀 양육비에 지출하는 것인가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정에 있어서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 소비 지출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자녀 양육비용 추계 방법론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고찰해 보도록 한다.

2. 자녀 양육비용 추계 방법론

가. 소비자 조사에 의한 방법론

소비자 조사 방법에 의한 자녀 양육비 추계는 1차 자료 수집 방법을 이용한 가장 간단한 양육비 조사 방법으로서 응답자에게 자녀 양육비로 월평균 얼마를 지출하는가를 물어봄으로써 자녀 양육비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자녀 교육비 혹은 사교육비로 월 평균 얼마를 지출하는가를 조사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조사 방법론에 의해 자녀 양육비를 추계한 연구로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 조사”를 들 수 있다.

소비자 조사 방법론에 의해 조사된 자녀 양육비용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소비자의 주관적인 응답에 기초하여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보육비, 교육비와 같이 구체적으로 자녀에 대해 지출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에 근접한 자녀 지출 비용을 수집할 수 있으나 식료품비, 주거비 등 가구 공통으로 사용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녀에게 얼마를 지출하였는지 응답자 자신조차도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소비자 조사에 의해서는 전체 자녀 양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보다는 보육비, 교육비, 사교육비와 같이 구체적으로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항목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조사에 의한 자녀 양육비용 조사는 자녀 양육에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 보다는 주관적인 자녀 양육비 부담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에 얼마나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부담 수준, 그리고 자녀 양육비용으로 얼마를 기꺼이 지불한 것인가에 대한 지불 의도 (willingness pay)를 조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본다.

나. 예산 분석 방법론

소비자 조사에 의한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이 응답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반영된 것이라 한다면 예산 분석 방법론은 전문가의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된 자녀 양육비 조사 방법론이라 하겠다. 예산 분석 방법론은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와 소비 항목을 전문가가 리스트를 마련하여 각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량과 가격 수준을 적용한 후 지출액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예산 분석 방법론에 따라 가계 지출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최저 생계비 계측”이 있다. 호주에서는 1980년대에 Kerry Lovering이 예산 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계한 바가 있으며 1999년에는 Peter Saunders가 추계한 바 있다.

예산에 포함될 재화와 서비스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규범적인 방법” 혹은 “행태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규범적인 방법”은 일정한 생활수준을 누리기 위해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각 항목별로 적합한 소비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재화와 서비스의 항목과 소비량이 전문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행태적인 방법”은 규범적인 방법보다는 자의성이 좀 덜 심한 방법으로서 기존의 소비 행태에 대하여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재화와 서비스의 항목 및 소비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예산 분석 방법론은 실제적으로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지 않고 자녀 양육을 위해 얼마만큼을 지출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적인 성격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저 생계비 계측과 같이 일정 수준의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지출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적용하기 적합한 방법론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들이 얼마나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황 분석은 본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다. 두당 비용 접근법

두 당 비용 접근법은 거시적으로 자녀 양육비용을 측정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가계의 총 소비 지출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가구원 1인당 비용으로 산정된 비용을 1인당 자녀 양육비용을 간주하는 방법이다(허경옥, 2007). 두 당 비용 접근 방법은 자녀 양육비용을 측정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서 측정 과정이 간단하여 널리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모든 가구원이 모든 재화 및 서비스 항목에 대하여 동일하게 지출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가정을 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각 자녀마다 동일한 지출을 하고 있다는 가정은 자녀 양육비 지출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는 공통으로 지출되는 소비 항목이 있고 첫째 자녀가 사용하였던 재화를 둘째 자녀가 물려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둘째 자녀를 양육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은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데 지출되는 비용 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두 당 비용 접근법에서는 모든 자녀에 대해 동일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 자녀 양육비 지출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동일한 지출을 한다는 강력한 가정을 하고 있는 두당 비용 접근 방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두 당 비용 접근 방법을 적용하되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두당 비용 접근 방법의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교육비와 보육비 등 명백하게 자녀에 대해 지출하고 있는 항목만을 선정하여 항목별 총 지출액수를 자녀 수로 나누어 자녀 양육비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추계 방법은 가구원 공통으로 사용하는 지출 항목 - 예를 들면 주거비, 광열비, 교통비 등 - 과 같이 명백하게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지출 항목이 자녀 양육비 추계에서 누락되어 자녀 양육비용을 과소 추정하게 한다는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가구 소비 지출 항목을 “자녀를 위한 항목,” “성인을 위한 항목,” “가구원 공통 항목”으로 구분한 후 성인

을 위한 항목은 제외하고 “자녀를 위한 항목”은 자녀수로 나누고 “가구원 공통 항목”은 가구원 수로 나누어 각각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한 후 합하여 자녀 1인당 양육비용으로 추계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시도는 자녀와 성인에 대한 지출 비중을 각 지출 항목별로 추정 한 후 이러한 비율을 항목별 지출 추계액수에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식료품비, 의복비, 의료비, 주거비 등 각 지출 항목별로 성인 지출과 자녀 지출 비중을 환산 한 선행 연구가 존재해야 한다. 실제로 다음에서 논의할 USDA 추계 방식 에서는 식료품비, 의료비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 성인과 자녀 지출 비중을 추계한 선행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순희(1995)가 성인 1인당 자녀 1인의 지출 비중을 추 계한 바 있는데 성인 한명이 지출하는 액수의 약 87.5%를 자녀 한명을 위 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항목별로 성인 1인에 대한 자녀 1인의 지출 비중은 식비(0.817), 외식비(0.372), 의류비(1.135), 교통통신비 (0.231), 보건의료비(0.453), 교육비(5.188), 교양오락비(1.129), 기타비용 (0.345), 가구·가사용품비(1.035)로 추계 되었다. 그러나 정순희(1995)의 연구는 거의 15년 전에 수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루어진 가구의 소비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연구 결과를 현재의 시점에서 적 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USDA는 매년 자녀 양육비용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기 본적으로 두 당 비용 접근 방법에 기초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두 당 비용 접근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자세한 추계 방법은 아래에서 기술하기로 하고 추계의 주요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언급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가계 동향 조사 자료에 해당하는 Consumer Expenditure Survey(CES) 자료를 이용하여 성인에게 지출되는 항목을 제 외하고 자녀에게 지출되는 항목과 가구 공통으로 지출된다고 간주되는 지 출 항목인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의복비, 의료비, 보육·교육비, 기타 잡비로 항목을 구성한다. 둘째, 각 항목별 지출 비용을 종속 변수로 하고

가구소득, 자녀수, 막내 자녀 연령을 독립 변수로 하여 항목별로 총 지출액수를 추계한다. 셋째, 항목별로 추계된 총 지출액수를 1인당 자녀 양육비로 환산하기 위하여 식료품, 의료비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자녀 1인당 지출 비중이 추계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러한 비중을 적용하여 1인당 자녀 양육비를 추계 한다. 보육·교육비용의 경우 자녀에게만 지출한 비용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자녀수로 나누어 1인당 자녀 비용으로 환산한다. 주거비, 교통비, 기타 잡비와 같이 가구 공동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가구원수로 나누어 자녀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한다. 넷째, 이러한 항목별 자녀 1인당 비용을 합산하여 전체 자녀 1인당 지출 비용을 추계한다. USDA 측정 방식에서는 자녀수, 자녀 연령, 소득 수준,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역, 모의 학력 수준을 독립 변수로 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였으므로 각 인구 집단별 특성에 따라 자녀 양육비용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라. USDA 자녀 양육비용 추계 방법론

미국 농무성(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은 1960년 이래 17세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추계해 왔다. USDA가 추계한 자녀 양육비용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주 정부가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적용하는 기초 자료 및 이혼 부부 일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청구하는데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가장 최근 추계로서 2008년도 자녀 양육비용 추계는 2005~2006년도 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적용하여 2008년도 가격으로 환산한 뒤 추계에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 가구는 17세 이하의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는 핵가족으로 하였다.

USDA는 식료품비, 교통비, 의료비, 의복비, 보육·의료비, 기타 잡비에 대한 지출 비용을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소득 수준, 가구원수, 막내 자녀 연령을 독립변수로 하여 추계하였다. 소득 수준 변수는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의 더미변수로서 소득 수준은 분석 샘플을 소득 수준에 따라 3

분위로 구분하여 소득 집단을 정의하였다. 가구원 수는 자녀수의 더미 변수로서 1자녀 가정, 2자녀 가정, 3자녀 이상 가정으로 구분하였다. 막내 자녀 연령 역시 더미 변수로서 전통적인 아동 발달 단계에 따른 연령 구분을 적용하여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7세로 나누었다.

$$E_i = f(Y, HS, CA)$$

E_i =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한 가구 지출액 (식료품비, 교통비, 의료비, 아동 의복비, 보육·교육비, 기타 잡비)

Y = 월평균 소득 더미변수

저소득층 = 1 if 월 평균 소득 \$56,870 이하, otherwise = 0,

중산층 = 1 if \$56,870 초과 and \$98,470 이하, otherwise = 0,

상류층 \$98,470 이상

HS = 자녀수 더미변수

1자녀 가정 = 1 if 자녀 1명, otherwise = 0,

2자녀 가정 = 1 if 자녀 2명, otherwise = 0,

3자녀 이상 가정 = 1 if 자녀 3명, otherwise = 0

CA = 막내 자녀 연령 더미 변수

막내 자녀 0~2세 = 1 if 막내 자녀 연령 0~2세, otherwise = 0,

막내 자녀 3~5세 = 1 if 막내 자녀 연령 3~5세, otherwise = 0,

막내 자녀 연령 6~8세 if 막내 자녀 연령 6~8세, otherwise = 0,

막내 자녀 연령 9~11세 if 막내 자녀 연령 9~11세, otherwise = 0,

막내 자녀 연령 12~14세 if 막내 자녀 연령 12~14세, otherwise = 0,

막내 자녀 연령 15~17세 if 막내 자녀 연령 15~17세, otherwise = 0,

식료품비, 교통비, 보육·교육비, 기타 잡비는 OLS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회귀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의료비와 아동 의복비의 경우 전체 샘플의 약

10%가 동 항목에 대하여 아무런 지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지출액을 추계하였다. Tobit 모형을 이용한 이유는 분석 샘플의 상당수가 지출액이 0일 경우에는 OLS 보다 Tobit 모형이 통계적으로 편차가 적은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Tobit 모형을 통해 추정된 수치는 McDonald와 Moffitt(1980) 방법론을 적용하여 달러로 전환시켰다.

각 항목별로 총 지출 비용을 추계한 후 이러한 지출 비용을 1인당 자녀 양육비용으로 환산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식료품비와 의료비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전체 지출 중 자녀에 대한 지출 비중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1인당 자녀 비용으로 환산하였다. 식료품비용의 경우 2008년 USDA Food Plans이 제공하는 자녀 식료품비 비중 자료를 적용하여 추계된 식료품 지출액에 적용하여 자녀 1인당 식료품 지출 비용을 추계 하였다. 의료비의 경우 2005년도 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비 본인 부담금 중 자녀에 대해 지출한 비용을 적용하여 자녀에 대한 비용을 추계하였다. 의복비와 보육 교육비는 자녀에 대해 지출한 항목만을 구분할 수 있어서 이러한 지출 항목만 포함한 후 자녀수로 나누어 1인당 자녀 비용으로 환산하였다. 교통비와 기타 잡비는 전체 가구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특별히 자녀에 대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동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원 수로 나누어 1인당 자녀 비용으로 추계하였다.

한편, 주거비용에 대해서는 2008년 이전에는 위에서 언급한 추계 방식의 각 모형에 따라 추정된 가구당 총 주거비용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이를 1인당 자녀 주거비용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USDA가 특별하게 고안한 “추가적인 침실에 대한 평균 비용 접근법(the average cost of an additional bedroom approach)”을 적용하여 자녀 1인당 주거비용을 추계하였다. 동 방식에서는 자녀 양육 관련 주거비용을 자녀가 있는 가정이 더 많은 침실이 있음으로 해서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다변량 분석을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 수준을 통제하고 주거비용을 가정 내의 침실 수에 따라 회귀 분석하여 추가 비용을 자녀 1인당 주거비용이라

고 간주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각 항목별 자녀 1인당 지출 비용을 모두 합하여 1인당 자녀 양육비용으로 추계하였다. USDA는 동 추계 모형을 적용하여 소득 수준별, 자녀수별, 자녀 연령별로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인구 집단별로 양육비 지출 추계액 규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마. 한계 비용 추계 방법론

한계 비용 추계 방법론의 기본적인 가정은 1인당 자녀 양육비란 자녀가 있는 부부가 자녀가 없었을 때 누렸던 동일한 수준의 후생 수준을 누리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출 수준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없던 가정에서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소득 수준이 이전과 동일한 경우 자녀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부부가 이전에 지출하였던 항목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만 한다. 이러한 재화가 부부의 효용 수준을 증가시키는 정상재일 경우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출 감소는 부부의 효용 수준을 낮추는 것을 결과케 한다. 따라서 이전과 동일한 효용 수준을 누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며 이 추가적인 지출 비용을 한계 비용 추계 방법론에서는 바로 자녀 1인당 비용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계 비용 추계 방법론에서 자녀 1인당 비용은 첫째 자녀의 경우 “동일한 후생 수준”에 있는 자녀 없는 가정과 1자녀 있는 가정의 지출의 차이로 보고 있으며, 둘째 자녀의 비용은 역시 “동일한 후생 수준”에 있는 1자녀 가정과 2자녀 가정 사이의 지출 비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때 동일한 후생 수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추계 방법론을 적용하게 된다.

Engel 추계 방식에서는 총 지출에서 식료품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동일한 가구를 동일한 효용 수준에 있는 가구라고 보고 있다. Rothbarth 추계 방법은 총 지출에서 담배, 술과 같이 성인들만이 지출하는 항목의 비

중이 같은 가구를 동일한 후생 수준에 있는 가구라고 정의한다. Iso-prop 추계 방식은 주거비, 의복비, 의료비 등 특정 소비 항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같은 가정을 동일한 후생 수준에 있는 가정이라고 간주한다.

Barten-Gorman 방법은 부부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부부의 간접효용함수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일정한 효용 함수를 가정하고 가계 지출 자료로부터 소비함수를 추정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산출하는데 부모의 효용함수는 비목별 소비량의 함수이며 가구원 전체를 위한 총소비량 가운데 부모가 소비하는 부분의 함수로 표현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자녀 출산 전후의 동일한 효용수준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소비지출 수준을 비목별로 산출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정한다. Barten-Gorman 방법에서 자녀수의 증가에 따른 필요 소비지출의 증가분은 소비품 가격함수에 반영되어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출 비용이 증가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자녀수가 증가하면 자녀가 없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효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총지출이 커진다는 수요함수의 매커니즘을 반영하고 있다(이성림, 2007).

한편, 한계 비용 추계 방법을 적용한 자녀 양육비 추계에서 중요한 개념이 소비 단위(consumption unit: CU)라는 개념이다. 소비 단위라는 개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여러 명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가계는 공통으로 가계의 자원을 활용하여 일정 수준의 생활수준을 누리고 산다. 만일 가구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살게 된다면 같은 수준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높은 개인 소득을 가져야만 한다. 함께 사는 부부가 혼자 사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효용을 느끼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명은 혼자 사는 사람과 동일한 소비 지출을 해야 하지만 부부 중 다른 한 명은 파트너 보다 더 적은 소비 - 예를 들어 파트너 소비 지출액의 75%만 소비해도 - 를 해도 동일한 효용 수준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첫 번째 파트너는 “consumption unit(CU)”라고 명명하며 다른 파트너는 0.75 CU라고 한다.

한 가정 내에서 CU는 재화 유형, 가족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동등가치비율(equivalence scale)은 서로 다른 가구원에게 적용되는 일련의 계수(coefficients)로 나타난다. 동등가치비율은 가구원수, 연령, 성인과

어린이의 구분에 따라 다양하게 측정된다. 더 상세하게는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등 세부 인구 집단에 대해서도 동등가치비율은 측정된다. 동등가치비율이 자녀 양육비 추계에 갖는 함의점은 동등가치비율이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정의가 자녀가 없는 가정과 비교하여 동일한 효용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부부가 추가적으로 지출해야만 하는 비용이라는 정의에 근거하고 있다.

동등가치비율을 계량적으로 추정하는데 필요한 가정들은 자녀 양육비용 추계액의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동등가치비율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론적인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동등가치비율을 측정하는데 있어 다양한 접근 방식이 이용되고 있어 각각의 연구 결과들이 사용한 방법론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자녀 양육비용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방법론에 기초하여 추정된 양육비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Engel 방법론이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동등가치비율을 추정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고 있다. 식료품 혹은 의복비에 대한 지출이 가계의 총 지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근거로 동등가치비율의 계수가 추정된다. 식료품 소비 함수가 계량 경제 모형을 통해 추정되는데 동 모형에서 종속 변수는 가계 총 지출에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독립 변수는 자녀수와 같은 가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다. 여기서 알려지지 않은 변수는 가계의 소득이며 식료품비 지출액은 고정되고 있다고 간주되고 있다. 동 모형이 갖는 장점은 간단하다는 것으로서 이는 식료품 지출이 기본적인 필수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로서 소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식료품비 비중이 감소하고 가구원 수 증가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식료품 비중의 증가는 가구원 수의 증가에 따른 “효용” 수준의 감소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식료품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거비, 의복비, 혹은 이러한 비용의 총합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지출비 비중을 사용하는 경우 서로 다른 동등가치비율이 추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사이에서 지출액 비중이 유사하다는 가정도 상

당히 논쟁적인 이슈이다. 이러한 한계점의 가장 단적인 사례가 프랑스의 경우 세 자녀를 가진 가계의 식료품 지출액이 자녀가 없는 가정과 비교하여 세배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출액 비중이 단지 소득 수준에서의 차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 생활수준,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질적인 차원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른 방법론으로서 Barten, Prais & Houthakker, Rothbarth 접근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론들은 Engel에 의한 방법론 보다 가계의 소비 행태를 보다 잘 반영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Barten(1964)은 소비 단위를 직접 가구의 효용 함수에 포함시켜서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모형 설정의 결과 가구원 구성에서의 변화가 재화 지출액에서의 변화에 그대로 반영된다. Prais와 Houthakker(1955)와 Rothbarth (1943)는 전체 소비 범위를 고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각 유형의 재화에 대한 주어진 지출 비중을 소비하는 각각의 가계에 대하여 암묵적인 가정을 내리고 양육비용을 추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식료품비, 의복비, 교통비, 여가비, 기타 항목에 대한 지출 비중에 자녀가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한 후 이로부터 가중치의 합으로서 양육비용을 추계하였다.

3. 자녀 양육비용 추계 사례

가. 국내 사례

문숙재와 김성희(1995)는 서울시 거주 가계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월 평균 자녀 양육비는 9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양·교육·오락비에 가계 소득의 51%(53만 9천원)를 차지하는 가장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식비로서 가계 소득의 20% (21만 5천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의복비는 가계 소득의 7%(7만 3천원), 자녀 양육 대체비는 가계 소득의 4%(4만 3천원)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주부의 교육 수준, 근로 소득, 생활 주기, 자녀 수, 자녀의 신체적 건강으로 나타났다.

정순희(1996)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Laser와 Michael(1988)의 가족구성원간의 소득배분구조 연구를 적용하여 성인 1인당 자녀 1인의 지출 비율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성인 한명이 지출하는 액수의 약 87.5%를 자녀 한명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성인 1인의 지출액에 비해서 자녀 1인의 지출액이 월등히 높은 항목은 교육비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의류비, 교양오락비, 가구가사용품비 등이 성인에 비해 자녀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교통통신비는 성인 1인의 지출량의 약 23%만을 자녀 1인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핸드폰이나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조사된 자료이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

허경옥(1997)은 한국가구패널조사자료(1995년)를 이용하여 Espenshade(1984)의 식비지출비율모델을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 지출액을 추계하였다. 한자녀 가계의 경우 53만원(가계소득의 37%), 두 자녀 가계의 경우 75만원(가계소득의 46%), 세 자녀 가계의 경우 93만원(가계소득의 56%)으로 산출되어 자녀 양육에 대한 지출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출생 순위가 낮을수록 자녀 양육에 더 낮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의 자녀 양육비 지출액수를 추계한 결과 한자녀 가계의 경우 1억 2천 3백만 원, 두 자녀 가계의 경우 1억 8천 1백만 원, 세 자녀 가계의 경우 2억 1천 6백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권 외(2006)는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이하 출산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산출하였다. 자녀 양육비는 “시민의식조사”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한 가구원 면접조사 방식을 통하여 전체 가구에 대해 지출한 식료품비, 피복 및 신발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및 관련 비용, 보충교육비(사교육

비) 및 관련비용, 주거 및 광열 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특히 식료품비, 피복 및 신발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및 관련 비용, 보충교육비(사교육비) 및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대해 각각 얼마를 지출하였는지 기입하도록 하였다. 자녀 양육비는 “가족 공통비용 중 개인 자녀의 몫”과 “자녀 개인 비용”을 합한 비용으로 보았다. 분석 결과,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는 91만 2천원으로 가족 공통비용 중 개인 자녀의 몫은 35만 6천원, 자녀 개인 비용은 55만 6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개인 비용을 항목별로 보면 사교육비 20만 3천원, 식료품비 15만 4천원, 교육비 13만 1천원, 의복·신발비 4만 8천원, 보건 의료비 2만 1천원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박세경(2006)은 2003년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여 가계를 고소득가계와 저소득가계로 구분하고 각 소득집단 내에서 식료품비 비율 등급을 5단계로 구분하여 동일한 식료품 비율 등급 내에서 무자녀 가계와 유자녀 가계 사이의 소비 지출 차이를 자녀 양육비 규모로 제시하였다. 양육비용 추정결과 자녀 1명 양육비는 저소득가계에서 약 30만원~63만원, 고소득가계에서 약 44만원~8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는 저소득가계에서 약 36만원~78만원, 고소득가계에서 약 59만원~135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경옥(2007)은 기본적으로 두당 비용 접근법에 근거하되 두당 비용 접근법이 가지고 있는 분석상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시도하고 각 추계 방법론에 따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두 당비용 접근법으로서 총 소비지출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1인당 자녀 양육비용으로 추계하였다. 두 번째, 소비 지출 항목을 자녀만을 위한 항목과 가구 공통 지출 비용만을 포함하도록 하여 자녀만을 위한 지출 항목을 자녀 수로 나누고 가구 공통비용은 가구원 수로 나누어 각각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한 후 합하여 자녀 1인당 양육비로 추계 하였다. 셋째, 총 지출에서 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경제적 생활수준으로 간주하는 Engel 추계 방식에 의해 1인당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였다. 넷째,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과 소비 지출을 통해 생산되는 자녀 양육 생산물의 개념을 활용한 “가정 생산의

위성 계정표 응용방법”을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 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 지출 중 자녀만을 위한 항목과 공동사용 항목으로 구별하여 자녀 양육비를 산정한 결과는 두당 자녀 양육비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가비용개념을 활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정한 결과는 앞서 두 가지 방법에 의한 것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가정 생산의 위성계정표를 응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측정된 결과 자녀양육 생산물은 총가정생산물의 27%로 우리나라 전체 GDP의 1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자녀양육비용이 자녀 양육에 따른 시간 비용까지 포함하는 경우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차지한다고 강조하였다.

나. 한계 비용 추계 방법론 적용 연구 결과

미국의 Beston(1990)은 Consumer Expenditure Survey(1980~1986) 자료를 활용하여 Engel, Rothbarth, Iso-prop 측정 방식을 각각 이용하여 1인당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고 각 방법론에 따라 추계된 양육비 결과를 비교하였다. Engel 방식에서는 식료품 지출 비용을 가정 내에서의 식료품 지출 비용과 외식까지 포함한 총 식료품비용으로 나누어 각각의 비용이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가구를 동일한 후생 수준이 있는 가구라고 가정하였다. Rothbarth 측정 방식에서는 성인에 대한 지출 항목을 선정함에 있어 성인 의복, 술, 담배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성인 의복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Iso-props 측정방식에서는 특정 소비 항목을 선정함에 있어 가정내 식료품비, 주거비, 의복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가정 내 식료품비, 주거비, 의복비가 차지하는 비중, 가정 내 식료품비와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Engel, Iso-prop, Rothbarth의 방법론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양육비 추계 결과가 도출되었다. 각 분석 방법론에 있어서도 지출 항목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에 따라서도 양육비 추계 결과는 다양했다. 예를 들면 Engel 추계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식료품비 비중을 가정 내 식료품비

비중으로 가정한 경우와 외식비용까지 합친 식료품비 비중으로 가정한 경우 각각 다른 추계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한계 비용 추계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어떠한 추계 방법론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자녀 1인당 양육비 추계 결과는 다양하게 산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인다. 또한 같은 방법론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비용 항목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역시 결과가 다양해 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Engel 추계방식에서 가정 내 식료품비 지출 비중을 이용한 경우 가장 높은 1인당 자녀 양육비가 추계되었으며 이 결과는 총 지출을 가구원수로 나눈 per capita 추계 방식에 의한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Iso-prop 측정 방식과 Rothbarth 측정 결과를 볼 때 소비 지출 항목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킬수록 높은 양육비 측정치를 보였으며 협소하게 포함시킬수록 자녀 양육비는 적게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Iso-prop 측정 방식의 경우 지출 항목에 가정내 식료품비, 주거비, 의복비, 의료비를 포함한 경우(Iso-prop(1))가 지출 항목에 가정내 식료품비와 주거비만 포함한 경우(Iso-prop(3))보다 높은 자녀 양육비 추정결과를 보이고 있다. Rothbarth 측정 방식의 경우 성인 지출 항목에 성인 의복, 술, 담배를 포함한 경우(Rothbarth(1))가 성인 지출 항목에 성인 의복비만 포함한 경우(Rothbarth(2))보다 높은 자녀 양육비 측정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자녀 양육비 측정 방법론에 따라 자녀 양육비 측정 결과가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총 지출에서 자녀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 양육비는 증가하지만 감소하는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ngel(1) 추계 방식에 따른 결과의 예를 보면 자녀 1명에 대한 연간 양육비는 9,905달러로 추정되었는데 자녀 2명을 양육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4,839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둘째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첫째 아이를 키우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약 절반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한다. 셋째 아이가 추가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3,053달러로 둘째 아이를 양육할 때 추가

되는 비용의 약 63%, 그리고 첫째 아이를 양육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약 1/3 정도만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수준별로 자녀 양육비를 추계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의 후생 수준을 총 소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정한 Engel 추계 방식과 성인에게 지출하는 항목으로 추정한 Rothbarth 추계 방식의 경우 자녀 양육비가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 수준별로 그다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가구에서 지출하는 다양한 항목에 대한 지출 비중으로 자녀 양육비를 추정한 Iso-prop 추정 방식을 이용한 경우에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 총 지출에서 자녀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추정 결과 (Betson, 1990)

	Engel		Iso-prop			Rothbarth		per capita
	1	2	1	2	3	1	2	
자녀수								
1명	33	30	16	13	9	25	23	33
2명	49	45	29	27	21	35	33	50
세명	59	55	41	41	34	39	37	60
자녀 연령								
4~8세	46	37	27	25	22	36	33	50
9~10세	49	45	29	27	21	35	33	50
11~16세	53	50	34	32	24	-	-	50
소득수준								
저소득	49	46	34	33	28	36	36	50
중산층	49	45	29	27	21	35	33	50
고소득	49	45	27	23	17	35	31	50

주: 1) Engel(1)은 가정내 식료품 지출 비중, Engel(2)는 총 식료품 비중, Iso-prop(1)은 가정내 식료품비, 주거비, 의복비, 의료비 비중, Iso-prop(2)은 가정내 식료품비, 주거비, 의복비 비중, Iso-prop(3) 가정내 식료품비와 주거비 비중, Rothbarth(1)은 성인 의복, 술, 담배 비중, Rothbarth(2) 성인 의복비 비중으로 효용 수준을 추정함.
 2) 양부모 모두 있는 가정으로 자녀수와 자녀 연령 분석은 연간 소비 지출액이 \$30,000인 가정 대상임
 3) 자녀1명 가정은 자녀 연령 8세, 자녀2명 가정은 자녀 연령이 각각 8세와 10세, 자녀3명 가정은 자녀 연령이 각각 4세, 8세, 13세라고 가정함.

자료: Lewin/ICF (1990) "Estimates of Expenditure on Children and Child Support Guidelines"

〈표 4-2〉 미국의 연간 1인당 자녀 양육비 추정 결과 (Betson, 1990)

(단위: 달러)

	Engel		Iso-prop			Rothbarth		per capita
	1	2	1	2	3	1	2	
자녀수								
1명	9,905	9,010	4,807	3,874	2,796	7,480	6,994	10,000
2명	14,744	13,606	8,757	8,064	6,315	10,595	9,815	15,000
3명	17,797	16,598	12,357	12,217	10,181	11,762	11,126	18,000
자녀 연령								
4~8세	13,674	11,146	6,028	7,370	6,728	10,781	9,847	15,000
9~10세	14,744	13,606	8,757	8,064	6,315	10,595	9,815	15,000
11~16세	15,788	15,060	10,280	9,605	7,206	-	-	15,000

주: 1) Engel(1)은 가정내 식료품 지출 비중, Engel(2)는 총 식료품 비중, Iso-prop(1)은 가정내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의류비 비중, Iso-prop(2)은 가정내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비중, Iso-prop(3) 가정내 식료품비와 주거비 비중, Rothbarth(1)은 성인 의복, 술, 담배 비중, Rothbarth(2) 성인 의복비 비중으로 효용 수준을 추정함.
 2) 연간 소비 지출액이 \$30,000인 양 부모 모두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추정 결과임
 3) 자녀1명 가정은 자녀 연령 8세, 자녀2명 가정은 자녀 연령 8세와 10세, 자녀3명 가정은 자녀 연령 4세, 8세, 13세로 가정함.
 자료: Lewin/ICF (1990) "Estimates of Expenditure on Children and Child Support Guidelines"

호주의 Harding과 Percival(1999)은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1993~94) 자료를 활용하여 Barten-Gorman, Iso-prop, 마켓 바스켓 측정 방식을 활용하여 1인당 자녀 양육비를 추계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미국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추계 방법론에 따라 자녀 양육비가 다양하게 추정되었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마켓 바스켓에 의한 자녀 양육비 추정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Iso-prop 측정 방식에 의한 추정 결과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Barten-Gorman 측정 방식에 의한 추정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중산층 가정이 자녀에 대해 지출하는 양육비 규모가 저소득층 가정에 비해 높다. 또한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양육비 지출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두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한 자녀를 양육할 때 지출되는 비용보다 낮고, 또한 세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두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보다 낮다. 이러한 사실 역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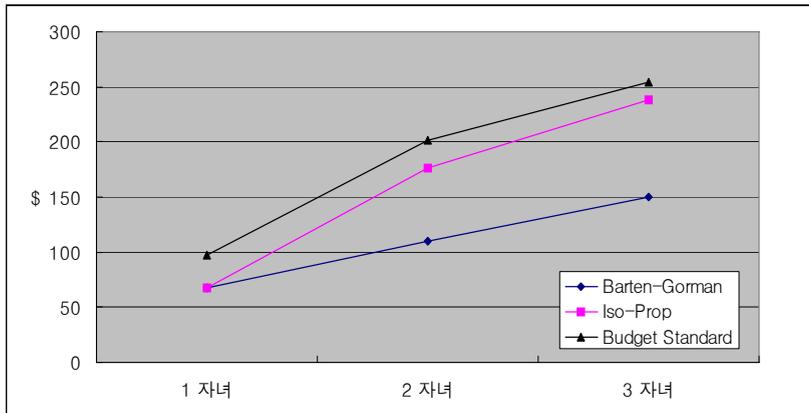
〈표 4-3〉 호주의 주당 1인당 자녀 양육비 추정 결과 (Harding과 Percival, 1999)

(단위: 달러)

자녀수	저소득 가정				중산층가정			
	총지출	BG	Iso-prop	마켓바스켓	총지출	BG	Iso-prop	마켓바스켓
1자녀	458	68	68	97	613	92	116	135
2자녀	552	110	176	202	749	150	253	278
3자녀	604	150	238	254	895	227	378	425

자료: Harding & Percival (1999) "The private costs of children in 1993~94" Family Matters No.54 Spring/Summer

〔그림 4-1〕 호주의 주당 1인당 자녀 양육비 추정 결과 비교 (Harding과 Percival, 1999)



주: 저소득 가정 자녀 양육비 추정 결과

자료: Harding & Percival (1999) "The private costs of children in 1993~94" Family Matters No.54 Spring/Summer

다. EU 국가의 사례

EU 국가의 선행 연구 결과들은 자녀 양육비 지출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면서 자녀 양육비용과 가족의 크기와의 관련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한 부모 혹은 조손 부모 등 가족의 유형이 자녀 양육비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논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EU 국가에서 수행된 자녀 양육비용 추계 결과를 검토한다.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는데 가장 쉽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자녀가 있는 가계와 없는 가계의 지출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Bauer과 Retting(2002)의 연구가 있는데 동 연구에서는 소비 유형, 경제 수준, 자녀 연령별로 자녀 양육비 지출액을 다양하게 추계하였다. 양부모 가정과 한 부모 가정 각각에 대해서 양육비를 추계하였으며 주거비, 교통비, 의복비, 보건의료비, 보육비, 교육비용을 각각 비교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식료품비용이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자녀 양육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비용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자녀 연령이 6세가 될 때 까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통비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소비 유형을 기초로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한 Bellamy(2007) 연구에서는 보육·교육비용과 의복비용이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지출 유형에 근거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한 결과는 가구 소비 지출에서 작용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간과하여 양육비용 추계 결과를 왜곡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유럽 국가에서는 수행된 많은 연구들은 동등가치비율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고 있으며 본 장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산출된 자녀 양육비용의 결과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모색해 본다.

Glaude와 Moutardier(1991), Hourries와 Olier(1997)의 연구 결과에서는 1인당 자녀 양육비용이 자녀가 없는 부부 지출 비용의 약 2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연구 결과가 추정한 양육비용은 가계의 특성과 추계에 사용한 방법론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다. 프랑스에서 자녀 양육비용은 연도마다 추정되었는데 자녀 양육비용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및 1990년대에 걸쳐 별다른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자녀가 1명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자녀 양육 한계 비용은 출생 순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 양육비용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을 보였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는 특히 세 번째 자녀 출

생 이후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주거비용의 감소가 지적되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셋째아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1990년이 이래 점차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 양육비용은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이유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가구 소비 지출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자녀 양육비용을 자녀가 성인기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만 측정하였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녀가 성인기로 성장하게 되면 여가 비용 등 특별한 필요가 발생하게 되어 부모를 위한 지출을 줄이는 것을 결과케하여 가구 소비 지출 구성이 달라지게 된다(Ekert, d'Arbonville & Witter, 1995). 성인기 이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출 결과를 보면 양육비용과 자녀 연령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주관적인 척도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추계한 연구 결과에서는 영아 시절부터 청소년 시작 무렵까지 자녀 양육비 지출이 일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Hourries & Olier, 1997), 객관적인 척도를 사용한 연구 결과에서는 자녀 양육비 지출이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laude & Moutardier, 1991; Van Imhoff & Odink, 1994). 자녀가 14세 이전에 도달할 때 까지는 총 가구 소비 지출의 약 0.1~0.2%를 차지하고 있으나 25세까지의 성인기 청소년의 경우 평균적으로 가구소비지출에서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4세 자녀의 경우 총 가구 소비 지출에서 41%를 차지하고 있다(Hourriez & Olier, 1997). 자녀 양육비 지출의 증가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소비 지출 패턴이 변화하는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기 자녀의 주요한 소비 품목으로는 교통비, 휴가비, 교육비로 나타나는 반면, 어린 자녀에 대한 주요한 소비 품목은 식품비 및 주거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소비 유형의 변화는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는 방법론상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식품비 지출액이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데 영

겔 모형에서는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는데 있어 식품비 지출 비중을 기초로 하고 있어 16세 이상의 자녀 양육비 추계액이 낮게 추계되는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유럽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등가치비율은 가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등 가치 비율이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출 항목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용한 추계 방식에 따라서도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식료품 지출에 있어서 가계의 생활수준과 동등가치비율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거나 혹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복비 지출에 있어서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kert & Trognon, 1994; Glaude & Moutardier, 1991). Wittwer(1993)은 식료품 지출과 관련한 동등가치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지만 자녀가 상대적인 주거비 지출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소득이 높은 가계가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가계에 비해 주거비에 대한 지출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Wittwer는 또한 가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지출 비용이 증가하며 가계 지출의 증가와 함께 자녀에게 지출되는 비중 역시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자녀 질(quality)의 효과"가 존재하며 소득이 높은 가계가 자녀에게 더 많이 투자한다고 강조하면서 Becker의 이론을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첫째, 상기의 연구들에서는 식료품비 혹은 주거비 등 의식주에 관련된 비용을 주로 다루고 보육·교육비 지출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다. 보육·교육비용이 부모가 자녀의 질에 투자하는 가장 전형적인 지출 항목임을 고려해 볼 때 가계 소득 수준에 따른 보육·교육비 지출 행태의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가계 소득의 증가에 따라 자녀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자녀에 대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되어 야기된 것이라기보다 가계의 선호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 수준 향

상에 따라 자녀에 대해 지출되는 비용이 객관적으로 증가한 경우이어야만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를 위한 논거를 찾을 수 있으며 단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가계의 선호나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자녀 양육비 지출이 증가한 것이라면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 확대에 대한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다.

셋째, 가계 소득 수준에 따른 자녀 양육비 지출의 변이는 가계가 어떤 소득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 다양하다. Ekert와 Trognon(1994), Ekert(1998)는 자녀 양육비는 특히 소득 분포의 양극단에서 다양하다고 지적하였다. 식료품비 지출에 있어서 최저소득층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지출액이 추가적인 성인 1명에 대한 지출액보다 더 높은 반면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지출액은 성인 지출액의 1/3 정도로 하락한다. 이러한 현상은 서로 다른 지출 항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넷째,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간과하기 어렵다. Ekert(1998)는 소득 수준이 향상함에 따라 자녀 양육비 지출이 일정 정도 증가하는데 자녀 양육비 추계는 이러한 가계의 선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Hourriez와 Olier(1997)는 가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 양육비에 대한 주관적인 비용 부담이 감소한다고 보았다. 가계 소득 증가에 따른 자녀 양육비용 부담이 객관적인 비용 증가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가계의 인식 변화에 따른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섯째,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시장에서의 소비 지출액이다. 이러한 추계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중요하고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부모의 시간”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부모의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제 활동, 다른 가사 활동, 여가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모에게 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다. 자녀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을 자녀 양육비용에 포함시키는 경우 자녀 양육비용 추계액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시간 비용은 가계 내에서 부부가 노동과 가사 노동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Apps & Rees, 2002).

여섯째, 자녀 양육비용을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특정한 문화적 차이와 습성이 소비 행태의 공통적인 패턴을 결정한다고 볼 때 동등가치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국가 내의 표준적인 생활수준에 있어서 상대적인 차이 비교만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가계의 소비 패턴에 미치는 영향은 각 국가의 문화적 양식에 따라 다양하며 자녀 양육에 소비할 수 있는 각 국가 내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비용에 따라서도 다양할 수 있다.

4. 자녀 양육비용 추계를 둘러싼 쟁점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초반 아동보건 및 인간발달국(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NICHD)의 지원으로 자녀 1인당 양육비 추계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으며 이때 한계비용 측정 방식에 기초한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Espenshade(1984)는 엔겔방식에 따른 추계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Lazear과 Michael(1986)은 Rothbarth 추정 방식에 기초하여 다양한 추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Turchi(1983)는 Prais-Houthakker 추계방식을 이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였으며, Olson(1983)은 특정 효용 함수를, Mathtech(1981)은 다양한 효용함수를 이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계 하였다. 또한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Betson(1990)은 미국 보건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의 지원으로 Consumer Expenditure Survey(1980~1986) 자료를 이용하여 Engel, Iso-prop, Rothbarth 추정 방법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 비용 측정 방식을 적용한 자녀 양육비 추계는 대부분 30년 전에 수행된 연구들이다. 따라서 과거 시대 가계의 소비 지출 행태를 가정하고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고 있어 현대 가정의 소비 지출 행태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OECD(2008)는 한계 비용 측정 방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다

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가정의 효용 수준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특정 품목의 지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정의 효용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둘째, 가족의 지출 행태는 가족의 의사결정의 결과인데, 자녀의 출생에 따른 지출 결정은 가정 내의 “협상 과정(bargaining process)”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가구 구성원의 효용 수준은 이러한 협상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째, 가구 소비 지출 행태는 다이내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의 출생은 가계 소비 지출 패턴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 한 가정에서 자녀가 출생함에 따라 특정 항목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다른 항목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고 또한 새롭게 지출되는 항목도 발생하게 된다.

종합컨대, 자녀에 대한 지출 비용은 부모소득수준, 부모의 선호, 자녀 연령, 자녀 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단순히 자녀가 있는 부부와 자녀가 없는 부부의 지출 수준의 차이를 가지고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소지가 크다. 자녀의 출산은 가족의 소비 패턴 및 부부의 선호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한편으로는 노동 시장에서의 지위의 변화(특히 여성인 경우)와 더불어 부부의 소득 수준에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양육비 추계 모형에서 부부의 선호 체계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강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계 비용 추정 방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2000년대 들어와서 한계 비용 추정 방식 보다는 1인당 비용 추정 방식을 적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한계 비용 추정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면서부터 1인당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론을 주로 사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USDA가 자녀 양육비용을 1인당 비용 추정 방법론에 기초하여 추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사례이다(USDA, 2009). USDA(2009)는 다양한 한계 비용 추정 방식들이 서로 매우 다른 수치의 1인당 자녀 양육비를 추계 하였으나 어떠한 추정 방식도 경제학자들에 의해 표준적인 추정 방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Lino는 한계 비용 추정 방식의 가장 큰 한계점

이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가 없는 가정간의 총 지출의 차이를 자녀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이라고 보고 이를 자녀 양육비로 간주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자녀가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고 향후 자녀 출산에 대비하여 큰 규모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과 자녀 있는 가정 간의 지출 차이를 자녀 양육비라고 간주하는 경우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는 과소 추정될 위험성이 크다. 한계 비용 측정 방식의 문제점으로 인해 미국의 USDA는 기본적으로 1인당 비용 측정 방식에 근거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고 있다. 1인당 비용 측정 방식도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한계 비용 측정 방식이 범하고 있는 오류보다는 덜 심각하다는 것이 Lino의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연구자들이 한계 비용 측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허경옥(2007)은 Engel 측정 방식을 이용한 Espenshad (1984)의 식비지출비용 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분석 시간을 요구하고 있어 쉽게 표준화시키기가 어려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가족의 크기와 구성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를 만든 후 각 해당 부문에 대해 동일한 식비 지출 비중을 같도록 하는 지출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방정식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Espenshad는 가계의 지출, 가계의 식비지출 비중을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고 있어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녀양육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출과 식비지출비중을 회귀분석으로 추정하고 있어 그 결과가 가상적이며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식비 지출이 가계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지 못하고 교육비, 통신비 등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아 식비 지출 비중 개념을 응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가계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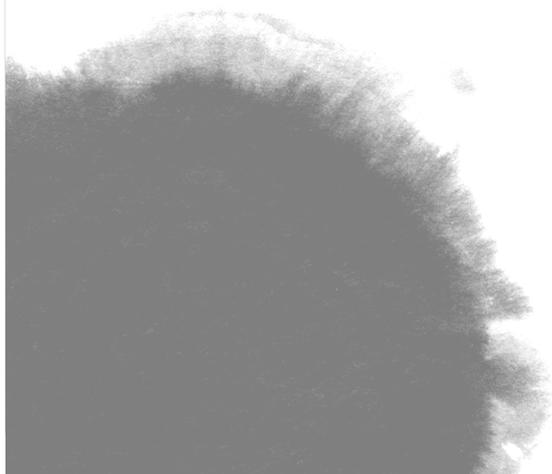
이성림(2007)은 우리나라 가계는 자녀수가 늘면 교육비 지출을 급격히 늘리고 식료품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소비지출 수준을 큰 폭으로 줄이는 소비패턴을 이루기 때문에 앵겔방법이나 Barten-Gorman 방법과 같은 일반적인 자녀 양육비 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정하기가 불가능하

다고 보았다. 엔겔방법은 가족구성이 같으면 총소비지출 금액이 증가할수록 식료품비 비율은 감소하고 총소비지출 금액이 같으면 가족 수가 증가할수록 식료품비가 증가한다는 엔겔법칙에 근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의 식료품비 비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식료품비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엔겔방법에 의해 자녀 양육비를 추정하기가 곤란하다. 특히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교육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Barten-Gorman 방법을 적용하여 부부가족 교육비 수준을 1로 할 때 유자녀 가계에 대한 균등화지수가 1보다 커지기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보상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녀 양육비용 자체가 적절하게 산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05

자녀 1인당 양육비 추계 결과





제5장 자녀 1인당 양육비 추계 결과

1. 추계 방법 개요

앞 장에서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한 선행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한계 비용 추정 방식을 적용한 자녀 양육비 추계는 대부분 30년 전에 수행된 연구들로서 과거 시대 가계의 소비 지출 행태를 가정하고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고 있어 현대 가정의 소비 지출 행태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녀에 대한 지출 비용은 부모소득수준, 부모의 선호, 자녀 연령, 자녀 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자녀가 있는 부부와 자녀가 없는 부부의 지출 수준의 차이를 가지고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소지가 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녀의 출산은 가족의 소비 패턴 및 부부의 선호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한편으로는 노동 시장에서의 지위의 변화(특히 여성인 경우)와 더불어 부부의 소득 수준에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양육비 추계 모형에서 부부의 선호 체계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강한 가정을 하고 있어 이것이 한계 비용 추정 방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이라 하겠다.

2000년대 들어와서 한계 비용 추정 방식 보다 1인당 비용 추정 방식을 이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인당 비용 추정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면서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는 주된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자녀 양육비용 추계를 들 수 있다(Lino, 2009). Lino(2009)는 다양한 한계 비용 측정 방식들이 서로 매우 다른 수치의 1인당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였으며 한계 비용 측정 방식을 이용한 연구 중에서 어떠한 측정 방식도 경제학자들에 의해 표준적인 측정 방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한계 비용 측정 방식의 가장 큰 한계점은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가 없는 가정 간의 총지출의 차이를 자녀로 말미암아 추가로 발생하는 지출이라고 보고 이를 자녀 양육비로 간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 양육비용을 측정하는 한계 비용 측정 방법에서는 자녀 양육비용을 자녀가 가정에 존재함에 따라 감소하는 생활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자녀 양육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서 가구 전체 예산의 약 2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자녀 출산에 대비하여 큰 규모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녀 출산에 대비하여 지출을 하는 가정과 자녀 있는 가정 간의 지출 차이를 자녀 양육비라고 간주하는 경우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는 과소 추정될 위험성이 크다.

자녀 양육비용이 적지 않은 규모로 추계하였지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용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실제로 드는 비용을 과소 추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용 추계는 자녀를 직접적으로 키우는데 소요되는 간접비용, 노동 시장에서의 경력 단절, 자녀가 부모의 직업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추계에서 학령기의 자녀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추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학령기 이후에도 자녀에 대한 지출은 결혼 비용 등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한계 비용 측정 방식의 문제점 탓에 미국의 USDA는 기본적으로 1인당 비용 측정 방식에 근거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고 있다. 1인당 비용 측정 방식도 자녀 양육비를 추계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한계 비용 측정 방식이 범하고 있는 오류보다는 덜 심각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위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인당 비용 추계방식을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고자 한다. 1인당 비용 추계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양육비용을 추계한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1인당 비용 추계 방식인 “두당 비용 추계 방법”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측정한다. 두당 비용 접근법에서는 가계의 총 소비지출액수를 가족 수로 나누어 가족원 1인당 지출액수를 측정하여 이를 1인당 자녀 양육비로 간주한다.

둘째, 가계의 총지출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서 모든 가구원이 동일한 수준의 지출을 한다는 두당 비용 접근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출 항목별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을 적용한다. 동 추계 방식에서는 소비지출항목을 어른만을 위한 지출, 자녀만을 위한 지출, 가구원 공동의 지출로 구분하여 어른만을 위한 지출은 제외하고 “자녀만을 위한 지출”과 “가구 공동의 지출”을 자녀에 대한 지출로 간주하고 “자녀만을 위한 지출”은 자녀 수로 나누고, “가구 공동의 지출”은 가구원 수로 나누어 각각 자녀 1인당 비용을 산정한 후 합하여 1인당 자녀 양육비를 산출한다.

셋째, “USDA의 1인당 비용 측정 방식”을 적용하여 지출 항목별로 회귀 모형 추정하고 회귀모형 추정결과에 따라 항목별 지출액 추정한다. 항목별 지출액 추정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항목별 1인당 자녀 양육비를 추계한 후 항목별 지출 추계액을 합하여 1인당 자녀 양육비를 산출한다.

가. 활용 자료

본 연구가 자녀 양육비 추계를 위해 이용한 자료는 통계청이 2009년도에 수집한 “가계 동향 조사” 연간 자료이다.

가계 동향 조사는 1982년부터 2인 가구 이상의 도시 가구 조사로부터 시작하여 2003년부터 농촌 가구를 포함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1인 가구를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부터 가계 동향 조사의 소비 지출은 COICOP 분류 기준에 맞춰 10대 비목에서 12대 비목으로 항목분류를 확대하였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① 식료품의 주류, 기타소비지출의 담배 → 「주류·담배」로 신설
- ② 식료품의 외식 → 「음식·숙박」으로 분리
- ③ 오락·문화의 숙박 → 「음식·숙박」으로 분리
- ④ 주거와 광열수도 → 「주거·수도·광열」로 통합
- ⑤ 교통·통신 → 「교통」과 「통신」으로 분리
- ⑥ 교육의 서적 및 문구류 → 「오락·문화」로 변경
- ⑦ 기타소비지출의 경조비, 교제비, 종교기부금 등 → 「비소비지출」로 변경
- ⑧ 기타소비지출의 귀금속 → 소비지출이 아닌 「기타지출」로 변경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가구는 핵가족이면서 24세 이하 자녀가 존재하는 가구로 한정하였다. 핵가족을 선정한 이유는 자녀를 양육하는 전형적인 한국 가정이 대부분 핵가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24세 이하 자녀가 존재하는 가구로 한정하는 이유는 24세 이하는 대부분 학령기가 대학생 이하에 해당하는데 대학교 학령 이하의 자녀는 경제적으로 독립기 이전에 해당하므로 소득이 없고 부모가 경제적으로 양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샘플을 동일 가구별로 12개월분을 합쳐 월평균 지출 비용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지 않고 연간 자료에 있는 샘플을 하나의 독립된 가구로 간주하였다. 그 이유는 동 보고서의 양육비 추계 결과를 자녀 양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평균 양육비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양육비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가중치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샘플을 같은 가구로 합쳐 월평균 비용을 계산하는 경우 전국 대표성 있는 양육비를 산출할 수 있는 가중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가중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의 샘플을 개별 가구로 간주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가 이용한 2009년도 가계 동향 조사 자료의 가구 수는 4,265가구이며 표본 수는 31,610 표본이다.

나. 양육비 추계 방법론

본 연구가 적용한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당 비용 추계에서는 가계의 총 소비지출액수를 가족 구성원 수로 나누어 두당 지출 액수를 산출한 후 1인당 자녀 양육비로 간주하였다.

둘째, 지출 항목별 자녀 양육비 추계는 2009년도 가계 동향 조사의 소비지출항목을 성인지출항목, 자녀지출항목, 공통지출항목으로 구분하여 성인지출항목은 제외하고 자녀지출항목과 공통지출항목을 자녀에 대한 지출로 간주하고 자녀 지출 항목을 자녀 수로 나누고 공통 지출 항목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1인당 자녀 양육비를 산출하였다. 소비지출항목의 구분은 관련 전문가 회의 및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과의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결정하였다. 성인지출항목은 주류 및 담배, 성인학원교육비, 평생교육비, 유흥비로 간주하였다. 자녀지출항목은 분유, 이유식, 남학생 교복, 여학생 교복, 아동용외의, 아동용내의, 아동화, 유아용 학습교재, 초등학교 학습교재, 중고생 교재, 중고생 참고서, 초등교육비(유치원, 초등학교), 중등교육비(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국공립대학·사립대학 교육비, 보습교육비(성인미포함), 학교보충교육비, 국내교육연수비, 보육료 등으로 간주하였다. 성인지출항목과 자녀지출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 항목은 공통지출항목으로 보았다.

지출 항목별 자녀 양육비를 추계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녀지출 항목에 대한 지출을 모두 합하여 이를 자녀의 수로 나누어 1인당 자녀 지출액을 산출한다. 공통지출항목에 대한 지출도 모두 합하여 가구원 수로 나누어 1인당 공통 지출액을 산출한다. 1인당 자녀 총 지출액은 이러한 1인당 자녀 지출액과 1인당 공통 지출액을 합함으로써 산정하였다. 자녀 양육비 추계액은 1인당 자녀 지출 추계액과 1인당 공통 지출 추계액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두당 비용 추계법과 지출 항목별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는 허경옥(2007) 분석 결과표를 참고하여 전체,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가계로 구분하여

양육비용 산출하였다. 자녀 연령은 첫째아를 기준으로 하여 학령전, 초등학교 재학, 중학교 재학, 고등학교 재학, 대학교 재학으로 구분하여 양육비용 산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자녀 양육비 추계액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득 수준, 지역, 모의 학력 수준에 따라 각각의 양육비를 추계하였다.

소득 수준은 두 가지 방법에 따라 구분하였다. 첫 번째 방법에서는 샘플을 소득 수준에 따라 3분위로 구분하여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였다. 소득 수준에 따라 3분위로 구분한 이유는 각 소득 집단별로 비슷한 규모의 샘플수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저소득층은 월평균소득 2,783,500원 미만 집단, 중산층은 월평균소득 2,783,500원부터 4,179,351원 미만 집단, 고소득은 월 평균 소득 4,179,351원을 초과하는 집단으로 보았다. 두 번째 소득 구분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추계한 2008년 중위소득 (3인 가구 2,592,500원, 4인 가구 3,05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소득 증가율 1.5%를 적용)하여 2009년 중위소득을 3인 가구 2,631,388원과 4인 가구 3,095,750원으로 산출한 후 중위 소득 50% 이하를 저소득층, 50~150%는 중산층, 150% 이상은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였다.

소득 수준을 3분위로 구분한 경우 각 소득 집단의 월평균 소득은 고소득층 6,178,988원, 중산층 3,438,378원, 저소득층 1,942,020원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집단을 구분한 경우 각 소득 집단의 월평균 소득은 고소득층 6,699,997원, 중산층 3,121,243원, 저소득층 927,993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집단별 월평균 소득은 소득 3분위 구분에 비해 중위 소득으로 구분한 경우 고소득층은 더 높게, 그리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더 낮게 나타났다.

지역은 도시 지역과 농촌(읍면부)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모의 학력 수준은 어머니가 고졸인 경우와 대졸인 경우로 나누어 양육비를 추계하였다.

셋째, 미국 USDA 분석 방법을 적용한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각의 지출 항목별로 다음의 회귀 모형을 추정한다. 종속변수는 ①식료품 및

1) 통계청 “2009년도 연간 가구당 월 평균 가계 수지 및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참고

비주류음료, ②의류 및 신발, ③주거 및 수도광열, ④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⑤보건, ⑥교통, ⑦통신, ⑧오락·문화, ⑨교육 (성인교육비 제외), ⑩음식 및 숙박, ⑪기타 상품 및 서비스이다. 독립변수는 미국 USDA가 사용한 독립변수에 기초하여 소득 수준 (상류층, 중산층, 저소득층: 기준변수), 자녀 수 (자녀 1명, 자녀 3명 이상, 자녀 2명: 기준변수), 막내자녀연령(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7세, 18~24세, 0~2세: 기준변수)로 하였다. 이때 각각의 독립변수는 더미 변수이다.

$$E_i = a + b_1 \text{중산층} + b_2 \text{상류층} + c_1 \text{자녀1명} + c_2 \text{자녀3명이상} + d_1 \text{막내자녀연령3~5세} + d_2 \text{막내자녀연령6~8세} + d_3 \text{막내자녀연령9~11세} + d_4 \text{막내자녀연령12~14세} + d_5 \text{막내자녀연령15~17세} + \varepsilon$$

$i = 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2; 의류 및 신발, 3; 주거 및 수도광열, 4;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5; 보건, 6: 교통, 7; 통신, 8; 오락·문화, 9; 교육 (성인교육비 제외), 10: 음식 및 숙박, 11; 기타 상품 및 서비스

회귀모형을 추정한 후 추정된 계수에 따라 각 지출항목별 추계액을 산출하였다. 미국 USDA의 경우 각 항목별 지출액에 대해 선행 연구가 자녀의 지출 비중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이러한 비중을 적용하여 항목별 자녀 지출비용을 산정하였다. 예를 들면 식료품비용의 경우 2008년 USDA Food Plans가 제공하는 자녀 식료품비 비중 자료를 적용하여 추계된 식료품 지출액에 적용하여 자녀 1인당 식료품 지출 비용을 추계 하였다. 의료비의 경우 2005년도 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비 본인 부담금 중 자녀에 대해 지출한 비용을 적용하여 자녀에 대한 1인당 의료비용을 추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지출 항목별로 자녀 지출 비중을 추계한 연구 결과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당 비용 접근법을 적용하여 추계된 항목별 지출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1인당 자녀 양육비로 간주

하였다. 단, 교육비의 경우 자녀 교육에 해당한다고 간주하는 비용만 포함하였으므로 가구원 수가 아닌 자녀 수로 나누어 1인당 자녀 교육비를 산출하였다. 총 양육비 지출액 추계는 각 항목별 1인당 양육비 추계액을 모두 합하여 구하였다.

한편, 지역별, 모의 학력 수준별 자녀 양육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추가적으로 추정하였다. 이때 독립변수인 지역(도시, 농촌: 기준변수), 모의 학력(어머니 고졸, 어머니 대졸: 기준변수)은 모두 더미 변수이다.

$$E_i = a + b_1 \text{중산층} + b_2 \text{상류층} + c_1 \text{자녀1명} + c_2 \text{자녀3명 이상} + d_1 \text{막내자녀연령 3~5세} + d_2 \text{막내자녀연령 6~8세} + d_3 \text{막내자녀연령 9~11세} + d_4 \text{막내자녀연령 12~14세} + d_5 \text{막내자녀연령 15~17세} + d_6 \text{도시} + \varepsilon_i$$

$$E_i = a + b_1 \text{중산층} + b_2 \text{상류층} + c_1 \text{자녀1명} + c_2 \text{자녀3명이상} + d_1 \text{막내자녀연령 3~5세} + d_2 \text{막내자녀연령 6~8세} + d_3 \text{막내자녀연령 9~11세} + d_4 \text{막내자녀연령 12~14세} + d_5 \text{막내자녀연령 15~17세} + d_6 \text{어머니 고졸} + \varepsilon_i$$

모든 양육비 추계액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국 평균 비용으로 산출하였다.

다. 추계 결과: 두 당 비용 추계 방식

1) 전체 분석 결과

두당 비용 추계 방식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추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 달 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는 한 자녀 가계의 경우 755,972원, 두 자녀 가계 658,607원, 세 자녀 가계 546,309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로 환산하면 월 674,596원, 가구당 자녀 총 양육비는 월 1,227,732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자녀 연령에 따라 양육비 추계액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

연령이 학령 전인 경우 양육비 추계액이 가장 낮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자녀 학령이 높아 갈수록 양육비 지출 추계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첫째 자녀가 대학교 재학인 가계의 자녀 양육비 추계액은 고등학교 재학인 가계의 양육비 추계액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등록금이 고등학교 등록금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양육비 지출 추계액이 나온 이유는 고등학교에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높아 오히려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보다 양육비 지출액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하겠다. 이러한 양상은 한 자녀 가계와 두 자녀 가계에서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세 자녀 가계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세 자녀 이상의 가계는 자녀 수가 많아 자녀의 사교육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두 자녀 가계는 한 자녀 가계에 비해 월 평균 561,243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세 자녀 가계는 두 자녀 가계에 비해 월평균 321,713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양육비가 감소한다는 것은 자녀 양육비 지출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자녀 양육비 지출에서의 규모의 경제는 자녀의 모든 연령대에서 관찰되었으며 특히 규모의 경제의 크기는 두 자녀 가정에 있어 학령 전 자녀가 학령기 자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이 학령 전인 경우 한 자녀에서 두 자녀로 자녀 수가 증가할 때 430,999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반면 초등학교 자녀의 경우 512,072원, 중학교 자녀 527,306원, 고등학교 자녀 629,346원, 대학교 자녀 659,869원이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 학령이 높아질수록 규모의 경제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 연령이 어린 경우 옷, 장난감, 학용품 등을 물려받고 자녀들끼리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반면,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게 되면 학원비와 같이 각각 따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규모의 경제가 감소하며 이러한 현상은 자녀의 학령이 높아질수록 더욱 현저해 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세 자녀

가정의 경우 규모의 경제의 연령별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연령이 높아도 자녀 간에 공통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말한다. 즉, 세 자녀 가계의 경우 많은 자녀수로 인하여 자녀 개별적으로 특수하게 그다지 높은 비용을 지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표 5-1〉 두 당 비용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전체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712,759	571,879	492,407	635,202	1,005,056 (1.58)
초등학교 재학	736,384	624,228	541,603	628,744	1,258,375 (2.00)
중학교 재학	822,466	674,886	587,196	681,502	1,377,249 (2.02)
고등학교 재학	844,330	736,838	514,659	752,659	1,358,390 (1.80)
대학교 재학	777,942	718,906	612,918	734,286	1,242,002 (1.69)
평균 자녀양육비	755,972	658,607	546,309	674,596	1,227,732 (1.82)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2) 소득 수준별 분석 결과

자녀 양육비용 추계액을 소득 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득 구분은 각 소득 그룹의 샘플수를 유사한 수로 구성하기 위하여 소득 수준을 3분위로 구분하여 소득 집단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한 방법과²⁾ 국내에서 전형적으로 적용하는 소득 수준 구분을 따르기 위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 구분을 한 후 이를 기준으로 소득 집단

2) 저소득층은 월평균 소득 2,783,500원 미만, 중산층은 월평균 소득 2,783,500~4,179,351원 미만, 고소득층은 월평균 소득 4,179,351원 초과로 구분하였다.

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한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는 고소득층 월 899,867원, 중산층 월 636,359원, 저소득층 월 481,026원으로 나타났으며, 가구당 자녀 평균 총 양육비는 고소득층 월 1,646,756원, 중산층 월 1,177,264원, 저소득층 월 851,417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녀 양육비 지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양육비 지출 차이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간의 차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월등히 더 높은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학령 전 자녀의 경우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비 추계액 차이가 151,454원인 반면,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차이는 221,700원으로 월등히 높았으며, 중학생 자녀의 경우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차이가 141,934원인 반면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차이는 이보다 훨씬 높은 302,273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집단 간 자녀 양육비 지출 차이는 자녀의 학령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자녀 양육비 차이가 학령 전 자녀의 경우 221,700원, 초등학생 268,615원, 중학생 302,273원으로 나타나 학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 계층 간의 양육비 지출 차이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녀가 고등학교 학령기의 경우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자녀 양육비 차이가 252,620원으로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우선 자녀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중산층 자녀가 집중적으로 자녀 양육비 즉, 대부분 교육비에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소득층의 경우 이미 중학교 때부터 자녀 교육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는 반면, 중산층은 중학교 시절부터 집중 투자를 하지는 못하여 중학교 때 더 큰 양육비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양상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양육비 차이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3) 2009년도 3인 가구 중위소득 2,631,388원, 4인 가구 중위소득 3,095,750원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중산층은 50~150%, 고소득층은 150%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 학령기가 중학교 때 까지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간의 양육비 차이가 월 14~15만 원정도 수준으로 나타나나 자녀가 고등학교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양육비 격차는 월 195천 원 수준으로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중산층은 집중적으로 자녀 교육비에 투자하지만 저소득층은 그러할 여력이 없어서 자녀 양육비 간의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자녀 양육비 지출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는 모든 소득 집단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 크기는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막내 자녀가 학령 전 자녀인 경우 2자녀와 1자녀의 지출 추계액 차이가 고소득층의 경우 477,756원인 반면에, 중산층은 이보다 낮은 449,353원, 저소득층은 357,861원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추가적인 자녀 1명에 대한 양육비가 더 적게 드는 이유는 저소득층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자녀가 쓰던 물건을 물려받아 쓰게 하고 각각의 자녀에게 서로 다른 항목으로 비용을 지출하기보다 공통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러한 사실은 반대로 고소득층의 경우 자녀에 대해 각각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

〈표 5-2〉 두 당 비용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소득수준별(고소득층)

(단위: 원, 명)

첫째아이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1,004,896	741,326	618,833	855,551	1,385,993 (1.62)
초등학교 재학	941,122	865,124	738,915	858,710	1,708,832 (1.99)
중학교 재학	1,213,908	900,853	811,481	922,176	1,872,017 (2.03)
고등학교 재학	1,096,112	925,137	754,009	961,819	1,721,656 (1.79)
대학교 재학	1,031,793	873,504	798,614	925,736	1,573,751 (1.70)
평균 자녀양육비	1,029,665	870,194	736,462	899,867	1,646,756 (1.83)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표 5-3〉 두 당 비용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소득수준별(중산층)

(단위: 원, 명)

첫째아이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712,833	581,093	462,814	633,851	1,020,501 (1.61)
초등학교 재학	767,587	572,907	505,920	590,095	1,186,091 (2.01)
중학교 재학	740,031	611,134	554,398	619,903	1,264,603 (2.04)
고등학교 재학	767,381	699,240	572,694	709,199	1,283,649 (1.81)
대학교 재학	747,037	656,564	561,630	677,899	1,193,102 (1.76)
평균 자녀양육비	736,556	614,639	520,018	636,359	1,177,264 (1.85)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표 5-4〉 두 당 비용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소득수준별(저소득층)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526,232,	442,047	378,404	482,397	738,068 (1.53)
초등학교 재학	509,362	435,353	404,588	442,573	885,145 (2.00)
중학교 재학	620,839	460,041	394,178	477,969	941,599 (1.97)
고등학교 재학	604,140	494,407	357,110	513,989	930,320 (1.81)
대학교 재학	562,369	508,387	299,857	527,846	812,884 (1.54)
평균 자녀양육비	546,630	459,187	388,604	481,026	851,417 (1.77)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소득 수준을 중위 소득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양육비를 추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득 수준을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한 경우 3분위 구분보다 각 소득 집단별 평균 소득이 낮게 산출되어 대체적으로 낮은 양육비가 추계되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소득 계층에 따른 자녀 양육비용 추계액 차이는 소득 3분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와 유사한 양상이 발견되었다.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자녀 양육비 추계액 차이는 모든 자녀 학령기에서 대체로 30~40만 원 차이를 보인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차이는 15~20만 원 내외의 차이를 보여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양육비 지출액이 더 높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추가적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출 역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자녀 양육에 따른 규모의 경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 순위 형제가 사용하던 것을 동생에게 물려주거나 혹은 자녀 공통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아 추가적인 자녀 양육에 따른 추가 비용이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소득층의 경우 물려 쓰게 하

거나 혹은 자녀 공통으로 지출하는 항목 보다는 자녀 개별적으로 특수하게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하겠다.

〈표 5-5〉 소득 수준별 자녀 양육비 추계: 중위 소득 기준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1자녀 가구			2자녀 가구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학령전(유치원포함)	978,118	616,291	428,686	781,454	532,712	365,591
초등학교 재학	934,133	626,294	415,952	920,604	540,961	372,155
중학교 재학	1,146,735	683,283	533,233	954,805	578,031	423,201
고등학교 재학	1,071,143	680,053	548,774	975,939	634,330	497,982
대학교 재학	1,034,341	635,545	480,318	905,509	636,747	437,982
평균 자녀 양육비	1,010,594	635,545	469,099	919,499	573,817	414,603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3) 지역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볼 때 도시에 거주하는 가계가 농촌에 거주하는 가계보다 자녀 양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는 도시기계의 경우 월 687,257원으로 나타났으며 농촌 가계의 경우 월 598,179원으로 추계되었다. 가구당 자녀 평균 총 양육비는 도시 거주 가계 월 1,243,934원, 농촌 거주 가계 월 1,106,632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자녀 양육비 지출액의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그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의 양육비 추계액의 차이가 막내가 학령전일 때 49,028원인 반면 막내가 초등학생일 때 79,580원, 막내가 고등학생일 때 167,94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

은 도시 거주자가 농촌 거주자에 비해 더 많은 자녀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가 고등학생으로 성장함에 따라 도시 거주자가 농촌 거주자에 비해 점점 더 많은 자녀 양육비를 지출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하겠다.

자녀 양육비 지출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는 농촌 거주 막내 자녀 연령이 학령전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 거주 가계와 농촌 거주 가계에서 모두 나타났다. 또한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자녀 양육비 지출에 있어 규모의 경제는 특히 2자녀 가정의 경우 도시 지역 보다 농촌 지역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자녀 가정의 경우 1자녀 가정과 비교하여 자녀가 1명 더 있음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막내가 학령 전인 경우 농촌 383,163원, 도시 442,397원, 막내가 초등학생인 경우 농촌 460,894원, 도시 526,696원으로 농촌의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두 당 비용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지역별 (도시)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718,795	580,596	486,276	642,748	1,009,114 (1.57)
초등학교 재학	751,472	639,084	547,978	643,296	1,280,159 (1.99)
중학교 재학	806,602	685,741	606,491	689,355	1,392,498 (2.02)
고등학교 재학	879,946	750,709	529,133	773,281	1,391,906 (1.80)
대학교 재학	795,324	713,998	631,478	739,743	1,242,768 (1.68)
평균 자녀양육비	767,947	679,692	553,440	687,257	1,243,934 (1.81)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표 5-7〉 두 당 비용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지역별 (농촌)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675,386	529,275	525,018	593,720	967,763 (1.63)
초등학교 재학	653,248	557,071	519,598	563,716	1,149,981 (2.04)
중학교 재학	873,097	620,881	521,001	651,001	1,295,492 (1.99)
고등학교 재학	641,428	606,627	483,105	605,365	1,089,657 (1.80)
대학교 재학	668,577	619,446	463,751	632,600	955,227 (1.51)
평균 자녀양육비	687,971	573,434	513,521	598,179	1,106,632 (1.85)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이러한 사실은 농촌 지역 가계의 경우 자녀가 사용하는 재화를 물려주거나 자녀 공통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도시 지역보다 더 높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도시 거주 가계의 경우 자녀 특성에 따라 각각의 자녀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농촌 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하겠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더 크다는 사실은 3자녀 가정의 경우 잘 발견되지 않았다.

4) 모의 학력 수준별 분석 결과

모의 학력 수준별로 자녀 양육비 지출 추계액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녀의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와 자녀의 어머니가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의 학력별로 자녀 양육비를 비교한 이유는 소득 수준과 같은 경제적인 배경 이외에도 학력과 같은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 자녀 양육비 추계액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

보기 위험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모가 대졸인 경우가 고졸인 경우 보다 자녀 양육비 지출 추계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는 모가 대졸인 경우 월 747,364원으로 나타났으며 모가 고졸인 경우 월 628,726원으로 추계되었다. 가구당 자녀 총 양육비는 모가 대졸인 경우 월 1,322,834원, 모가 고졸인 경우 월 1,156,855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자녀 양육비 지출액이 추계되어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자녀 양육비 지출 추계액의 모의 학력별 차이는 전반적으로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어머니 가계와 고졸 어머니 가계의 양육비 차이가 막내가 학령전인 경우 103,946원, 초등학교 157,174원, 중학교 201,665원, 고등학교 200,277원으로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그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대졸 어머니의 자녀 양육비 지출이 고졸 어머니 양육비 지출 보다 더 상대적으로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모가 대졸인 집단과 모가 고졸인 집단에서 모두 전반적으로 자녀 양육비 지출의 규모의 경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규모의 경계의 모의 학력별 차이는 막내 자녀가 학령전인 경우 두 집단 간의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 이상의 연령인 경우 규모의 경계는 대체로 모가 고졸인 경우 더 큰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가 학령 전인 경우 형제자매가 쓰던 것을 물려주거나 자녀 공통으로 지출하는 패턴이 모가 대졸이거나 고졸이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자녀가 정규 학교 교육을 받게 되는 연령 이상으로 성장하는 경우 자녀 특성에 맞게 따로 각각 지출하는 패턴이 대졸 모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하겠다.

〈표 5-8〉 두 당 비용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모의 학력 (대졸)

(단위: 원, 명)

자녀수 첫째아의 교육상태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전체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767,614	597,021	511,795	677,480	1,050,093 (1.55)
초등학교 재학	824,110	719,050	588,549	721,146	1,406,235 (1.95)
중학교 재학	966,927	811,621	711,746	820,650	1,633,093 (1.99)
고등학교 재학	1,062,025	863,707	479,819	905,057	1,611,001 (1.78)
대학교 재학	1,019,277	924,017	769,554	942,122	1,676,978 (1.78)
평균 자녀양육비	824,308	727,434	596,162	747,364	1,322,834 (1.77)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표 5-9〉 두 당 비용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모의 학력 (고졸)

(단위: 원, 명)

자녀수 첫째아의 교육상태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전체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630,274	531,529	479,088	573,534	929,124 (1.62)
초등학교 재학	667,122	552,461	521,353	563,972	1,144,864 (2.03)
중학교 재학	755,737	608,806	546,720	618,985	1,256,539 (2.03)
고등학교 재학	778,856	692,576	520,042	704,780	1,275,652 (1.81)
대학교 재학	751,071	661,166	579,041	693,272	1,143,898 (1.65)
평균 자녀양육비	708,118	613,186	525,296	628,726	1,156,855 (1.84)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라. 추계 결과: 지출 항목별 자녀 양육비 추계 방식

1) 전체 분석 결과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추계한 결과, 앞서 두 당 비용 추계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추계액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자녀 양육비가 추계 되었다. 전체 소비 지출에서 성인에게 해당하는 지출비용을 제외하고도 더 높은 양육비용이 산출된 이유는 두 당 접근법에서는 모든 가계 소비 지출액을 가구원 수로 나눈 반면,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서는 가구 공통 항목만 가구원 수로 나누고 자녀 지출 비용은 자녀 수로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 지출 비용이 전체 가구 지출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모든 지출 항목에 대한 비용을 가구원수로 나눈 두당 비용 접근법과 달리 자녀 지출 비용에 한해서 자녀수로 나눈 지출 항목별 분석에서 더 높은 1인당 자녀 비용이 추계 되었다고 보인다. 더 높은 비용이 산출된 것 외에 추계 결과는 두 당 접근법에 따라 산출된 양육비 추계 결과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한 달 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는 한 자녀 가계의 경우 950,677원, 두 자녀 가계 804,092원, 세 자녀 가계 635,974원으로 산출되었다. 자녀 1인당 전체 평균 양육비 추계액은 828,261원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구당 총 양육비는 평균액은 1,507,396원으로 산출되었다.

전반적으로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비 추계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녀 가정과 두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자녀가 대학교 재학인 경우 양육비 추계액이 첫째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인 경우 추계한 양육비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두당 비용 접근법에서 제시하였듯이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사교육비로 인하여 양육비 지출액이 오히려 자녀가 대학교 재학일 경우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사실이라 하겠다. 두 당 비용 접근법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세 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막내자녀 대학 재학 가계의 양육비 추계액이 고등학교 재학

자녀 가계의 양육비 추계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적은 자녀 수의 가정과 비교하여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사교육비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두 자녀 가계는 한 자녀 가계보다 월평균 양육비용 657,507원을 추가로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자녀 가계는 두 자녀 가계보다 월 평균 비용 299,738원을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당 비용 접근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비 지출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자녀 양육비 지출에서의 규모의 경제는 특히 두 자녀 가정에서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이 학령전인 경우 한 자녀에서 두 자녀로 자녀 수가 증가할 때 509,041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한 반면,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일 경우 549,883원, 중학교 595,134원, 고등학교 687,529원, 대학교 762,146원으로 나타나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 1명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각 자녀마다 개별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하겠다. 앞서 두당 비용 접근법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게 세 자녀 가정에서는 자녀 연령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감소가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연령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각 자녀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두 자녀 가정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즉,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의 경우 자녀 수가 적은 자녀에 비해 자녀 공통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하겠다.

자녀에게 특수하게 지출하는 비용 추계액과 가구 공통으로 지출하는 비용 추계액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에게 특수하게 지출하는 비용은 대부분 자녀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다. 따라서 자녀 특수 비용 지출 추계액은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가정에서 가장 높은 비용 지출 추계액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특수 비용 추계액은 첫째 자녀가 학령전이 가계에서 자녀 1인당 평균 225,312원으로 나타났으나 첫째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계에서는

자녀 1인당 평균 408,565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 공통비용에 있어서는 자녀 연령 증가에 따라 자녀 1인당 비용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대부분 1인당 평균적으로 약 50만 원 내외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공통비용은 교육비용을 제외한 의 식주에 해당하는 항목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자녀 의식주와 관련된 비용은 자녀 연령에 상관없이 비슷한 액수를 지출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표 5-10〉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전체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848,895	678,968	572,857	754,601	1,193,976 (1.58)
초등학교 재학	975,203	762,543	633,847	775,534	1,552,161 (2.00)
중학교 재학	1,059,950	827,542	682,410	836,821	1,691,133 (2.02)
고등학교 재학	1,158,209	922,869	603,479	965,027	1,741,669 (1.80)
대학교 재학	957,563	859,855	694,218	885,900	1,498,448 (1.69)
평균 자녀양육비	950,677	804,092	635,974	828,261	1,507,396 (1.82)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표 5-11〉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전체 (자녀 지출)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221,967	229,573	222,296	225,312	356,502 (1.58)
초등학교 재학	378,888	294,604	248,137	300,576	601,576 (2.00)
중학교 재학	377,211	323,091	258,919	320,594	647,889 (2.02)
고등학교 재학	491,331	390,090	247,521	408,565	737,373 (1.80)
대학교 재학	299,726	325,000	238,563	310,762	525,636 (1.69)
평균 자녀양육비	313,083	311,251	245,084	305,079	555,230 (1.82)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표 5-12〉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전체 (공통지출)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626,928	449,395	350,562	529,289	837,474 (1.58)
초등학교 재학	596,315	468,329	386,261	475,592	951,855 (2.00)
중학교 재학	682,739	504,805	427,109	517,729	1,046,279 (2.02)
고등학교 재학	666,878	531,634	360,044	557,122	1,005,487 (1.80)
대학교 재학	657,837	531,761	448,477	575,906	974,111 (1.69)
평균 자녀양육비	637,594	491,774	390,891	523,253	952,296 (1.82)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2) 소득 수준별 분석 결과

소득 수준을 3분위로 구분하여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는 고소득층 월 1,114,568원, 중산층 월 779,914원, 저소득층 월 585,211원으로 나타났으며, 가구당 자녀 총 양육비는 고소득층 월 2,039,659원, 중산층 월 1,442,841원, 저소득층 월 1,035,823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두당 비용 추계 방식의 결과와 유사하게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자녀 양육비 지출 추계액이 높았다. 자녀 양육비 추계액의 소득 집단별 차이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격차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막내가 중학교 자녀인 경우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자녀 양육비 차이는 385,572원인데 반해 중산층과 저소득층 간의 차이는 이보다 훨씬 낮은 184,274원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비 추계액의 소득 집단별 차이는 대체로 자녀가 학령전인 경우보다 자녀가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인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자녀 가정의 경우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자녀 양육비 차이가 학령전인 경우 309,833원인데 반해, 자녀가 중학생인 경우 625,501원, 고등학생인 경우 521,03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층일수록 자녀가 점점 더 높은 학령으로 올라갈수록 지출하는 액수도 상대적으로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자녀에 대한 높은 사교육비 지출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자녀 양육비 지출에 있어서 모든 소득 계층에서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 양육비 지출의 규모의 경제의 크기는 두당 비용 접근법에 의한 추계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낮은 집단 일수록 추가적인 자녀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소득이 높은 집단보다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저소득층일 경우 형제들끼리 물려받아 쓰거나 자녀들에게 공통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고소득층보다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5-13〉 지출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소득수준별 (고소득층)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1,169,532	885,012	722,887	1,005,562	1,629,010 (1.62)
초등학교 재학	1,228,181	1,063,813	867,775	1,061,481	2,112,347 (1.99)
중학교 재학	1,583,134	1,119,036	946,694	1,145,054	2,324,460 (2.03)
고등학교 재학	1,546,548	1,166,481	899,425	1,250,704	2,238,760 (1.79)
대학교 재학	1,301,774	1,057,371	916,126	1,136,659	1,932,319 (1.70)
평균 자녀양육비	1,304,507	1,073,189	861,653	1,114,568	2,039,659 (1.83)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표 5-14〉 지출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소득수준별 (중산층)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859,699	691,406	538,027	758,268	1,220,811 (1.61)
초등학교 재학	1,041,554	699,922	594,366	731,894	1,471,108 (2.01)
중학교 재학	957,633	745,944	648,141	759,482	1,549,343 (2.04)
고등학교 재학	1,025,509	876,166	667,979	901,224	1,631,216 (1.81)
대학교 재학	864,412	791,102	653,611	804,255	1,415,489 (1.76)
평균 자녀양육비	922,502	750,214	607,448	779,914	1,442,841 (1.85)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표 5-15〉 지출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소득수준별 (저소득층)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635,564	519,903	442,582	575,904	881,133 (1.53)
초등학교 재학	670,046	524,805	467,521	539,500	1,078,999 (2.00)
중학교 재학	782,049	549,914	450,787	575,208	1,133,160 (1.97)
고등학교 재학	800,976	611,015	417,451	647,770	1,172,464 (1.81)
대학교 재학	696,001	613,098	307,079	643,489	990,973 (1.54)
평균 자녀양육비	682,545	552,841	447,899	585,211	1,035,823 (1.77)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소득 수준을 중위 소득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양육비를 추계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앞서 두당 비용 접근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위 소득을 중심으로 소득을 구분한 경우 소득을 3분위로 구분하였을 때 보다 각 소득 집단별 양육비 평균 지출액이 대체로 낮게 산출되었다. 이는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한 각각 소득 그룹의 평균 소득이 소득 3분위를 기준으로 구분한 각 소득집단별 평균 소득 보다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녀 양육비를 성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자녀에만 지출하는 비용과 가구원 공통 비용만을 포함한 경우 각 소득 집단 간의 양육비 추계액의 차이는 두당 비용 접근법에 의한 추계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당 비용 접근법에서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양육비 추계액의 차이가 대체적으로 30~40만 원으로 나타났지만 지출항목별 추계에서는 40~50만 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간의 차이는 두당 비용 접근법의 경우 15~2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었던 반면, 지출 항목별 접근법에서는 약 2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

였다. 이러한 사실은 양육비를 자녀에 대한 지출만으로 한정하면 소득 계층 간의 차이가 더욱 벌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녀 양육비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자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비 지출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이러한 규모의 경제의 크기는 저소득층일수록 더 크다는 사실은 두당 비용 접근법에서의 결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16〉 소득 수준별 자녀 양육비 추계: 중위 소득 기준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1자녀 가구			2자녀 가구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학령전(유치원포함)	1,176,437	743,347	533,115	934,843	640,563	419,290
초등학교 재학	1,203,541	832,629	484,375	1,073,120	658,664	448,005
중학교 재학	1,561,925	892,636	693,978	1,145,114	699,020	479,372
고등학교 재학	1,422,281	877,239	686,136	1,174,772	785,865	615,030
대학교 재학	1,275,922	754,558	608,269	1,076,780	765,201	518,475
평균 자녀 양육비	1,284,786	786,740	584,983	1,091,198	692,959	486,858

주: 3인 가구 중위 소득 월 2,631,388원, 4인가구 중위 소득 월 3,095,750원, 고소득층 중위소득 150% 이상, 중산층 중위소득 50~150%,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이하, 월평균소득은 1자녀 가구 고소득층 6,079,753원, 중산층 2,694,754원, 저소득층 716,086원, 2자녀 가구 고소득층 6,699,997원, 중산층 3,121,243원, 저소득층 927,993원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이러한 자녀 1인당 지출하는 양육비 추계액을 자녀에서 특수하게 지출하는 비용과 가구 공통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소득 수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에게 특수하게 지출하는 비용과 가구 공통

지출 비용 모두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은 자녀 양육비 지출 추계액이 산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자녀 교육비뿐만 아니라 의식주에 해당하는 비용도 더 많이 지출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전반적으로 같은 소득 집단 내에서 가구 공통비용은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추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녀 특수 비용은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용의 증가 정도는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소득 집단에서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지만 특히 고소득층에서 자녀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육비 지출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하겠다.

〈표 5-17〉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결과: 자녀 특수비용 (고소득층)

(단위: 원, 명)

자녀수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270,015	303,028	291,037	286,202	463,647 (1.62)
초등학교 재학	450,741	415,722	342,185	410,458	816,812 (1.99)
중학교 재학	576,355	453,551	359,869	453,688	920,987 (2.03)
고등학교 재학	698,237	502,731	396,128	546,783	978,742 (1.79)
대학교 재학	445,487	402,156	335,786	414,018	703,831 (1.70)
평균 자녀양육비	438,202	426,412	338,130	421,186	770,770 (1.83)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표 5-18〉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자녀 특수 비용 (중산층)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237,655	237,032	198,258	234,345	377,296 (1.61)
초등학교 재학	434,972	271,586	238,157	289,451	581,796 (2.01)
중학교 재학	346,833	288,354	253,137	290,562	592,746 (2.04)
고등학교 재학	407,585	369,919	254,670	373,306	675,684 (1.81)
대학교 재학	206,923	279,571	251,383	266,548	469,124 (1.76)
평균 자녀양육비	299,837	289,619	236,777	286,507	530,038 (1.85)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표 5-19〉 지출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자녀 특수 비용 (저소득층)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178,704	169,944	172,574	174,659	267,228 (1.53)
초등학교 재학	259,198	196,070	175,083	203,122	406,245 (2.00)
중학교 재학	262,260	196,180	153,899	201,335	396,630 (1.97)
고등학교 재학	313,303	246,207	168,626	258,593	468,053 (1.81)
대학교 재학	220,977	234,113	26,944	220,205	339,115 (1.54)
평균 자녀양육비	220,943	203,623	163,635	205,372	363,509 (1.77)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표 5-20〉 지출항목별 추계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결과: 가구 공통비용 (고소득층)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899,517	581,984	431,851	719,359	1,165,362 (1.62)
초등학교 재학	777,440	648,092	525,590	651,023	1,295,353 (1.99)
중학교 재학	1,006,779	665,485	586,825	691,366	1,403,473 (2.03)
고등학교 재학	848,311	663,751	503,297	703,921	1,260,018 (1.79)
대학교 재학	856,287	655,215	580,340	722,640	1,228,489 (1.70)
평균 자녀양육비	866,305	646,776	523,522	693,382	1,268,889 (1.83)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표 5-21〉 지출항목별 추계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결과: 가구 공통비용 (중산층)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622,043	454,374	339,769	523,923	843,515 (1.61)
초등학교 재학	606,582	428,336	356,210	442,444	889,312 (2.01)
중학교 재학	610,800	457,590	395,005	468,920	956,597 (2.04)
고등학교 재학	617,924	506,248	413,309	527,918	955,532 (1.81)
대학교 재학	657,490	493,531	402,229	537,708	946,365 (1.76)
평균 자녀양육비	622,665	460,596	370,671	493,407	912,803 (1.85)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표 5-22〉 지출항목별 추계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결과: 가구 공통비용 (저소득층)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456,859	349,959	270,007	401,245	613,905 (1.53)
초등학교 재학	410,848	328,735	292,438	336,377	672,754 (2.00)
중학교 재학	519,788	353,734	296,888	373,873	736,530 (1.97)
고등학교 재학	487,673	364,808	248,824	389,178	704,411 (1.81)
대학교 재학	475,024	378,984	280,134	423,284	651,857 (1.54)
평균 자녀양육비	461,602	349,218	284,264	379,839	672,314 (1.77)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3) 지역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볼 때 도시에 거주하는 가계가 농촌에 거주하는 가계보다 자녀 양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결과는 두당 비용 접근법을 이용하여 추계한 결과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는 도시가계의 경우 월 849,181원으로 나타났으며 농촌 가계의 경우 월 710,980원으로 추계되었다. 가구당 자녀 총 양육비는 도시 거주 가계 월 1,537,017원, 농촌 거주 가계 월 1,315,313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자녀 양육비 지출액의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학령 전 자녀 보다 취학 자녀에 대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아가 학령전인 경우 도시와 농촌의 양육비 차이가 73,597원인데 반해 초등학교의 경우 118,363원, 고등학교의 경우 268,568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도시와 농촌간의 양육비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도시 거주자의 경우 자녀 학령이 증가함에 따라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육비를 지출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하겠다.

자녀 양육비 지출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는 농촌에 거주하는 첫째아 자녀 연령이 학령 전인 가구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의 자녀에게서 관찰이 되었다. 자녀 양육비 지출의 규모의 경제는 특히 2자녀 가계의 경우 농촌 거주 가계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자녀와 2자녀 간의 양육비 차이는 첫째아가 학령 전인 경우 도시 지역 524,864원, 농촌 지역 444,148원, 초등학생인 경우 도시 지역 571,684원, 농촌 지역 472,622원, 중학생인 경우 도시 지역 634,452원, 농촌 지역 403,210원, 고등학생인 경우 도시 지역 669,784원, 농촌 지역 652,833원, 대학생인 경우 도시 지역 742,088원, 농촌 지역 674,478원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 보다 자녀 양육비 지출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크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 자녀들에게 공동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표 5-23〉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지역별 (도시)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858,432	691,648	567,776	765,928	1,202,507 (1.57)
초등학교 재학	996,351	784,018	645,398	797,116	1,586,260 (1.99)
중학교 재학	1,057,807	846,130	710,346	852,929	1,722,916 (2.02)
고등학교 재학	1,221,184	945,484	630,579	999,293	1,798,728 (1.80)
대학교 재학	984,764	863,426	722,764	901,004	1,513,686 (1.68)
평균 자녀양육비	971,316	823,726	649,084	849,181	1,537,017 (1.81)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표 5-24〉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지역별 (농촌)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789,847	616,997	599,882	692,331	1,128,500 (1.63)
초등학교 재학	858,674	665,648	589,101	678,753	1,384,656 (2.04)
중학교 재학	1,066,791	735,001	586,879	771,719	1,535,721 (1.99)
고등학교 재학	799,452	726,142	544,761	730,725	1,315,305 (1.80)
대학교 재학	786,418	730,448	516,320	741,742	1,120,030 (1.51)
평균 자녀양육비	833,482	680,379	581,163	710,980	1,315,313 (1.85)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출 추계액을 자녀 특수 비용과 가구 공통비용으로 구분하여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구 공통비용 추계액에 대해서는 도시가 농촌에 비해 약간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의식주에 관해서는 도시와 농촌 간에 지출 수준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하지만 자녀 특수 비용에 있어서는 도시가 농촌에 비해 더 높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도시의 경우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 특수 비용 추계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촌의 경우 자녀 연령에 따라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도시 거주자의 경우 자녀의 학령의 높아감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등으로 더 높은 교육비를 지출하지만 농촌의 경우 자녀 학령이 높아져도 교육비에 있어서 별다른 증가를 보이지 않아 사교육에 대한 지출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 5-25〉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자녀 특수비용 (도시)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226,699	237,589	225,240	231,258	363,075 (1.57)
초등학교 재학	388,821	307,511	261,304	313,582	624,027 (1.99)
중학교 재학	398,026	337,720	277,497	336,313	679,353 (2.02)
고등학교 재학	532,282	406,035	269,112	430,936	775,684 (1.80)
대학교 재학	314,916	328,788	257,651	320,351	538,189 (1.68)
평균 자녀양육비	326,065	324,553	258,243	318,609	576,682 (1.81)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표 5-26〉 지출항목별 추계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결과: 자녀 특수비용 (농촌)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192,675	190,398	206,634	192,623	313,976 (1.63)
초등학교 재학	324,155	235,050	193,914	240,094	489,793 (2.04)
중학교 재학	310,781	248,558	183,168	248,914	495,339 (1.99)
고등학교 재학	258,040	258,842	188,601	252,157	453,882 (1.80)
대학교 재학	204,154	253,206	147,341	213,828	322,880 (1.51)
평균 자녀양육비	239,369	232,447	190,062	228,924	423,510 (1.85)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표 5-27〉 지출항목별 추계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결과: 가구 공통비용 (도시)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631,734	454,060	342,536	534,670	839,432 (1.57)
초등학교 재학	607,530	476,507	384,093	483,534	962,233 (1.99)
중학교 재학	659,781	508,410	432,848	516,615	1,043,563 (2.02)
고등학교 재학	688,902	539,449	361,467	568,358	1,023,044 (1.80)
대학교 재학	669,848	534,638	465,112	580,653	975,497 (1.68)
평균 자녀양육비	645,251	499,174	390,841	530,572	960,335 (1.81)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표 5-28〉 지출항목별 추계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결과: 가구 공통비용 (농촌)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597,172	426,599	393,249	499,708	814,524 (1.63)
초등학교 재학	534,519	430,599	395,186	438,658	894,863 (2.04)
중학교 재학	756,010	486,443	403,710	522,805	1,040,382 (1.99)
고등학교 재학	541,412	467,301	356,161	478,568	861,422 (1.80)
대학교 재학	582,264	477,242	368,979	527,914	797,150 (1.51)
평균 자녀양육비	594,113	447,932	391,101	482,056	891,803 (1.85)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4) 모의 학력 수준별 분석 결과

모의 학력 수준별로 양육비 추계액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두 당 비용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와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두 당 비용 접근법을 이용한 추계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양육비 지출 추계액을 보였다.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는 모가 대졸인 경우 월 926,231원으로 모가 고졸인 경우인 월 768,307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자녀 총 양육비는 모가 대졸인 경우 월 1,639,429원, 모가 고졸인 경우 월 1,413,685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모의 학력별 양육비 추계액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자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졸업 모와 고등학교 졸업 모 간의 양육비 추계액의 차이가 자녀가 학령전인 경우 월 123,365원인데 반해 자녀가 초등학교인 경우 월 208,626원, 중학교 월 291,026원, 고등학교 월 313,916원으로 점차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대학교 졸업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 어머니에 비해 자녀가 높은 학령기로 올라감에 따라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녀 양육비의 규모의 경제는 어머니가 대학 졸업인 가계와 고등학교 졸업인 가계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규모의 경제의 크기는 첫째 아가 학령전인 2자녀 가계를 제외하고 대부분 어머니가 고졸이 가계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학령전인 경우 대학교 졸업 어머니와 고등학교 졸업 어머니 간의 자녀 양육비 행태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자녀가 높은 학령에 올라감에 따라 대학교 졸업 어머니는 자녀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자녀에 대해 따로 지출하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하겠다.

〈표 5-29〉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모의 학력 (대졸)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913,020	709,938	589,608	804,776	1,247,403 (1.55)
초등학교 재학	1,099,474	882,480	708,960	898,197	1,751,485 (1.95)
중학교 재학	1,322,917	1,014,875	854,680	1,037,750	2,065,123 (1.99)
고등학교 재학	1,546,936	1,109,117	587,578	1,205,168	2,145,199 (1.78)
대학교 재학	1,377,249	1,127,489	856,919	1,180,790	2,101,807 (1.78)
평균 자녀양육비	1,041,765	895,108	708,764	926,231	1,639,429 (1.77)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표 5-30〉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모의 학력 (고졸)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752,471	629,266	561,350	681,411	1,103,886 (1.62)
초등학교 재학	877,088	671,903	600,315	689,571	1,399,830 (2.03)
중학교 재학	938,480	737,102	626,724	746,724	1,515,850 (2.03)
고등학교 재학	1,041,296	859,759	609,323	891,252	1,613,166 (1.81)
대학교 재학	910,833	796,134	663,238	835,581	1,378,709 (1.65)
평균 자녀양육비	886,891	746,489	606,473	768,307	1,413,685 (1.84)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1인당 자녀 양육비 지출 추계액을 자녀 특수 비용과 가구 공통비용으로 구분하여 모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 특수 비용과 가구 공통비용 모두 모가 대졸인 경우가 모가 고졸인 경우보다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모가 대졸인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비용과 의식주 비용을 모가 고졸인 경우보다 더 많이 지출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자녀 공통비용의 경우 절대적인 액수에 있어서는 모가 대졸인 경우가 더 높았지만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크기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이 모가 대졸인 경우와 모가 고졸인 경우 모두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두 집단에서 모두 의식주에 대한 비용은 자녀 연령 변화에 따라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자녀에 대한 특수 비용은 두 집단에서 모두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증가 속도는 모가 대졸인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모가 대졸인 경우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 교육에 대한 지출 비용이 모가 고졸인 경우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하겠다.

〈표 5-31〉 지출항목별 추계방식에 따른 자녀양육비 추계 결과: 자녀 특수 비용 (대졸)

(단위: 원, 명)

첫째아이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236,190	240,952	214,794	237,279	367,783 (1.55)
초등학교 재학	432,567	344,227	314,844	355,519	693,262 (1.95)
중학교 재학	554,655	423,786	371,028	435,509	866,664 (1.99)
고등학교 재학	746,517	509,031	288,346	562,041	1,000,433 (1.78)
대학교 재학	576,816	452,245	291,637	477,717	850,336 (1.78)
평균 자녀양육비	345,652	353,721	298,765	347,002	614,194 (1.77)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표 5-32〉 지출항목별 추계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결과: 자녀 특수비용 (고졸)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200,581	211,312	227,449	207,855	336,725 (1.62)
초등학교 재학	336,507	256,818	217,645	261,586	531,020 (2.03)
중학교 재학	295,246	274,194	219,497	267,812	543,659 (2.03)
고등학교 재학	414,581	350,760	243,929	360,862	653,159 (1.81)
대학교 재학	268,873	296,504	231,127	281,763	464,909 (1.65)
평균 자녀양육비	290,276	285,176	223,326	279,375	514,0501 (1.84)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표 5-33〉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공통비용 (대졸)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676,831	468,986	374,814	567,497	879,621 (1.55)
초등학교 재학	666,907	538,252	394,116	542,678	1,058,223 (1.95)
중학교 재학	768,262	591,089	483,652	602,241	1,198,459 (1.99)
고등학교 재학	800,419	600,086	299,232	643,127	1,144,766 (1.78)
대학교 재학	800,433	675,244	565,281	703,074	1,251,471 (1.78)
평균 자녀양육비	696,113	541,387	409,999	579,229	1,025,236 (1.77)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표 5-34〉 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공통비용 (고졸)

(단위: 원, 명)

첫째아의 교육상태	자녀수			전체	
	한 자녀 가계	두 자녀 가계	세 자녀 가계	자녀 1인	전체 (평균자녀수)
학령전(유치원포함)	551,890	417,954	333,901	473,556	767,161 (1.62)
초등학교 재학	540,581	415,086	382,670	427,985	868,810 (2.03)
중학교 재학	643,234	462,907	407,227	478,912	972,191 (2.03)
고등학교 재학	626,715	508,999	365,394	530,390	960,006 (1.81)
대학교 재학	641,960	499,630	432,111	553,818	913,799 (1.65)
평균 자녀양육비	596,615	461,313	383,146	488,932	899,635 (1.84)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마. 추계 결과: USDA 측정 방법 적용

USDA 추정 방식을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추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서 두당 비용 접근법에서는 핵가족이면서 2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USDA 측정 방법에서도 2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핵가족 가계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2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두 자녀를 양육하는 4인 가정이 가장 전형적인 한국 가정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소득 구분은 각 소득 그룹의 샘플수를 유사한 수로 구성하기 위하여 소득 수준을 3분위로 구분하여 소득 집단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한 방법과⁴⁾ 국내에서 전형적으로 적용하는 소득 수준 구분을 따르기

4) 저소득층은 월평균 소득 2,783,500원 미만, 중산층은 월평균 소득 2,783,500~4,179,351원 미만, 고소득층은 월평균 소득 4,179,351원 초과로 구분하였다.

위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 구분을 한 후 이를 기준으로 소득 집단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한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자녀 연령 구분은 USDA의 구분에 따라 막내 자녀를 중심으로 막내 연령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7세, 18~24세로 구분하였다. 두당 비용 접근법과 지출 항목별 양육비 추계 접근법에서와 유사하게 지역별 양육비 추계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양육비를 추계하였다. 또한 모의 학력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액 차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대졸 여성과 고졸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녀 양육비 지출 항목별 비중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출 항목은 가계동향조사의 구분에 따라 식료품, 의류, 주거, 가정용품, 보건, 교통, 통신, 오락, 교육, 음식/숙박, 기타로 구분하였다. 교육비는 자녀만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하였다.

소득 수준과 막내 자녀 연령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추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 양육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비 지출 추계액은 모든 소득 집단에서 막내 자녀 연령이 15~17세인 경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막내 자녀 연령이 15~17세 가정의 경우 대부분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교육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막내 자녀 연령이 15~17세 가정의 경우 막내 자녀 연령이 18~24세 가정보다 양육비 지출액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막내 자녀 연령이 18~24세에 해당하는 가정은 대부분 자녀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해 볼 때 대학생을 양육하는 가정보다 고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양육비가 더 높다는 사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등록금이 고등학교 등록금보다 높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막내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가정의 양육비 지출이 막내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하는 가정의 양육비 지출보다 높다는 사실은 공교육비보다 사교육비가 자녀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사교육비의

5) 2009년도 3인 가구 중위소득 2,631,388원, 4인 가구 중위소득 3,095,750원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중산층은 50~150%, 고소득층은 150%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자녀 양육비 차이가 평균적으로 18만 원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자녀 양육비 차이는 평균적으로 29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별 자녀 양육비 지출액 격차가 매우 심각해진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즉 자녀 양육비 지출에 있어서 소득 집단별 상대적인 지출의 격차가 상위 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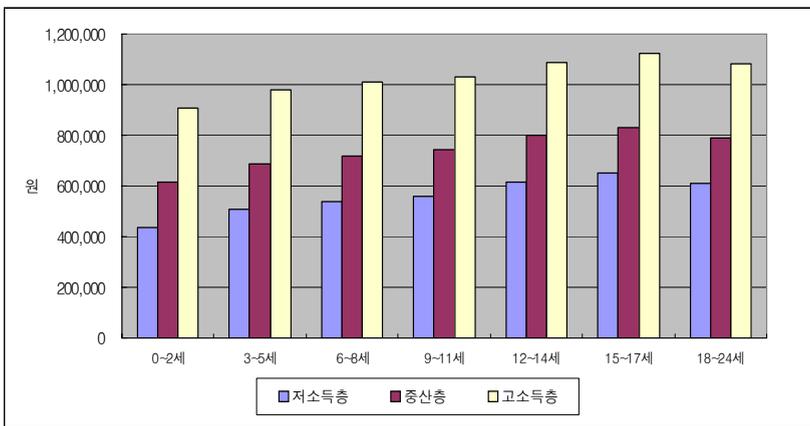
〈표 5-35〉 USDA 추계 방법을 적용한 1인당 자녀 양육비용 추계액: 소득 3분위 구분

(단위: 원, 명)

	막내연령 0~2세	막내연령 3~5세	막내연령 6~8세	막내연령 9~11세	막내연령 12~14세	막내연령 15~17세	막내연령 18~24세
저소득층	435,915	505,657	538,652	560,751	617,731	650,699	611,528
중산층	616,587	686,330	719,324	741,423	798,404	831,372	792,200
고소득층	907,419	977,161	1,010,156	1,032,255	1,089,235	1,122,204	1,083,032

자료: 통계청 (2009) “가계동향조사”

〔그림 5-1〕 USDA 추계 방법을 적용한 1인당 자녀 양육비용 추계액: 소득 3분위 구분



자료: 통계청 (2009) “가계동향조사”

중위 소득 기준에 따른 소득 집단별·자녀 연령별 양육비 추계액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전반적으로 볼 때 소득 3분위에 따른 소득 집단 구분보다 더 낮은 양육비가 추계 되었다. 또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양육비 추계액 차이는 평균적으로 28만 원으로 나타나 소득 3분위 구분에 따른 중산층과 고소득층 간의 양육비 추계액 차이 29만 원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중산층과 저소득층간의 양육비 추계액 차이는 13만 원으로 나타나 소득 3분위 구분에 따른 중산층과 저소득층간의 차이 18만 원보다 5만 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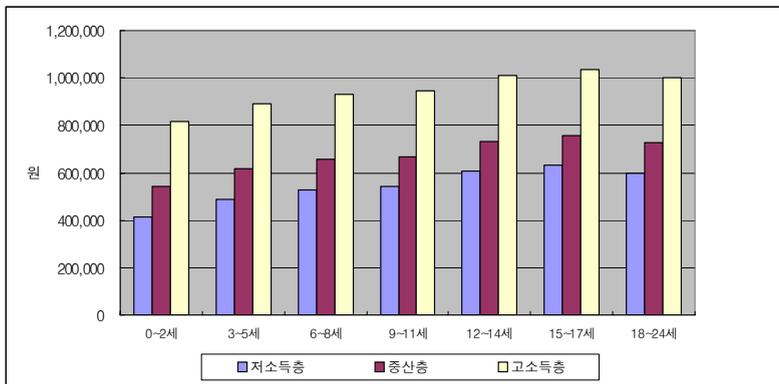
그 밖에 전반적으로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 양육비 추계액이 증가하며 막내 자녀가 고등학교 취학 기간인 15~17세에 가장 높은 액수를 보이고 막내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자녀 양육비용이 약간 감소한다는 사실은 앞서 소득 3분위 구분에 따른 분석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5-36〉 USDA추계방법을 적용한 1인당 자녀양육비용 추계액: 중위소득기준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7세	18~24세
저소득층	414,618	488,621	528,950	542,989	606,311	632,327	598,449
중산층	541,072	615,075	655,405	669,444	732,765	758,782	724,903
고소득층	817,874	891,877	932,207	946,246	1,009,567	1,035,584	1,001,705

자료: 통계청 (2009) “가계동향조사”

〔그림 5-2〕 USDA 추계방법을 적용한 1인당 자녀 양육비용 추계액: 중위소득 기준 구분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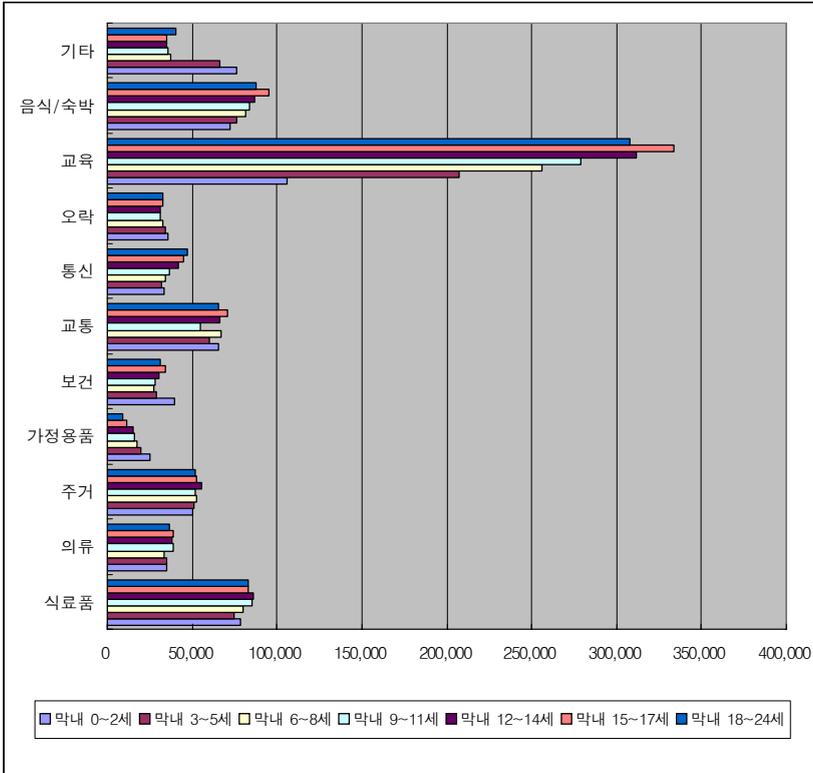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양육비 추계액을 지출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지출 항목은 교육비로서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비 지출액도 증가하며 막내 자녀 연령이 15~17세인 경우 가장 높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식료품비는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음식/숙박비는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 외식과 여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출이 증가하는 또 다른 항목으로 통신비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터넷과 핸드폰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액이 감소하는 항목은 보건의료비와 가정용품이었다.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 보건 의료비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 가정용품의 경우도 자녀가 어릴수록 지출액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37〉 중산층 가정의 자녀 연령별 양육비 항목별 분포: 두 자녀 4인 가구

막내자녀 나이	식료품	의류	주거	가정 용품	보건	교통	통신	오락	교육	음식/ 숙박	기타
0-2세	0.127	0.057	0.081	0.041	0.065	0.106	0.054	0.058	0.171	0.117	0.123
3-5세	0.109	0.051	0.075	0.028	0.042	0.088	0.047	0.050	0.302	0.111	0.096
6-8세	0.111	0.046	0.073	0.024	0.038	0.093	0.048	0.045	0.356	0.114	0.051
9-11세	0.115	0.052	0.070	0.022	0.038	0.074	0.050	0.042	0.376	0.113	0.049
12-14세	0.108	0.048	0.069	0.019	0.038	0.083	0.052	0.039	0.391	0.109	0.044
15-17세	0.100	0.046	0.063	0.014	0.041	0.085	0.054	0.039	0.402	0.114	0.042
18-24세	0.105	0.046	0.066	0.011	0.040	0.083	0.059	0.041	0.388	0.110	0.051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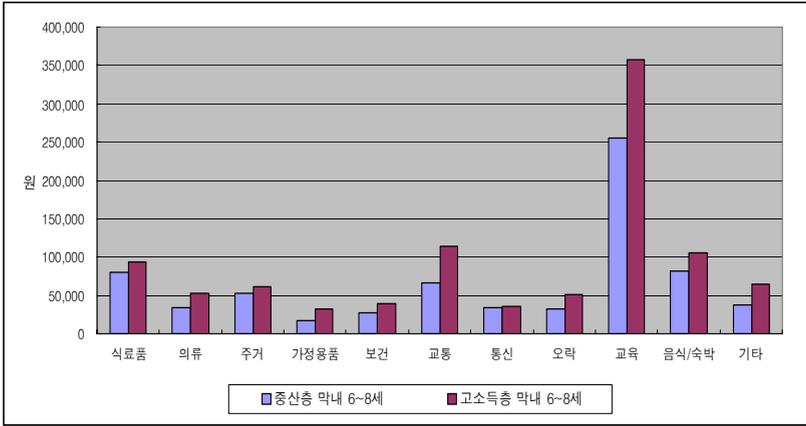
[그림 5-3] 자녀 1인당 양육비 추계액 지출 항목별 비중: 중산층 2자녀 가정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막내 자녀 연령이 6~8세인 가정을 대상으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항목별 지출 비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높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교육비로서 고소득층이 중산층에 비해 월 평균 10만원 더 높게 지출하고 있었다. 교통비의 경우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월평균 4만 7천 원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 2만 9천 원, 음식/숙박 2만 4천 원, 의류 2만 원, 오락 1만 8천 원, 식료품 1만 4천 원, 가정용품 1만 6천 원, 보건 1만 2천 원, 주거 9천 원, 통신 2만 7천 원을 고소득층이 중산층에 비해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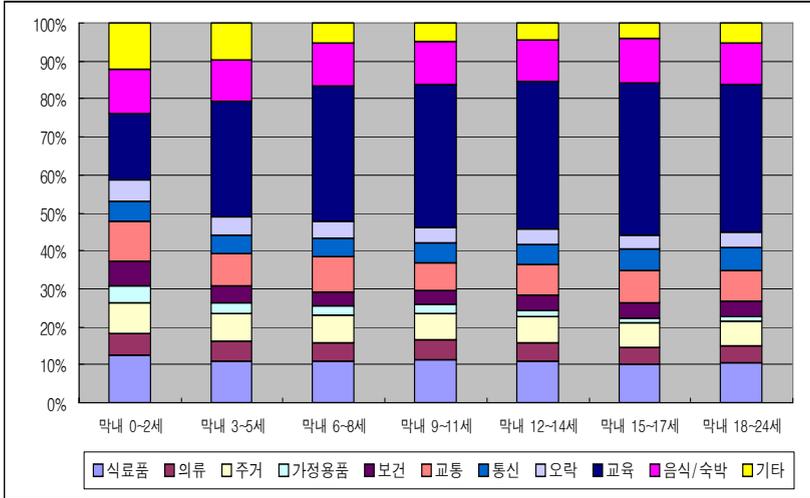
[그림 5-4]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출항목별 추계액 소득수준별 비교: 중산층 2자녀 가정



주: 저소득층: 월평균 소득 2,783,500원 미만(평균소득 1,942,202원), 중산층: 2,783,500원 초과~4,179,351원 미만 (평균소득 3,438,378원), 고소득층: 4,179,351원 초과 (평균소득 6,178,988원)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양육비 추계액의 항목별 비중을 자녀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큰 차이는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비 지출액의 절대액이 증가하고 교육비가 자녀 양육비 추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막내 자녀 연령이 0~2세 가정의 경우 교육비가 자녀 양육비 추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1%에 불과하였으나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막내 자녀 연령이 15~17세의 경우 양육비 비중은 4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항목에 대해서는 자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만 보건의료비의 경우 자녀 연령이 0~2세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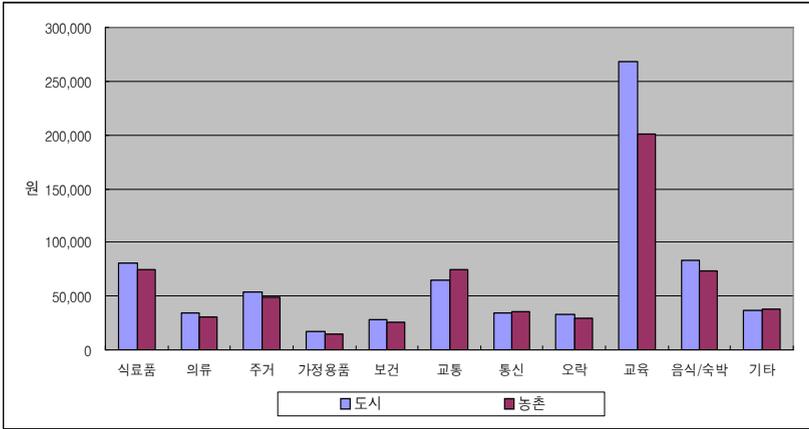
[그림 5-5] 자녀 연령별 양육비 지출 항목별 비중: 중산층 2자녀 가구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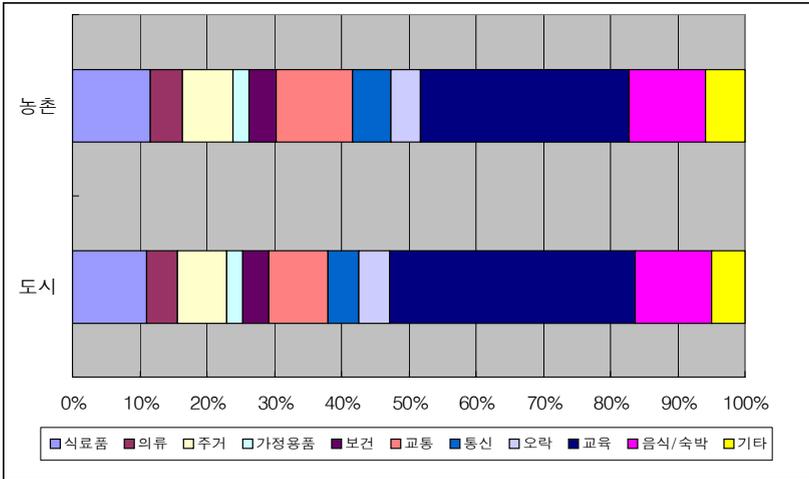
자녀 양육비 추계액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가계가 농촌에 거주하는 가계보다 더 높은 양육비 지출액이 추계되었다. 막내 연령이 6~8세인 중산층 가구의 예를 들면 월 평균 자녀 양육비 추계액이 도시 지역의 경우 735,423원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647,266원으로 나타나 도시 지역이 농촌에 비해 8만 8천 원 정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자녀 양육비 지출액의 항목별 비중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특히 교육비가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양육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학령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대부분 자녀의 교육을 위해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사교육에 대한 지출이 도시 지역에서 높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하겠다. 전반적으로 모든 지출 항목에서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지출액이 높거나 비슷하였는데 교통비용의 경우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의 경우 도시 지역보다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교통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말한다고 하겠다.

[그림 5-5] 지역별 자녀 양육비 지출액 항목별 비교: 막내 6~8세 중산층 2자녀 가구



자료: 통계청 (2009) “가계동향조사”

[그림 5-7] 지역별 자녀 양육비 지출 비중 항목별 비교: 막내 6~8세 중산층 2자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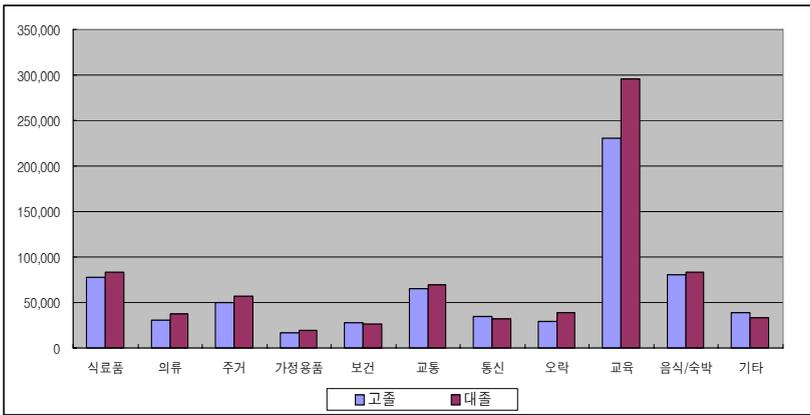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자녀 양육비 추계액을 중산층을 대상으로 모의 학력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 월 평균 양육비가 더 높게 추계되어 모가 대졸인 경우 월 평균 양육비는 777,210원, 고졸인 경우 682,935원으로 나타나 9만 4천 원 정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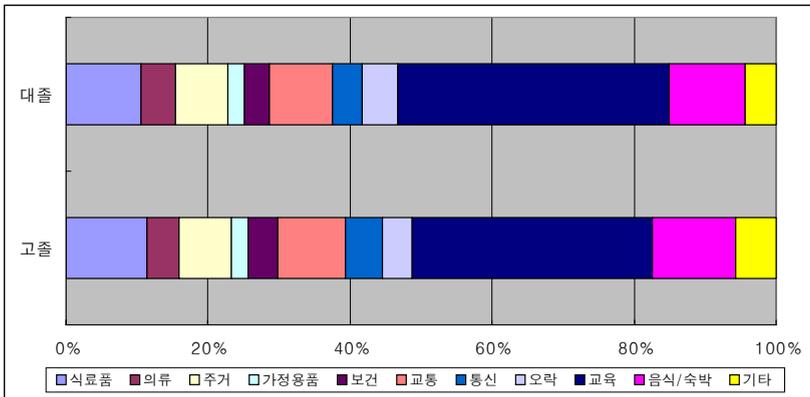
육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항목에서 모의 학력과 상관없이 지출액수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의 경우 모가 대졸인 경우 고졸인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약 6만 5천 원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대졸 여성과 고졸 여성의 양육비 차이가 대부분 교육비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그림 5-8] 모의 학력별 자녀 양육비 지출액 항목별 비교: 막내 6~8세 중산층 2자녀가구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그림 5-9] 모의 학력별 자녀양육비 지출비중 항목별 비교: 막내 6~8세 중산층 2자녀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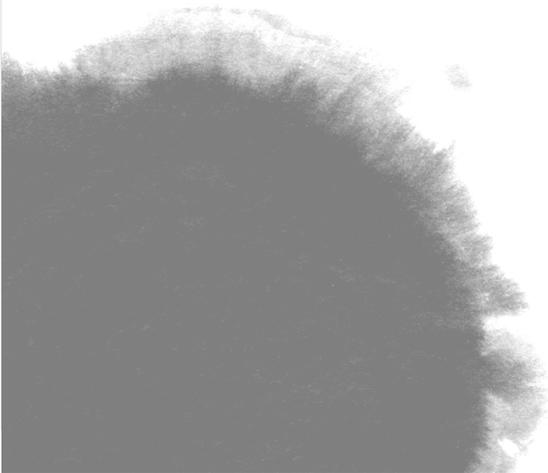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06

결론 및 정책 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 방안

1. 연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본 절에서는 동 연구가 수행한 양육비 추계 결과의 주요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양육비 추계 결과, 두당 비용 접근법, 지출 항목별 추계 방법, USDA 추계 방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 양육비용이 추계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커다란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자녀 연령과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 추계액의 추이와 소득 수준, 지역, 모의 학력 수준과 같은 사회 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비 추계액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발견되었다.

첫째, 한 달 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출 추계액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두 당 비용 접근법을 적용한 결과 한 자녀 가계 월 755,972원, 두 자녀 가계 월 658,607원, 세 자녀 가계 월 546,309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항목별 추계 방법을 이용한 결과는 두 당 접근법을 이용한 결과보다 약간 더 높은 자녀 양육비용이 추계 되었는데, 한 자녀 가계 월 950,677원, 두 자녀 가계 월 804,092원, 세 자녀 가계 월 635,974원으로 산출되었다.

지출 항목별 추계 방법을 적용한 경우 더 높은 양육비가 추계된 이유는 가계 지출에서 자녀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가계 지출의 모든 항목을 가구원 수로 나눈 두 당 비용 접근법 보다 자녀 특수 지출 항목에 대해서 자녀수로 나누어 적용한 지출 항목별 방법론이 더 높은 양육비용 추계액을 결과하였다고 판단된다. 가구원이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출한다고

가정하는 두 당 비용 접근법보다 성인에 한해 지출하는 항목을 제외한 후 가구원 공통으로 지출한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로 나누고 자녀에 특수하게 지출한다고 가정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자녀수로 나누는 지출 항목별 추계 방법론에 의해 추계한 자녀 양육비용이 보다 현실에 가까운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하였다고 판단된다.

둘째, 한 달 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 추계액의 연령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당 비용 접근법을 적용한 결과, 첫째아가 학령 전인 경우 월 635,202원, 초등학교 재학 월 628,744원, 중학교 재학 월 681,502원, 고등학교 재학 월 752,659원, 대학교 재학 734,286원으로 추계되었다. 지출 항목별 추계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첫째아가 학령 전인 경우 월 754,601원, 초등학교 재학 월 775,534원, 중학교 재학 월 836,821원, 고등학교 재학 월 965,027원, 대학교 재학 885,900원으로 추계되었다. USDA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는 막내 자녀 연령이 3~5세인 경우 월 552,642원, 6~8세 월 546,270원, 9~11세 월 662,392원, 12~14세 월 691,220원, 15~17세 월 774,118원, 18~24세 월 731,366원이 추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양육비용이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가장 높은 양육비를 지출하며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할 경우에는 이보다 양육비용이 약간 감소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가장 많은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시기로서 대학교 등록금과 입학금이 고등학교 공교육비용 보다 훨씬 높지만 고등학교 때 지출되는 사교육비와 합하면 오히려 대학교 재학 자녀 보다 양육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하겠다. 이는 USDA 분석 결과 자녀 교육에 대한 지출 비용과 지출 비중이 모두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시에 가장 높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셋째, 모든 추계 결과에서 자녀 양육비 지출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 1명을 추가적으로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 자녀 가정 이 두 자녀 가정에 비해 추가적으로 더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두 자녀 가

정이 한 자녀 가정에 비해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보다 적게 추계되어 있다. 두당 비용 접근법을 적용한 결과 두 자녀 가계가 한 자녀 가계에 비해 월 평균 561,243원을 자녀 양육비로 더 지출하는 반면, 세 자녀 가계는 두 자녀 가계에 비해 월 평균 321,713원을 더 지출하는 것을 추계되었다. 지출 항목별 추계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에서도 두 자녀 가계가 한 자녀 가계에 비해 월 평균 657,507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반해, 세 자녀 가계는 두 자녀 가계에 비해 월 평균 299,738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자녀 양육비 지출에서의 규모의 경제는 학령 전 자녀가 학령기 자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학령 전 자녀의 경우 자녀 양육에 있어서 공통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반면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자녀 당 개별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하겠다. 또한 규모의 경제는 소득이 낮은 집단 일수록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는 가계가 도시에 거주하는 가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대체적으로 모가 고졸인 경우가 대졸인 경우 보다 규모의 경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소득이 낮거나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혹은 모가 고등학교를 졸업 한 경우 자녀 양육에 있어 자녀 당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보다 자녀 양육에 공통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집단일수록 자녀 양육을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자녀 개별적으로 지출하기보다 상위 자녀가 사용하던 물품을 물려 쓰게 하거나 자녀 간에 공동으로 쓰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하겠다.

넷째, 소득 수준별로 자녀 양육비 지출 추계액을 비교한 결과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양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집단 간 차이를 보면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양육비 지출 차이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간의 양육비 지출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 집단 간의 양육비 추계액의 차이는 소득 수준을 3분위로 구분했을 경우와 중위 소득을 중심으로 세 그룹으로 구분했을 경우 모두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녀 양육비에 대한 지출

이 상대적으로 점점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하겠다.

한편, 일반적으로 볼 때 학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 계층 간 양육비 지출 추계액의 차이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가 고등학교 학령기에 접어든 경우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자녀 양육비 차이는 좁혀지는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비 차이는 오히려 더 격차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녀 양육비 지출 추계액의 소득 집단별 차이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의 차이에 의해 대부분 야기된 것으로 추측된다. USDA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자녀 양육비 지출 차이에 있어서 특히 자녀 교육비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비에 지출할 여력이 더 많은 높은 소득 계층이 자녀 교육에 더 많은 지출을 함으로써 소득 계층 간 자녀 양육비의 차이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는 자녀 고등학교 재학시 중산층도 고소득층에 못지않은 자녀 사교육비를 지출함으로써 두 집단 간의 양육비 지출 차이는 좁혀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자녀 사교육비에 많은 지출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더라도 자녀 사교육을 위해 많은 지출을 할 수 없으므로 중산층과 저소득층 간의 자녀 양육비 차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유추된다.

다섯째, 지역별 분석 결과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가계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가계보다 더 높은 자녀 양육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자녀 양육비 추계액의 차이는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도시와 농촌의 자녀 양육비 차이 역시 도시 지역의 경우 농촌 지역에 비해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학령이 증가하는 경우 도시와 농촌 간의 양육비 지출액에서도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USDA 방법론을 적용한 추계 결과에서도 도시와 농촌간의 자녀 양육비 추계액의 차이는 대부분 교육비 차이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식주와 관련

된 다른 양육비 지출 항목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도시 지역의 경우 학군이 좋은 지역이 몰려 있으며 사교육 학원이 많이 있어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현 실태를 반영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여섯째, 모의 학력 수준별로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한 결과 두당 비용 집근법과 지출 항목별 추계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 어머니가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보다 더 높은 자녀 양육비용 추계액을 보였다. 전반적인 추계 결과는 소득 수준별 분석과 지역별 분석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모의 학력 간 자녀 양육비 지출 추계액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저출산에 대응한 양육 지원 정책의 방향

본 연구의 자녀 양육비 지출액 추계 결과, 자녀 양육에 대한 지출이 적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러한 과도한 자녀 양육비 문제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자녀 양육비에 대한 과도한 지출은 일부 고소득층 뿐 만아니라 저소득층까지 가지고 있는 사회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녀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사회적인 투자 정책으로서 국가 정책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도록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적절한 양육비 보상 수준”에 대한 기준 설정 및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하다. 과거 자녀에 대한 양육이 개별 가정에 대한 책임으로 인식되던 것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이제 개인이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경우 그렇다면 적절한 수준의 자녀 양육비 지원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적절한 사회적 양육비 보상 수준이 “평균적인 사회적 조건 하에서 소요되는 자녀 양육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산층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 공제와 현금 지원을 가지고 완전하게 보상이 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 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외국에 비해 상당 수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로 야기된 높은 양육비를 정부가 개별 가정에 대해 얼마만큼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의 교육비에 대한 지원은 개별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녀에 대하여 막대한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사교육에 의해 야기된 것이므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특별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학생들 본인의 노력으로 누구나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즉,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보편적인 수준에서의 교육 여건을 마련해 주는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보편적인 수준에서의 교육 여건이란 누구나 노력하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서 출발선상에서의 동일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수준 이상의 교육을 개인이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선택으로서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 정책 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가족 지원 정책의 틀 안에서 보육 서비스 지원, 육아 휴직 지원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직접적인 현금 지원과 함께 현물 지원 그리고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을 지원해 주는 휴직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정책 간의 상호 보완적인 성격과 대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정책 조합을 통해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직접적 비용뿐만

아니라 기회비용 등 간접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도 도모되어야 한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상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행정 비용 등을 고려해 볼 때 현금 지원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며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현물 지원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또 현물 지원이나 현금 지원보다 개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개별 가정이 스스로 자녀를 돌보게끔 하는 정책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금 지원, 서비스 지원, 휴직 지원은 정부 정책이 어떠한 지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영아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육아 휴직 제도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자녀 출산 후 직접 자녀를 돌보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육아 휴직이 끝난 이후에는 보육 서비스 지원을 통해 여성들이 자녀를 보육 시설에 맡기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자녀 출생 후 영아 시기에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자녀 발달에 중요하며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시설 보육이 자녀 성장에 바람직함과 동시에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적합하다는 정책적인 방향성에 기반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칫 노동 시장의 이분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을 정책 수요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정책 수요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제도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 진정한 수요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노동 시장의 이원화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 낮은 여성의 경우 자녀 출산 이후 노동 시장에 복귀하지 않고 현금 지원인 양육 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소득이 높은 여성의 경우 대부분 노동 시장에 복귀함으로써 보육 서비스 지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셋째,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적인 가정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더불어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타겟 집단별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저출산 문제가 도래됨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보편적인 지원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자녀 양육 지원에 있어 보편적인 지원을 통해 모든 아동이 출발선상에서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취약 계층 즉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집단에 대한 계층별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자녀 양육 지원에 있어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와 맥락을 함께 한다. 즉,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가정에 비해 자녀 양육으로 인해 부담을 갖는 부분에 대하여 사회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 아동의 빈곤을 감소하는데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과 향후 과제를 제안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양한 추계 방법을 통해 추계되고 있으며 각 연구가 어떠한 자료를 이용하여 어떠한 추계 방법을 적용하였는가에 따라 다양한 양육비용 추계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이외 다른 연구에서 양육비용을 추계한 결과는 본 연구가 제시한 비용과 다를 수 있다. 자녀 양육비용 추계액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각 연구가 얼마나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함에 있어 한계점을 극복하고 “진실”에 가까운 양육비용을 추계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비용 추계의 한계를 보다 잘 극복하고 발전된 추계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현실을 잘 반영하는 자녀 양육비용 추계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게 지출되는 직접 비용만을 추계하였다. 실제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는 직접 비용 이외 자녀를 양육함에 따라 포기해야만 하는 기회비용의 규모가 상당하다. 실제로 이러한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에 대한 규모의 추정 없이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간접 비용은 자녀 양육에 따른 시간을 비용의 개념으로 환산하는 것으로서 직접 비용 추계 못지않게 어려

운 과업이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녀 양육에 따른 간접비용 추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보다 유용한 정책 자료가 마련되는 것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승권 외 (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숙재·김성희 (1996).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가정의 총투자량과 영향요인: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4(5).
- 박세경 (2006). 저출산시대의 자녀 양육 부담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11.
- 신윤정 (2007). 외국의 아동 양육 지출 추계 현황과 시사점 - 미국과 호주 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7(2).
- 윤희은 (1996). **자녀양육비 분석을 중심으로 한 가정내 성인 대 자녀의 지출배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성림 (2007). 우리나라 가계의 자녀 양육비용과 추정방법. **대한가정학회지**, 45(2).
- 정순희 (1996). 가족구성원간 소득분배: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측정에 미치는 효과. **소비자학연구**, 7(2).
- 차경욱 (2005).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 통계청 (2010). 2010년 1/4분기 가계 동향.
- 허경욱 (1997). 가계의 자녀양육에의 지출액 측정-출생부터 18세까지의 양육비. **소비자학연구**, 8(2)
- 허경욱 (2007). 다양한 측정방법을 활용한 자녀 양육비 측정 및 새로운 측정방법 개발. **소비자학연구**, 18(3).

- Albouy V., Roth N. (2003). *Les aides publiques en direction des familles. Ampleur et incidence sur les niveaux de vie*, Rapport pour le Haut Conseil de la Population et de la Famill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Apps P., Rees R. (2002). "Household consumption, full consumption and the costs of children" *Labour Economics*, 8:621-648.
- Bauer J., Rettig K. (2002). "The cost of raising children" *University of Minnesota*, <<http://www.extension.umn.edu/distribution/businessmanagement/DF5899.html>>
- Becker G. (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and NBER.
- Betson D. M. (1990). "Alternative Estimates of the Cost of Children from the 1980~86 Consumer Expenditure Survey", unpublished manuscript.
- Blanchet Didier, Ekert-JafféOlivia, (1994). "The Demographic Impact of Family Benefits: Evidence from a Micro-Model and from Macro-Data", in Ermisch J., Ogawa N. (eds), *The Family, the Market and the State in Ageing Societies*, Clarendon Press, Oxford, pp.79-104.
- Blossfeld H.P, Klijzing E., Mills M., Kurz K. (2004).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Youth in Society*, Routledge, London.
- Castles F. (2003).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friendly public policy in 21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 pp.209-227.

- Cette G., Dromel N., Méa D., (2005). *Opportunity costs of having a child, financial constraints and fertility*, note d'étude et de recherche, Paris Banque de France.
- Currie J., Ghavari F. (2008). "Tansfers in-cash and in-kind: Theory meets data",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2), pp.333-83.
- D'Addio-Dervaux A., Mira d'Ercole M. (2005). *"Fertility trends and the impact of policies"*,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OECD, Paris.
- De Héau J., Maron L., Meulders D., O'Dorchai S. (2007). "Travail et Maternité en Europe: Conditions de Travail et Politiques Publiques", *Brussels Economic Review*, vol. 50(1).
- Del Boca D., Pasqua S., Pronzato Ch. (2007). *Motherhood and Work: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ies*. Mimeo.
- Di Prete T., Engelhardt H., Morgan P., Pacalova H. (2002). *"Do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the costs of children influence fertility behavior?"*, Discussion Paper 355, DIW, Berlin.
- Dublin L. I. and Lotka A. J. (1946). *"The Money Value of a Man,"* New York City, NY: Ronald Press.
- Ekert-JafféO., Arbonville D., Wittwer J. (1995). "Ce que coûtent les jeunes de 18 à 25 ans", *Dossiers et Recherches*, 47, INED.
- Ekert-JafféO. (1998). *"Le coût de l'enfant: des résultats qui varient selon les types de familles et les hypothèses formulés"* in Dossiers Solidarité Santé Politiques familiales et redistribution, 69-80.
- Ellingsæter A-L., (2007). *"Nordic leave policies for parents: a recipe for high employment/high fertility"*, University of Oslo.

- Espenshade, T. J. (1984). *Investing in children - New estimates of parental expenditures*,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Esping-Andersen, G (2002). "A Child-Centred Social Investment Strategy", in G. Esping-Andersen et al. (ed.)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6-67.
- Esping-Andersen, G. (2008). *Trois leçons sur l'Etat Providence*, Le Seuil.
- Gauthier A., Hatzius J., (1997).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etr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1, pp.295-306.
- Gauthier A., (2007), "The impact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Population Research Policy Review*, 26(3), pp.323-46.
- Gilbert N. (ed.), (2001). *Targeting Social Benefits: International Perspective and Trends*,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vol., 1.
- Glaude M., Moutardier M. (1991). "Une évaluation du coût direct de l'enfant 1979 à 1989", *Economie et Statistique*, 248.
- Goodin R., Le Grand J. (1987). *Not only the poor. The middle Class and the Welfare State*, London, Allen & Unwin.
- Gornick J., Meyers M., Ross K. (1997). "Supporting the Employment of Mothers: Policy Variations Across Fourteen Welfare Stat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7/1, pp.45-70.
- Hank K, Kreyenfeld M., (2002). *A multilevel analysis of child care and the transition to motherhood in West Germany*, Discussion Paper 290, DIW, Berlin.
- Harding A. and R. Percival (1999). *The Private Costs of Children in 1993-1994*, National Centers for Social and Economic Modeling, Reprinted by Family Matters no.54 (spring/summer).

- Heckman J., Masterov (2007). "The productivity argument for investing in young children", *NBER Working Paper series, n°1301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Hoem J. M., (2005). "Why does Sweden has such high fertility?" *Demographic Research, 13(22)*, pp.559-72.
- Hourriez J.M., Olier L. (1997). "Niveau de vie et taille des ménages : estimation d'une échelle d'équivalence", *Economie et Statistique, 308-309-310*: 65-94.
- Hu, P. S. and Reuscher T. R. (2004). "*Summary of Travel Trends: 2001 National Household Travel Survey*,"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2001). "*Review of Statewide Uniform Child Support Guideline*".
- Korpi W., Palme J.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 Kravdal O., (1996). "How the local supply of day-care centres influences Fertility in Norway: a parity-specific approach"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n°15*:201-218.
- Laroque G., Salanié B., (2008). "*Does Fertility Respond to Financial Incentives?*" CESifo Working Paper Series n° 2339.
- Lazear, E. P and Michael R. T., (1988). *Allocation of Income within the Househo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 Minez S., Roth N. (2007). "Transferts monétaires et compensation du coût de l'Etat", *Informations Sociales, 137*, pp.68-79.

- Lewin (1990). *Estimates of Expenditures on Children and Child Support Guidelines*, Lewin/ICF.
- Lino, M. (1995). Housing, Transportation, and Miscellaneous Expenditures on Children: A Comparison of Methodologies. *Family Economics Review*, 8(1), pp.2-12.
- Lino, M. (2004). Expenditures on Children by Families, 2003. *Family Economics and Nutrition Review*, 16(1), pp.31-38.
- Lutz W., Skirbekk V. (2005). "Policies addressing the tempo effect in low fertility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1(4), pp.699-730.
- Math A. (2003). "Cibler les prestations sociales et familiales en fonction des ressources. Eléments de comparaison européenne", *Revue de l'IRES*, 41(1), pp.3-57.
- McCaleb, T. S., Macpherson, D. A., Norrbin, S. C., MacDonald, L. C., Feng, L. (2004). "Review and Update of Florida's Child Support Guidelines," Report to the Florida Legislature.
- McCaleb, T. S., Macpherson, D. A., Norrbin, S. C. (2008). "Review and Update of Florida's Child Support Guidelines," Report to the Florida Legislature.
- McDonald, J. F. and Moffitt R. A. (1980). "The use of Tobit analysi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2(2).
- Nelson V. (2007). "L'universalisme ou le ciblage: la vulnérabilité de l'assurance sociale et de la protection du revenu minimum sous condition de ressources dans 18 pays", 1990-2002, *Revue Internationale de Sécurité Sociale*, 37.
- OECD (2002).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 1: Australia, Denmark and the Netherlands*. Paris: OECD.

- OECD (2003).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 2: Austria, Ireland and Japan*. Paris: OECD.
- OECD (2004).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 3: New Zealand, Portugal and Switzerland*. Paris: OECD.
- OECD (2007). *Béé et Employeurs : Comment réconcilier Travail et Vie de Famille, une Synthèse des Résultats*. Paris, OCDE. PailhéA., Solaz A.
- OECD (2009). "The costs of raising children and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to support parenthood in European countries: a Literature Review".
- Olson L. (1983). *Cost of Children*, Lexington: D.C, Heath.
- Percival, R. and Ann Harding (October, 2002) *The Cost of Children in Australia Today*, AMP · NATSEM Income and Wealth Report, issue 3,
- Prais S., Houthakker (1955). *The Analysis of family budgets, with an application to two British Surveys conducted in 1937-39 and their related resul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thbarth, Erwin, (1943). "Note on a Method of Determining Equivalent Income for Families of Different Composition", App. 4 in *War-Time Pattern of Saving and Spending*, by Charles Ma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leeboos J.(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responses*, OECD :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 15.
- Thévenon, O., (2008a): "Les politiques familiales des pays développés : des modèles contrastés ", *Population et société* n° 448 : 1-4.

Thévenon, O. (2008b): *Labou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with Children: Disparities and Developments in Europe since the 1990s*. EconomiX Working Paper, 2008-01, University of Paris X Nanterre -La Déense.

Turchi, B. A. (1983). *Estimating the Cost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USDA (2009). *Expenditures on Children by Families, 2008*.

Valenzuela, Rebecca (1999). *Cost of Children in Australian Households*, Melbourne Institute, Reprinted from Family Matters no.53(Winter).

Van Imhoff E., Odink J. (1994). "Household equivalence scales in the Netherlands: comparing different methods of measurement" in *Standards of Living and Families: Observation and Analysis*, Congress & Colloquia, 14, Paris John Libbey and INED: 207-227.

Witthford P., Adema W. (2007). *What Works Best in Reducing Child Poverty: A Benefit or Work Strategy?*,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51, Paris.

Wittwer J. (1993). "Le coût de l'enfant en termes relatifs est fonction croissante du budget des ménages", *Economie et Prévision*, n°110-111 : 183-95.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홍보팀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303)

도서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신간 안내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Center for Health and Social Research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10-0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상영	5,000
연구 2010-02	회귀난치성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방안	박실비아	5,000
연구 2010-03	해외의료시장 개척의 투자효과 분석과 중장기 발전 전략	조재국	미정
연구 2010-04	식품안전분야의 사회적 위험 요인 중장기 관리전략 수립	정가혜	6,000
연구 2010-05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김혜련	7,000
연구 2010-06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곽노성	7,000
연구 2010-07	식품위해물질 모니터링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김정신	5,000
연구 2010-08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신영석	7,000
연구 2010-09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신현웅	미정
연구 2010-10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환경 분석을 위한 주요 해외금융시장 비교 연구	원종욱	5,000
연구 2010-11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이태진	5,000
연구 2010-12	한국 제3세대 육상방안에 대한 연구	노대명	8,000
연구 2010-13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김태완	7,000
연구 2010-14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 -기초보장제도 시행 10년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
연구 2010-15	지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노대명	7,000
연구 2010-16	2010년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8,000
연구 2010-17	OECD 국가 빈곤정책 동향분석: 복지자본주의 체제 변화에 따른 공공부조제도의 조응성 분석	여유진	7,000
연구 2010-18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최현수	8,000
연구 2010-19	이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김미숙	6,000
연구 2010-20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최자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상용	8,000
연구 2010-21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강혜규	미정
연구 2010-22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김성희	8,000
연구 2010-23	민간 복지지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박세경	7,000
연구 2010-24	자살의 원인과 대책연구: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강은정	5,000
연구 2010-25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개발	이윤경	7,000
연구 2010-26	보건복지통계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10-27	보건복지통계 생산 표준화 방안 연구: 메타정보관리를 중심으로	손창균	6,000
연구 2010-28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0	장영석	10,000
연구 2010-29	지역별 보건통계 생산방안	도세록	6,000
연구 2010-30-1	저출산 원인과 과급효과 및 정책방안	이삼식	미정
연구 2010-30-2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수준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이삼식	5,000
연구 2010-30-3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변용찬	5,000
연구 2010-30-4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김나영	6,000
연구 2010-30-5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기차와 출산율 관계 연구	김은정	5,000
연구 2010-30-6	저출산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남상호	6,000
연구 2010-30-7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은지(외부)	6,000
연구 2010-30-8	차여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신윤정	6,000
연구 2010-30-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개편방안	윤석명	7,000
연구 2010-30-10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장영석	6,000
연구 2010-30-11	입양실태와 정책방안	김유경	10,000
연구 2010-30-12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최정수	6,000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10-30-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황나미	6,000
연구 2010-30-14	저출산·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염지혜	5,000
연구 2010-30-15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이삼식	5,000
연구 2010-30-16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10-30-17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정경희	6,000
연구 2010-30-18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정경희	10,000
연구 2010-30-19	에비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
연구 2010-30-20	신노년층(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 분석과 정책과제	선우덕	5,000
연구 2010-30-21	신노년층의 소비행태 특성과 고령친화산업적 함의	김수봉	미정
연구 2010-31-1	2010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8,000
연구 2010-31-2	2010 보건복지제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9,000
연구 2010-31-3	정부의 사회복지제정 DB구축에 관한 연구(4차년도): DB의 활용성 측면을 중심으로	고경환	7,000
연구 2010-31-4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최성은	6,000
연구 2010-31-5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고경환	6,000
연구 2010-31-6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7,000
연구 2010-31-7	건강보험 재정평가	신영석	5,000
연구 2010-32-1-1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1권	김동진	8,000
연구 2010-32-1-2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2권	김동진	11,000
연구 2010-32-2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서미경	5,000
연구 2010-32-3	건강마을의 건강영향평가	최은진	5,000
연구 2010-33	보건의료지원태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3년차)	오영호	9,000
연구 2010-34	보건사회 기구변화 모니터링센터 운영 (1년차)	신호성	14,000
연구 2010-35	취약위기와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1년차)	김승권	미정
연구 2010-36	아시아 복지국가 자료 및 전략센터 구축 (1년차):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홍석표	8,000
연구 2010-37-1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강신욱	14,000
연구 2010-37-2	2009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김미곤	6,000
연구 2010-38-1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Ⅱ)	정영호	11,000
연구 2010-38-2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정영호	7,000
연구 2010-39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년차)	정영철	7,000
연구 2010-40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년차)	이연희	5,000
연구 2009-01	의료서비스 질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적 의료전달 시스템 구축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9-02	고가의료장비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오영호	8,000
연구 2009-03	신의료기술의 패던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체제의 발전방향 -의약품 허가제도와 약가제도를 중심으로-	박살비아	6,000
연구 2009-04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국민의료비 분석 (1)	정영호	6,000
연구 2009-05	미충족 의료수준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허순임	5,000
연구 2009-06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취약점 중점 관리방안 구축	정기혜	7,000
연구 2009-07	부문간 협력을 통한 비만의 예방관리체계의 구축 방안 -비만의 역학적 특성 분석과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부문간 협력체계의 탐색	김혜련	8,000
연구 2009-08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최은진	7,000
연구 2009-0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윤석명	7,000
연구 2009-10	글로벌 금융위기상행하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	원종욱	8,000
연구 2009-11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 중심으로	신현웅	6,000
연구 2009-12	A study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health security system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홍석표	5,000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09-13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노대명	7,000
연구 2009-14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	여유진	8,000
연구 2009-15	저소득층 금융지원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김태완	6,000
연구 2009-16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	김승권	13,000
연구 2009-17	이동청소년복지 수요에 기반한 복지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 II: 지역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숙	8,000
연구 2009-1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경제위기 이후 가족생애주기별 위기 유형을 중심으로	김유경	8,000
연구 2009-19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연계 동향 및 정책과제	윤상용	8,000
연구 2009-20	사회지원과 민간 복지지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박세경	6,000
연구 2009-21	사회복지부문별 정보화현황 및 정책적용방안	정영철	6,000
연구 2009-22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일상생활기능의 자립향상을 중심으로	선우덕	7,000
연구 2009-23	노인의 생활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 평가	정경희	6,000
연구 2009-24	보건복지가족부 웹사이트 통합 연계 및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09-25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09	장영식	9,000
연구 2009-26-1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법제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이태진	10,000
연구 2009-26-2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9-26-3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노대명	8,000
연구 2009-26-4	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5	저소득층의 자산 실태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6	2009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9-27-1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	홍석표	6,000
연구 2009-28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정영호	7,000
연구 2009-29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9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오영호	6,000
연구 2009-30-1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권 (총괄)	강은정	10,000
연구 2009-30-2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권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강은정	11,000
연구 2009-31-1	2009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9,000
연구 2009-3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7,000
연구 2009-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3차년도): 중앙재정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2009-31-4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2009-31-5	지활사업의 평가 연구: 정책설계와 정책효과 그리고 쟁점들	고경환	7,000
연구 2009-32-1	200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손창균	14,000
연구 2009-32-2	200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여유진	6,000
연구 2009-33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14,000
연구 2009-34-1	다문화가족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삼식	5,000
연구 2009-34-2	저출산에 대응한 육아 지원 인프라의 양적·질적 적정화 방안	신윤정	6,000
연구 2009-34-3	장기요양등급의자 관리를 위한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오영희	6,000
연구 2009-34-4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이소정	6,000
연구 2009-34-5	고령친화상품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수봉	7,000
연구 2009-35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연희	6,000
연구 2009-36	2009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영철	7,000